

제356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임시회)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8년2월12일(월)

장 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4차 산업혁명 대비 신산업 창출과 산업혁신 지원법안
2.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6.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8.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2.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3.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4.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5.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안
2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0.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1.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32.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3.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3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4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4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4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4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4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5.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6.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47.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48.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4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50.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2.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3.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54.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5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5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5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5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6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6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
6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6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6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6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67.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68.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9.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70.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7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72.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7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7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78.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7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8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81.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82.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83.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8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5.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86.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87.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88.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89.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추진계획 보고
90.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추진계획 보고
91. 업무보고
 - 가. 산업통상자원부
 - 나. 중소기업부
 - 다. 특허청

상정된 안건

1. 4차 산업혁명 대비 신산업 창출과 산업혁신 지원법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김경협·김정우·박정·이재정·권철승·김종훈·박재호·박범계·유동수·이훈 의원 발의) 9
2.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박찬대·박재호·김철민·김민기·김해영·박완주·박영선·이찬열·전해철·인재근·김병기·신동근·소병훈 의원 발의) 9
3.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조배숙·권은희·김광수·김종희·박준영·신용현·오세정·유성엽·이찬열·장정숙·천정배·최경환(국)·황주홍 의원 발의) 9
4.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9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위성곤·이찬열·김관영·김수민·김경진·박지원·이동섭·정동영·유성엽 의원 발의) 9
6.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유성엽·조배숙·조정식·정동영·이동섭·김관영·이찬열·최도자·김동철·김종희 의원 발의) 9
7.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철승 의원 대표발의)(권철승·박정·홍의락·윤호중·손혜원·박광온·유동수·이원욱·어기구·김현권·박재호·황희·김병관 의원 발의) 9
8.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이완영·나경원·민정욱·김종희·주호영·함진규·김규환·유동수·조훈현·박맹우 의원 발의) ... 9
9.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김병욱·안규백·안호영·전혜숙·이학영·윤호중·김영호·이훈·김경협·유은혜·홍익표·박영선 의원 발의) 9
10.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윤한홍·김승희·이명수·강석진·윤영일·김종석·문진국·함진규·홍철호·김규환 의원 발의) 9
11.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강병원·서형수·신창현·이용득·이정미·하태경·김철민·박주민·이훈·임종성 의원 발의) 9
12.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김기선·이현승·김종석·김성

원 · 엄용수 · 곽대훈 · 백승주 · 경대수 · 정갑윤 · 이은재 · 김한표 의원 발의)	9
13.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 · 윤재옥 · 윤상현 · 정유섭 · 안상수 · 서칭원 · 이은권 · 이학재 · 나경원 · 김명연 · 원유철 의원 발의)	9
14.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 · 김철민 · 김정우 · 신창현 · 추미애 · 윤관석 · 박정 · 송옥주 · 전재수 · 이동섭 의원 발의)	9
15.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 위성곤 · 이찬열 · 김관영 · 김수민 · 김경진 · 박지원 · 이동섭 · 정동영 · 유성엽 의원 발의)	9
1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 · 이양수 · 엄용수 · 신보라 · 장석춘 · 이채익 · 이장우 · 김성원 · 권석창 · 김명연 의원 발의)	9
17.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 · 박찬대 · 김정우 · 김철민 · 김민기 · 김해영 · 박완주 · 박영선 · 이찬열 · 전해철 · 인재근 · 김병기 · 신동근 · 소병훈 의원 발의)	9
1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 · 박정 · 김철민 · 김영호 · 원혜영 · 위성곤 · 김경수 · 어기구 · 문희상 · 유승희 · 정유섭 의원 발의)	9
1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주광덕 · 강석진 · 문진국 · 김승희 · 성일중 · 안상수 · 윤상직 · 윤재옥 · 유재중 · 박순자 · 이명수 · 강석호 의원 발의)	10
2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0
21.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하태경 · 정병국 · 정운천 · 박인숙 · 홍문표 · 김용태 · 오신환 · 이혜훈 · 김재경 · 유성엽 · 주호영 · 유승민 의원 발의)	10
2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 위성곤 · 이찬열 · 김관영 · 김수민 · 김경진 · 박지원 · 이동섭 · 정동영 · 유성엽 의원 발의)	10
23. 송 · 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 · 김상훈 · 김성원 · 김정재 · 민경욱 · 백승주 · 윤상현 · 윤영석 · 이양수 · 임이자 의원 발의)	10
2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 · 송기석 · 김중로 · 장정숙 · 김성식 · 김삼화 · 신용현 · 오세정 · 박준영 · 김수민 · 채이배 의원 발의)	10
2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 · 박재호 · 이용득 · 최인호 · 추혜선 · 이정미 · 이원욱 · 김해영 · 김수민 · 윤종오 의원 발의)	10
2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어기구 · 송옥주 · 문희상 · 송기현 · 권칠승 · 이훈 · 변재일 · 오영훈 · 안민석 · 윤관석 · 유동수 · 박재호 · 조승래 · 박영선 · 박완주 · 김병욱 · 안호영 · 김철민 · 박정 · 원혜영 · 강창일 · 노웅래 · 송영길 의원 발의)	10
2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조배숙 · 김광수 · 김종희 · 박준영 · 손금주 · 신용현 · 유성엽 · 이용호 · 이찬열 · 정동영 의원 발의)	10
2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 · 김경진 · 김해영 · 박광온 · 이동섭 · 김종희 · 황주홍 · 주승용 · 전해숙 · 위성곤 의원 발의)	10
2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김정훈 · 윤한홍 · 이현승 · 박맹우 · 박완수 · 유재중 · 김상훈 · 김규환 · 신상진 · 박명재 의원 발의)	10
30.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 · 오세정 · 김광수 · 채이배 · 박주민 · 이찬열 · 김관영 · 송기석 · 유동수 · 신용현 · 김종희 의원 발의)	10
31.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 · 이훈 · 권칠승 · 유동수 · 김경수 · 윤한홍 · 김종훈 · 홍의락 · 김수민 · 신경민 의원 발의)	10
32.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 위성곤 · 이찬열 · 김관영 · 김수민 · 김경진 · 박지원 · 이동섭 · 정동영 · 유성엽 의원	

- 발의) 10
33.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인재근·전해철·기동민·원혜영·신창현·이찬열·윤관석·김해영·김종민·신경민·김철민·소병훈·김정우 의원 발의) 10
3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유은혜·김영호·박남춘·최인호·정춘숙·정동영·위성곤·안호영·윤관석·신창현 의원 발의) 10
3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박재호·유동수·홍의락·이재정·어기구·이학영·박정·송기현·최인호·박홍근·김경수 의원 발의) 10
3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송기현·유동수·신창현·노웅래·한정애·이철규·심기준·박재호·전혜숙·김병관·김성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10180) 10
3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주광덕·강석진·심재철·이은재·송희경·김순례·장제원·신상진·이완영·이만희 의원 발의) 10
3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박재호·이용득·최인호·추혜선·이정미·김해영·이훈·이원욱·김수민·윤종오 의원 발의) 11
3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이완영·강석진·이은권·함진규·곽상도·김용태·서청원·이정현·김승희·정우택 의원 발의) 11
4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위성곤·이찬열·김관영·김수민·김경진·박지원·이동섭·정동영·유성엽 의원 발의) 11
4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송기현·심기준·박정·김민기·권칠승·박주민·전재수·박재호·김정우·임종성·신창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11339) 11
4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박맹우·최연혜·윤영석·여상규·정갑윤·김한표·강길부·주호영·신보라 의원 발의) 11
4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정병국·하태경·정운천·박인숙·홍문표·김용태·오신환·이혜훈·김재경·유성엽·주호영·유승민 의원 발의) 11
4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오세정·채이배·박주민·이찬열·김관영·송기석·유동수·김경진·신용현·김종희 의원 발의) 11
45.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신경민·박정·손금주·김영호·전해철·박재호·서형수·정성호·윤관석·김성수·이해찬·박찬대·신창현·김정우·민홍철 의원 발의) 11
46.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김기선·이현승·김종석·김성원·엄용수·곽대훈·백승주·경대수·정갑윤·이은재·김한표 의원 발의) 11
47.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김기선·이현승·김종석·김성원·엄용수·곽대훈·백승주·경대수·정갑윤·이은재·김한표 의원 발의) 11
48.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김기선·이현승·김종석·김성원·엄용수·곽대훈·백승주·경대수·정갑윤·이은재·김한표 의원 발의) 11
4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김기선·이현승·김종석·김성원·엄용수·곽대훈·백승주·경대수·정갑윤·이은재·김한표 의원 발의) 11
50.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김해영·권칠승·홍익표·송기현·박정·유동수·어기구·이찬열·전재수·김병관·최운열·홍의락·노웅래 의원 발의) 11
5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1
52.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김상훈·김성원·김정재·민경욱·백승주·윤상현·윤영석·이양수·임이자·정양석 의원 발의) 11

- 53.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 · 이종걸 · 주승용 · 황주홍 · 박주현 · 최도자 · 박주선 · 이동섭 · 민병두 · 박준영 의원 발의) 11
- 54.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 · 박주현 · 이동섭 · 신용현 · 김종희 · 이용주 · 윤영일 · 오세정 · 김삼화 · 박선숙 · 최운열 · 박찬대 · 이학영 · 김성원 의원 발의) 11
- 5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권은희 · 최도자 · 장정숙 · 김동철 · 정동영 · 오세정 · 김삼화 · 김수민 · 이찬열 · 채이배 의원 발의) 11
- 5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 · 김정우 · 백혜련 · 서영교 · 설훈 · 이원욱 · 이종걸 · 인재근 · 전해숙 · 한정애 의원 발의) 11
- 5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 · 박찬대 · 김정우 · 박재호 · 김철민 · 김민기 · 김해영 · 박완주 · 박영선 · 이찬열 · 전해철 · 인재근 · 김병기 · 신동근 · 소병훈 의원 발의) 11
- 5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박맹우 · 조경태 · 김승희 · 박찬우 · 윤영석 · 김성찬 · 이채익 · 박완수 · 성일종 · 김한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993) 12
- 5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박맹우 · 조경태 · 김승희 · 박찬우 · 윤영석 · 김성찬 · 이채익 · 박완수 · 성일종 · 김한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11011) 12
- 6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2
- 6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 · 전해숙 · 백혜련 · 김영호 · 윤관석 · 조정식 · 김민기 · 소병훈 · 김정우 · 인재근 · 이인영 · 한정애 의원 발의) 12
- 62.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정유섭 · 김성원 · 곽대훈 · 최연혜 · 김기선 · 이채익 · 이양수 · 김도읍 · 장석춘 · 신보라 · 강석호 · 정갑윤 · 엄용수 의원 발의) 12
- 6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 · 신창현 · 이찬열 · 윤영일 · 황주홍 · 홍문표 · 김현권 · 어기구 · 황영철 · 김철민 의원 발의) 12
- 6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정유섭 · 정갑윤 · 송희경 · 김성태 · 金成泰 · 안상수 · 정운천 · 송기현 · 김규환 · 최연혜 · 박주민 의원 발의) 12
- 6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 · 이채익 · 이양수 · 김성원 · 정유섭 · 이만희 · 전희경 · 이완영 · 문진국 · 함진규 · 원유철 · 이종명 의원 발의) 12
- 6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어기구 · 김한정 · 김경수 · 위성곤 · 신창현 · 김철민 · 김현권 · 권칠승 · 박정 · 송옥주 · 문희상 · 박영선 · 백재현 · 이훈 · 권미혁 · 조승래 · 노웅래 · 기동민 · 안민석 · 서영교 · 이용득 · 송기현 · 박광온 · 원혜영 의원 발의) 12
- 67.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 · 장석춘 · 김성원 · 엄용수 · 박맹우 · 박대출 · 안상수 · 권석창 · 이종명 · 이양수 의원 발의) 12
- 68.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 · 권칠승 · 유동수 · 이채익 · 김경수 · 윤한홍 · 김중훈 · 홍의락 · 김기선 · 김수민 · 신경민 · 홍익표 의원 발의) 12
- 69.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 · 박정 · 홍의락 · 윤호중 · 손혜원 · 박광온 · 유동수 · 이원욱 · 어기구 · 김현권 · 박재호 · 황희 · 김병관 의원 발의) 12
- 70.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 · 이개호 · 윤영일 · 정인화 · 이찬열 · 위성곤 · 신창현 · 황희 · 김현권 · 안호영 의원 발의) 12
- 7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 · 신창현 · 김병관 · 이원욱 · 서형수 · 정성호 · 안규백 · 윤관석 · 전재수 · 오세세 · 김민기 · 황희 · 박정 · 심기준 의원 발의) 12
- 72.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 · 이개호 · 윤영일 · 정

인화 · 이찬열 · 위성곤 · 신창현 · 황희 · 김현권 · 안호영 의원 발의)	12
7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 · 전해숙 · 이원욱 · 백혜련 · 이종걸 · 서영교 · 인재근 · 김정우 · 설훈 · 황희 의원 발의)	12
7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 · 장석춘 · 김성원 · 엄용수 · 박맹우 · 박대출 · 안상수 · 권석창 · 이종명 · 김태흠 · 이양수 의원 발의)	12
7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2
7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2
7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 · 김병욱 · 안규백 · 전해숙 · 이학영 · 윤호중 · 김영호 · 이훈 · 김경협 · 박영선 · 김민기 · 유은혜 의원 발의)	12
78.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 · 이현승 · 원유철 · 김현아 · 이종배 · 박명재 · 이철우 · 이양수 · 오신환 · 신보라 의원 발의)	13
7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 김수민 · 신용현 · 조배숙 · 정동영 · 이동섭 · 김관영 · 이찬열 · 최도자 · 김동철 · 손금주 · 박선숙 · 남인순 의원 발의)	13
8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3
81.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 · 손혜원 · 안규백 · 이원욱 · 전재수 · 김병기 · 신창현 · 표창원 · 김민기 · 유동수 · 김성수 · 민홍철 · 오제세 · 김정우 · 윤관석 의원 발의)	13
82.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 · 권칠승 · 이원욱 · 송기현 · 박재호 · 박정 · 김병욱 · 홍의락 · 김영진 · 황희 의원 발의)	13
83.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박찬우 · 박덕흠 · 이명수 · 박명재 · 김태흠 · 송석준 · 이은권 · 정태욱 · 정용기 · 원유철 의원 발의)	13
8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 · 유동수 · 박정 · 김현권 · 유은혜 · 권칠승 · 최인호 · 이학영 · 진선미 · 조배숙 · 박재호 · 김진표 · 제윤경 · 이재정 의원 발의)	13
85.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 · 이동섭 · 문희상 · 최운열 · 강병원 · 신창현 · 이원욱 · 조승래 · 정재호 · 소병훈 의원 발의)	13
86.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 · 손혜원 · 안규백 · 이원욱 · 전재수 · 김병기 · 신창현 · 표창원 · 김민기 · 유동수 · 김성수 · 민홍철 · 오제세 · 김정우 · 윤관석 의원 발의)	13
87.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 · 권칠승 · 이원욱 · 송기현 · 박재호 · 박정 · 김병욱 · 홍의락 · 김영진 · 황희 의원 발의)	13
88.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 · 손혜원 · 안규백 · 이원욱 · 전재수 · 김병기 · 신창현 · 표창원 · 김민기 · 유동수 · 김성수 · 민홍철 · 오제세 · 김정우 · 윤관석 의원 발의)	13
89. 한 · 중 FTA 서비스 · 투자 후속협상 추진계획 보고	23
90. 한 · 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추진계획 보고	23
91. 업무보고	23
가. 산업통상자원부	
나. 중소기업부	
다. 특허청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장병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2018년도 첫 회의입니다. 지난 1년간 여러 위원님들의 위원회 활동 덕분에 전안법 등 국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국회가 대내외적으로 7대 지방선거와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자칫 위원회 본연의 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입법 및 현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는 산업·무역·통상·에너지 등 실물경제를 총괄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61개의 소관기관을 두고 있으며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의 핵심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현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어려운 정치 여건이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다른 위원회의 문제로 우리 상임위원회의 정활동이 제약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대형 화재사건이 빈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도 피해가 커지는 게 방화벽이 작동을 안 해서 이렇게 피해가 커졌다고 우리가 많은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 운영도 어떤 특정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다면 방화벽이 작동되어서 그 상임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풀어야지 국회 전체가 이렇게 공전되거나 하는 문제는 앞으로 우리 국회 운영에 있어서 개선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저 또한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무술년의 좋은 기운과 함께 우리 산업과 중소기업 또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로 새로 보임하신 위원님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3일 자로 민주당의 김병관 위원님께서 사임하시고 백재현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로 보임이 되셨습니다. 백재현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경기 광명갑 백재현 위원입니다.

제가 1월 3일 자로 김병관 위원님과 사·보임이 돼서 제가 오늘 산자위에 왔습니다. 지난 19대 후반기에 산자위원회 활동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민주당의 정책위 의장이라는 직책을 맡아서 충분히 열심히 못 했던 것을 지금에 와서 열심히 하라고 다시 보낸 것 같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고요. 또 우리 산자위원회는

지난 하반기에 있었던 예결위에 많은 위원들이 있어서 생소하지 않습니다. 별로 낯설지 않고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산자위가 하고자 하는 일들 함께 만들어가면서 좋은 의견 잘 나눠서 여러분들 의견 청취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 산자위가 해야 될 역할을 하는 데 최선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수)

○**위원장 장병완** 국회에서 신망이 높으신 백재현 위원님이 또 우리 위원회에 오셔서 위원회의 역량이 훨씬 더 강화가 됐습니다. 환영합니다.

다음으로 1월 29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호진 입법조사관입니다.

다음은 이해원 입법조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새로 보임된 직원들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연말 연초에 정부에서의 인사로 새로 임명된 공공기관장 중에서 오늘 회의에 출석한 한국가스공사 사장과 강원랜드 사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기관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가스공사 정승일 사장입니다.

강원랜드의 문태곤 사장입니다.

(소속기관장 인사)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찬열 위원** 위원장님, 우리 국민의당의 간사가 바뀌었습니다. 오늘 하루 간사, 김수민 위원님 간사님인데 왜 소개를 안 해 주십니까?

○**위원장 장병완** 그동안 손금주 위원님께서 국민의당의 간사를 맡으셨다가 탈당을 하셔서 지금 무소속이 돼서 김수민 위원님께서 국민의당 간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내일 합당하는 절차를 밟게 되기 때문에 하루 만에 간사 선임 얘기를 하는 것도 좀 자연스럽게 않은 것 같아서, 내일 간사가 또 새로 선임될지 김 위원님이 계속 맡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은 김수민 위원님이 국민의당의 간사를 맡고 계신답니다.

한마디 인사말씀 하시겠습니까, 김 위원님?

○**김수민 위원** 국민의당 김수민입니다. 간사로서 원활한 의사소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

사합니다.

○**위원장 장병완** 오늘 회의는 먼저 새로 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을 상정한 후에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및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에 대한 추진계획 보고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부, 특허청 소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4차 산업혁명 대비 신산업 창출과 산업혁신 지원법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김경협·김정우·박정·이재정·권칠승·김종훈·박재호·박범계·유동수·이훈 의원 발의)
2.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박찬대·박재호·김철민·김민기·김해영·박완주·박영선·이찬열·전해철·인재근·김병기·신동근·소병훈 의원 발의)
3.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조배숙·권은희·김광수·김종희·박준영·신용현·오세정·유성엽·이찬열·장정숙·천정배·최경환(국)·황주홍 의원 발의)
4.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위성곤·이찬열·김관영·김수민·김경진·박지원·이동섭·정동영·유성엽 의원 발의)
6.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유성엽·조배숙·조정식·정동영·이동섭·김관영·이찬열·최도자·김동철·김종희 의원 발의)
7.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박정·홍의락·윤호중·손혜원·박광운·유동수·이원욱·어기구·김현권·박재호·황희·김병관 의원 발의)
8.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이완영·나경원·민경욱·김종희·주호영·함진규·김규환·유동수·조훈현·박맹우 의원 발의)
9.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김병욱·안규백·안호영·전혜숙·이학영·윤호중·김영호·이훈·김경협·유은혜·홍익표·박영선 의원 발의)

10.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윤한홍·김승희·이명수·강석진·윤영일·김종석·문진국·함진규·홍철호·김규환 의원 발의)
11.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강병원·서형수·신창현·이용득·이정미·하태경·김철민·박주민·이훈·임종성 의원 발의)
12.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김기선·이현승·김종석·김성원·엄용수·곽대훈·백승주·경대수·정갑윤·이은재·김한표 의원 발의)
13.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윤재욱·윤상현·정유섭·안상수·서청원·이은권·이학재·나경원·김명연·원유철 의원 발의)
14.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김철민·김정우·신창현·추미애·윤관석·박정·송옥주·전재수·이동섭 의원 발의)
15.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위성곤·이찬열·김관영·김수민·김경진·박지원·이동섭·정동영·유성엽 의원 발의)
1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이양수·엄용수·신보라·장석춘·이채익·이장우·김성원·권석창·김명연 의원 발의)
17.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박찬대·김정우·김철민·김민기·김해영·박완주·박영선·이찬열·전해철·인재근·김병기·신동근·소병훈 의원 발의)
1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박정·김철민·김영호·원혜영·위성곤·김경수·어기구·문희상·유승희·정유섭 의원 발의)

1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주광덕 · 강석진 · 문진국 · 김승희 · 성일중 · 안상수 · 윤상직 · 윤재옥 · 유재중 · 박순자 · 이명수 · 강석호 의원 발의)
2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1.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하태경 · 정병국 · 정운천 · 박인숙 · 홍문표 · 김용태 · 오신환 · 이혜훈 · 김재경 · 유성엽 · 주호영 · 유승민 의원 발의)
2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 위성곤 · 이찬열 · 김관영 · 김수민 · 김경진 · 박지원 · 이동섭 · 정동영 · 유성엽 의원 발의)
23. **송 · 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 · 김상훈 · 김성원 · 김정재 · 민경욱 · 백승주 · 윤상현 · 윤영석 · 이양수 · 임이자 의원 발의)
2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 · 송기석 · 김중로 · 장정숙 · 김성식 · 김삼화 · 신용현 · 오세정 · 박준영 · 김수민 · 채이배 의원 발의)
2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 · 박재호 · 이용득 · 최인호 · 추혜선 · 이정미 · 이원욱 · 김해영 · 김수민 · 윤종오 의원 발의)
2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어기구 · 송옥주 · 문희상 · 송기현 · 권칠승 · 이훈 · 변재일 · 오영훈 · 안민석 · 윤관석 · 유동수 · 박재호 · 조승래 · 박영선 · 박완주 · 김병욱 · 안호영 · 김철민 · 박정 · 원혜영 · 강창일 · 노웅래 · 송영길 의원 발의)
2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조배숙 · 김광수 · 김중희 · 박준영 · 손금주 · 신용현 · 유성엽 · 이용호 · 이찬열 · 정동영 의원 발의)
2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 · 김경진 · 김해영 · 박광운 · 이동섭 · 김종희 · 황주홍 · 주승용 · 전해숙 · 위성곤 의원 발의)
2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김정훈 · 윤한홍 · 이현승 · 박맹우 · 박완수 · 유재중 · 김상훈 · 김규환 · 신상진 · 박명재 의원 발의)
30.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 · 오세정 · 김광수 · 채이배 · 박주민 · 이찬열 · 김관영 · 송기석 · 유동수 · 신용현 · 김중희 의원 발의)
31.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 · 이훈 · 권칠승 · 유동수 · 김경수 · 윤한홍 · 김중훈 · 홍의락 · 김수민 · 신경민 의원 발의)
32.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 위성곤 · 이찬열 · 김관영 · 김수민 · 김경진 · 박지원 · 이동섭 · 정동영 · 유성엽 의원 발의)
33.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 · 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 · 인재근 · 전해철 · 기동민 · 원혜영 · 신창현 · 이찬열 · 윤관석 · 김해영 · 김종민 · 신경민 · 김철민 · 소병훈 · 김정우 의원 발의)
3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 · 유은혜 · 김영호 · 박남춘 · 최인호 · 정춘숙 · 정동영 · 위성곤 · 안호영 · 윤관석 · 신창현 의원 발의)
3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 · 박재호 · 유동수 · 홍의락 · 이재정 · 어기구 · 이학영 · 박정 · 송기현 · 최인호 · 박홍근 · 김경수 의원 발의)
3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송기현 · 유동수 · 신창현 · 노웅래 · 한정애 · 이철규 · 심기준 · 박재호 · 전해숙 · 김병관 · 김성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10180)
3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주광덕 · 강석진 · 심재철 · 이은재 · 송희경 · 김순례 · 장제원 · 신상진 · 이완영 · 이만희 의원 발의)

3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박재호·이용득·최인호·추혜선·이정미·김해영·이훈·이원욱·김수민·윤종오 의원 발의)
3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이완영·강석진·이은권·함진규·곽상도·김용태·서청원·이정현·김승희·정우택 의원 발의)
4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위성곤·이찬열·김관영·김수민·김경진·박지원·이동섭·정동영·유성엽 의원 발의)
4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송기현·심기준·박정·김민기·권철승·박주민·전재수·박재호·김정우·임종성·신창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11339)
4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박맹우·최연혜·윤영석·여상규·정갑윤·김한표·강길부·주호영·신보라 의원 발의)
4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정병국·하태경·정운천·박인숙·홍문표·김용태·오신환·이혜훈·김재경·유성엽·주호영·유승민 의원 발의)
4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오세정·채이배·박주민·이찬열·김관영·송기석·유동수·김경진·신용현·김종희 의원 발의)
45.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신경민·박정·손금주·김영호·전해철·박재호·서형수·정성호·윤관석·김성수·이해찬·박찬대·신창현·김정우·민홍철 의원 발의)
46.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김기선·이현승·김종석·김성원·엄용수·곽대훈·백승주·경대수·정갑윤·이은재·김한표 의원 발의)
47.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김기선·이현승·김종석·김성원·엄용수·곽대훈·백승주·경대수·정갑윤·이은재·김한표 의원 발의)
48.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김기선·이현승·김종석·김성원·엄용수·곽대훈·백승주·경대수·정갑윤·이은재·김한표 의원 발의)
4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김기선·이현승·김종석·김성원·엄용수·곽대훈·백승주·경대수·정갑윤·이은재·김한표 의원 발의)
50.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김해영·권철승·홍익표·송기현·박정·유동수·어기구·이찬열·전재수·김병관·최운열·홍의락·노웅래 의원 발의)
5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2.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김상훈·김성원·김정재·민경욱·백승주·윤상현·윤영석·이양수·임이자·정양석 의원 발의)
53.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이종걸·주승용·황주홍·박주현·최도자·박주선·이동섭·민병두·박준영 의원 발의)
54.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박주현·이동섭·신용현·김종희·이용주·윤영일·오세정·김삼화·박선숙·최운열·박찬대·이학영·김성원 의원 발의)
5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권은희·최도자·장정숙·김동철·정동영·오세정·김삼화·김수민·이찬열·채이배 의원 발의)
5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김정우·백혜련·서영교·설훈·이원욱·이종걸·인재근·전혜숙·한정애 의원 발의)
5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박찬대·김정우·박재호·김철민·김민기·김해

영·박완주·박영선·이찬열·전해철·인재근·김병기·신동근·소병훈 의원 발의)

5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박맹우·조경태·김승희·박찬우·윤영석·김성찬·이채익·박완수·성일중·김한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993)

5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박맹우·조경태·김승희·박찬우·윤영석·김성찬·이채익·박완수·성일중·김한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11011)

6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6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전혜숙·백혜련·김영호·윤관석·조정식·김민기·소병훈·김정우·인재근·이인영·한정애 의원 발의)

62.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정유섭·김성원·곽대훈·최연혜·김기선·이채익·이양수·김도읍·장석춘·신보라·강석호·정갑윤·엄용수 의원 발의)

6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신창현·이찬열·윤영일·황주홍·홍문표·김현권·어기구·황영철·김철민 의원 발의)

6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정유섭·정갑윤·송희경·김성태·金成泰·안상수·정운천·송기현·김규환·최연혜·박주민 의원 발의)

6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이채익·이양수·김성원·정유섭·이만희·전희경·이완영·문진국·함진규·원유철·이종명 의원 발의)

6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어기구·김한정·김경수·위성곤·신창현·김철민·김현권·권철승·박정·송옥주·문희상·박영선·백재현·이훈·권미혁·조승래·노웅래·기동민·안민석·서영교·이용득·송기현·박광온·원혜영 의원

발의)

67.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장석춘·김성원·엄용수·박맹우·박대출·안상수·권석창·이종명·이양수 의원 발의)

68.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권철승·유동수·이채익·김경수·윤한홍·김종훈·홍의락·김기선·김수민·신경민·홍익표 의원 발의)

69.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철승 의원 대표발의)(권철승·박정·홍의락·윤호중·손혜원·박광온·유동수·이원욱·어기구·김현권·박재호·황희·김병관 의원 발의)

70.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이개호·윤영일·정인화·이찬열·위성곤·신창현·황희·김현권·안호영 의원 발의)

7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신창현·김병관·이원욱·서형수·정성호·안규백·윤관석·전재수·오제세·김민기·황희·박정·심기준 의원 발의)

72.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이개호·윤영일·정인화·이찬열·위성곤·신창현·황희·김현권·안호영 의원 발의)

7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전혜숙·이원욱·백혜련·이종걸·서영교·인재근·김정우·설훈·황희 의원 발의)

7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장석춘·김성원·엄용수·박맹우·박대출·안상수·권석창·이종명·김태흠·이양수 의원 발의)

7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7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7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김병욱·안규백·전혜숙·이학영·윤호중·김영호·이훈·김경협·박영선·김민기·유은혜 의원

발의)

- 78.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이현승·원유철·김현아·이종배·박명재·이철우·이양수·오신환·신보라 의원 발의)
- 7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김수민·신용현·조배숙·정동영·이동섭·김관영·이찬열·최도자·김동철·손금주·박선숙·남인순 의원 발의)
- 8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1.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손혜원·안규백·이원욱·전재수·김병기·신창현·표창원·김민기·유동수·김성수·민홍철·오제세·김정우·윤관석 의원 발의)
- 82.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권철승·이원욱·송기현·박재호·박정·김병욱·홍의락·김영진·황희 의원 발의)
- 83.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박찬우·박덕흠·이명수·박명재·김태흠·송석준·이은권·정태욱·정용기·원유철 의원 발의)
- 8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유동수·박정·김현권·유은혜·권철승·최인호·이학영·진선미·조배숙·박재호·김진표·제윤경·이재정 의원 발의)
- 85.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이동섭·문희상·최운열·강병원·신창현·이원욱·조승래·정재호·소병훈 의원 발의)
- 86.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손혜원·안규백·이원욱·전재수·김병기·신창현·표창원·김민기·유동수·김성수·민홍철·오제세·김정우·윤관석 의원 발의)
- 87.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권철승·이원욱·송기현·박재호·박정·김병욱·홍의락·김영진·황희 의원 발의)
- 88.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

발의)(김경수·손혜원·안규백·이원욱·전재수·김병기·신창현·표창원·김민기·유동수·김성수·민홍철·오제세·김정우·윤관석 의원 발의)

(10시16분)

○**위원장 장병완** 의사일정은 제1항부터 제88항까지 4차 산업혁명 대비 신산업 창출과 산업혁신 지원법안 등 총 88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계속해서 들은 다음 법률안 등의 소관을 고려하여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대체토론을 한 후에 오늘 상정 법안을 일괄하여 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제출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백운규 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존경하는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부에서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투자기업에게만 제공되던 임대료 감면 혜택을 국내 신산업 분야 사업자에 등에게도 부여하여 우수기업 유치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일정 기간 내에 신고인에게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간주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불합리한 결격사유를 정비하는 것으로 행위무능력이나 파산을 이유로 등록 취소된 사람이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되면 유예기간 없이 바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부 제출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병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존경하는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들은 과도한 결격사유로 인해 균등한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필요한 범위를 넘는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전 부처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결격사유 관련 불합리한 법률 정비의 일환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일부 임원의 결격사유 발생으로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및 액셀러레이터의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더라도 즉시 취소하지 않고 취소사유를 해소할 수 있도록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으로 지도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사유가 해소되더라도 2년이 경과해야 등록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즉시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원은 조합 업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규정된 죄로 인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 되는데 수 개의 범죄를 범한 경합범의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규정된 죄가 아닌 다른 죄로 인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당연퇴직 되어 불합리하므로 경합범에 대해서는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부제출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병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철승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 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승 의원 존경하는 장병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권철승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올해 1월 수출이 22.2% 증가하면서 2년 연속 무역 1조 달러 달성의 청신호를 켜졌습니다. 그러나 무역활동을 저해하는 장애요소들이 있어 향후 우리 수출환경에 대해 낙관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최근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비관세장벽이 높아졌으며 그중에서도 무역기술장벽, 즉 세계 각국의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기술규제, 표준, 인증 등의 기준을 만들어 우리 수출산업의 애로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계 각국이 WTO에 통보한 기술규제는 2587건으로 2007년 1234건에 비해 두 배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무역기술장벽을 관세로 환산해 봤을 경우 7.3%로 세계 상품의 평균 관세율 7.7%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우리 기업의 무역기술장벽 애로를 발굴·분석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대외 협상을 하는 등의 역할을 민간 합동 컨소시엄 형태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는 임시조직으로 매년 용역사업으로 수행하여 지원체계의 연속성이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무역기술장벽 관련 정보의 수집과 분석을 지원하고 수출기업의 각종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전 부처 무역기술장벽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사안별 전략을 수립·지원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장병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미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은 국내외 기술규제 정보를 수집·조사·분석하고 번역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도 조속히 전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중소·중견 기업들의 무역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무역기술장벽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부디 위원님들께서 법안 개정 취지를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셔서 심의 과정에서 국가표준기본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병완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의원님들 발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을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전언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80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하기 전에 이채익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다.

○이채익 위원 자유한국당 이채익 위원입니다.

오늘 2018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저는 좀 유감스러운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보고받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관 총 20개 기관 중에 아직 임명되지 않은 공기업 CEO가 열두 분이나 됩니다. 도대체 문제인 정부 이래도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위중한데 중소벤처기업부장관도 제일 늦게 임명했습니다만 오늘 보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20개 기관 중에 12개 기관장이 아직 임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한전, 대한무역진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거래소, 석유공사, 한국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중소기업진흥공단, 도저히 용납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보면 석유공사 같은 경우도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지금 석유공사 사장이 거의 1년 가까이 임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직이 제대로 장악이 되고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오늘 업무보고를 하겠다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두 분 장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병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이채익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먼저 지적을 해 주시고 오늘 회의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도 지난 정기국회 때 이미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산하기관들은 정부부처 못지않게 국민 경제와 직접적인 연관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서민생활과

도 긴밀한 영향을 미치는 기관들이데 기관장들이 지금 너무 장기간 공석으로 있기 때문에 기관 업무들이 사실 거의 마비 상태에 있을 지경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다른 의미가 아니라 우리 국민 경제와 국민들에게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과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던 그런 기관들일수록 새로운 기관장이 조속히 임명되어서 조직 문화 이런 걸 고쳐 나가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확보해야 하는데 사실 기관장이 없으면 아무래도 직원들이 나태해지기 십상입니다.

따라서 두 분 장관들은, 제가 지난 정기국회 때 촉구한 지가 벌써 한 달이 아니고 두 달도 넘었는데 여전히 이렇게 공석으로 있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셔야 할 겁니다.

두 분 장관들 정말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전체 12개 기관장이 공석되어 있는 점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기관장이 선임되어서 기관이 조직 장악력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저희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같이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경우에는 기관장들이 지금 거의 다 선임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경우에 1월 달에 임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둘러서 선임 중인데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곧 선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채익 위원 잠깐만요, 정말 두 분 장관의 답변이 저는 굉장히 불성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 해의 업무보고를 이런 상태로 어떻게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전 같은 경우 태양광발전 사업이 비리 복마전이라고 이런 사고가 계속 터지는 것 아니에요? 진짜 그 심각성을 알아야……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오늘 업무보고를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서 받는 게 맞느냐, 거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관장도 임명 안 된 상태에서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게 제대로 맞나요? 조속하게 임명 절차에 임해 주시기를 정말 강력히 촉구합니다.

○위원장 장병완 다음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특허청 소관 법률안에 대해 송대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일부 법률안에 대해서만 요약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배숙 의원과 이찬열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조배숙 의원안은 1600cc 미만의 승용차를 LPG 연료사용제한에서 제외하는 것이고, 이찬열 의원안은 LPG 승용차 중 등록 후 3년이 경과한 자동차는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제한 완화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기존 LPG 차량 사용자의 재산상 손실을 최소화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LPG 수급 가능성, 환경개선 효과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고, 개정안에 대하여 정부는 다목적형 승용차 및 등록 후 5년 경과 LPG 승용차에 대한 연료사용제한 완화를 시행한 기간이 1년 정도에 불과하므로 정책효과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입지제한 규제를 상업보호구역 등으로 개편하고, 영업제한 규제의 대상에 복합쇼핑몰을 포함시키는 등의 내용으로 지난 2017년 9월 29일 발의한 개정안을 보완한 것입니다.

기존 발의안과의 주요 차이점은 상업보호구역의 지정 범위를 현행처럼 전통시장 등 보호대상 주변 1km 이내로 제한한 것과 현행법상 2020년 11월 23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 전통상업보존구역 등록제한 등 규제의 존속기한을 삭제하는 것 등입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중소상인의 보호 및 대·중소 유통업계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찬성의견과 과도한 규제로 유통산업의 발전 저해가 우려된다는 반대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므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송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전통시장 점포의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려는 내용입니다.

전통시장의 전기설비가 노후화된 경우가 많고 전통시장 화재 원인 중 상당수가 전기적 요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전점검에 대한 예산 지원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하는 만큼 이를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징수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석탄공사법, 한국가스공사법, 한국광물자원공사법, 한국전력공사법,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등 5건의 개정안은 공사에 타당성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추진·변경하거나 중요자산을 취득·처분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각 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대부분 내부인사로 구성되어 있어 심의 결과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따라 과반수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타당성평가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면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심의 대상에 사채발행 및 지급보증 등도 포함되도록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동일한 내용의 개정안이 다른 위원회에도 제출되어 있으므로 공공기관에 대한 통일적이고 일괄적인 입법을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동 내용을 반영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영업 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영업 표지에 포함시키고 아이디어 탈취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표지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경우 영업의 외관 도용에 따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아이디어 탈취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추가하는 것은 ‘아이디어’라는 용어에 대한 명확화 및 시정권고 이후 탈취 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의 추가 규정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나머지 법률안에 대해서는 단말기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60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장병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에 대해 이용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준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 요약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유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은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여 해당 업종에 대한 대기업 등의 사업 인수·개시 또는 확장 등을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적합업종제도의 도입 후 6년이 경과한 2017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적합업종 합의기간이 만료되는 품목이 발생하여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생계형 적합업종제도 완비 시까지 현 권고 내용을 유지하도록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의결한 상황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보호를 강화하려는 제정안의 취지는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유사한 취지의 제정안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생계형 적합업종의 범위 등 조문별 쟁점에 대하여 관련 법안과의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 기술 침해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침해행위에 대한 사실 조사, 시정권고, 공표 및 이행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중소기업 기술의 실효적 보호를 강화하고 기술 침해에 대한 신속한 피해 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보이나 중소기업 기술의 범위가 포괄적이고 모호하여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해 보이고,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지원하고자 하는 이 법의 목적 및 취지를 고려할 때 형사 처벌 범규를 두는 것이 적절한지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권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기술 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 전담 공공연구기관 지정, 중소기업 기술인력의 양성·공급 및 연구인력의 파견·채용 지원 사업 등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종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수행 및 중소기업에 특화된 맞춤형 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전담 공공연구기관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이

포함되는 것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부정적 의견과 기술인력의 양성·공급 사업의 경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김경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과공유기업의 유형 및 확인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정부 지원에 대하여 환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성과공유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 지원 등을 위하여 성과공유기업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으므로 적절한 개정으로 보입니다.

다만 성과공유기업에 대한 구체적 유형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므로 부칙의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8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장병완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 들어가기 전에 이훈 위원님이 아마……

전문위원, 잠깐만.

○이훈 위원 아니요, 전문위원 아니고 의사진행 발언하려고……

○위원장 장병완 예,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이훈 위원 지금 정부도 법률안 제안설명했고 그다음에 각 의원님들이……

오늘 상정된 법안도 88개입니다. 88개인데, 아까 위원장님도 그러시고 이채익 간사 위원님께서도 정부가 제대로 어쨌든 업무를 할 태세를 잘 안 하고 있다고 질타를 좀 하셨는데, 거꾸로 우리 국회도 제 역할을 다 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임시국회 때 법안소위 분명히 날짜가 잡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산됐어요. 법안소위가 진행이 안 됐습니다. 야당 위원님들, 야당 간사님 특별히 할 것 없다는 식으로 저는 전해…… 사실 확인은 여기서 하고 싶지는 않고요. 어쨌든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하는지에 대한 감시·감독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 우리 역할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안소위가……

오늘만 하더라도 법안이 88개고 지금 현재 계

류 중인 법안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야 간에 물론 이견도 있고요 여야 간에 의견 대립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소위 하나 진행하기 이렇게 어려워져서…… 우리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이 자리에서 반성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야 간에 대립이 있을 수 있고 의견 대립도 있을 수 있고 정쟁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최소한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가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이 다 여기에 와 있습니다. 최소한 이것에 대한 법안소위를 굴리거나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 자체는 그런 데 영향 받지 않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해서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제일 우려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최근의 최저임금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최저임금 문제가 어쨌든 중소기업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정부는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법안으로 우리 국회가 뒷받침해야 될 내용 중의 하나가 제가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안이라는 법안이 있습니다.

오늘 또 보니까 야당 위원이신 정유섭 위원님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이게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 중의 하나로 사실은 정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들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시급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식으로 계속 법안소위가 딜레이되거나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상임위 해태입니다. 저는 해태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적시에 시급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이하 여야 간사님들의 협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소상공인 적합업종제도에 대한 문제는 이게 제정법입니다. 공청회 절차가 필요하게 되어 있거든요. 최소한 2월 달에 논의 조차 시작하려면 2월 안에 공청회는 열어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원장님하고 여야 간사 위원님들의 협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읍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장병완 예, 김도읍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지난번 우리 산자위 법안심사소위 이틀 잡혀 있다가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간사로부터 듣지는 못했지만 제가 아는 한에서 말씀드리자면 지난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80여 건의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가 여당인 민주당에서 법사위를 보이콧하는 바람에 여야가 의사일정에 조금 차질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 산자위 법안심사소위도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인 만큼 법사위에서 그날 통과되었으면 2월 국회에서 80여 건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법사위가 지금 파행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초가 되었던 법사위를 빨리 정상화시키고, 그럼으로 해서 전 상임위의 법안 심사를 비롯한 모든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병완 김경수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그동안 여야 간에 법사위를 둘러싼 의사일정의 파행에 대해서는 여야 공히 책임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잘잘못을 지금 여기서 가릴 문제는 아닌데, 다만 이훈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셨던 게 그런 여야 간의 갈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법안 처리를 전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키거나 하는 것은 그런 상황에서는 어렵겠지만 그런 경우라도 최소한 법안 심사는 미리 해 놓을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국회가 파행이라고 해서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하는 것조차도 같이 미뤄 버리면 여야 간에 합의가 돼서 국회 일정을 진행하더라도 모든 일정이 다 늦춰지게 됩니다. 법안 심사도 아무래도 촉박하게 쫓겨서 하게 되고, 그러면 충실하게 심사하기가 어려워지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여야 간의 여러 가지 의사일정상의 파행이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산자위가 국회 본회의 때 보면 법안 통과율이 제일 저조한 상임위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좀

민망하기도 한데요. 심사소위만큼은 여야 간사님들께서 잘 협의하셔서 소위 심사는 충분히 진행을 시키시고 상임위에서 통과시킬지 여부는 여야 간의 합의를 거쳐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의사일정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장병완 아니, 그래서 사실 지난 2월 7일, 8일 양일간 예정되었던 우리 법안소위가 그때 무산이 되었기 때문에 아까 모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하다 보면 이런저런 여야 간의 쟁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해당 상임위에서 그냥 치열하게 토론해서 결론을 내야지 그게 다른 상임위에 영향을 줘서 국회 전체가 공전이 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아까 그래서 제가 ‘방화벽이 작동돼야 한다. 해당 상임위이면 그 해당 상임위에서만 쟁점을 해결하고 끝내야지 다른 상임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안 좋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사실 간사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간사들께서 좀 불참을 하셔서 회의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19일, 20일 이틀간 법안소위가 예정이 돼 있는데 지금 워낙 누적된 법안이 많기 때문에 법안소위 일정을 또 추가로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간사님들과 협의를 해서 추가로 논의할 수 있는 법안소위 일정을 다시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법률안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소위원회에서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4차 산업혁명 대비 신산업 창출과 산업혁신 지원법안부터 제17항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구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여기구 위원 오늘 보고를 받았습시다만 우리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법안을 발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대한석탄공사 등에서, 공기업들의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타당성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겠다, 매우 바람직한 법이 아닐 수 없는데 이 점 유념해서 잘 심의를 해 주시고요.

본 위원도 한국석유공사법, 이와 비슷한 법안을 발의한 게 있습니다. 같이 묶어 가지고 좋은

심의 함께 잘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장병완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좀 빠뜨렸습니다. 원래 국회의장께서 연말까지 각 상임위별로 처리한 법률안 처리 실적을 공표하시기로 하셨는데 2월 말까지로 그것을 잠시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별 처리 실적을 우리가 시험을 보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간사님께서 추가적으로 법안소위 일정을 잡을 수 있도록 꼭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제18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35항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찬열 위원 예.

○위원장 장병완 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찬열 위원 수원시 장안구 출신 국민의당 이찬열입니다.

장관님, LPG 3년 사용 후에 일반인이 할 수도 있게 법안이…… 지금 28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산업부의 의견이 다목적형 승용자동차 등록 후 5년 후에 LPG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시행 기간이 1년뿐이 안 지났는데, 정책 효과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산업부 의견이 나왔는데, 지금 다목적형 승용차는 만들지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안만 통과시켜놨지? 그래서 조배숙 위원님 같은 경우는 1600cc 이하도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자 이런 법안까지 나왔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누가 산업부에서 의견을 이렇게 냈는지 이것은 아주 우스운 얘기입니다, 우스운 얘기. 다목적형 승용차는 만들지도 못하면서 무슨 1년 정책 효과를 보고 나서 결정을 합니까, 결정을 하기는?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LPG차가 연비가 낮기 때문에 연료비가 더 들어갑니다, 경유차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혜택을 주는 것처럼, 뭐 장애인이든지 복지시설이든지 사회소외계층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LPG 차량을 쓰게 하는데 이것 속으로 골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경유차를 줘야 된다고, 연료비 덜 들어가는 것.

환경개선 문제 때문에 지금 ‘LPG, LPG’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안이한 답변을 해 갖고 법안 자체를 효용이 없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이런 되지도 않는 답변을 하는 게 산업부의 현실

이라고. 이것 제가 그냥 5년 했다가 3년 또 아쉬워서 내놓기는 내놨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은 빨리 풀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선택할 권리를 주세요. 그다음에 수급 계획은 산업부에서 장관님이 수급 계획 짜서 수입 더 할 거면 더 하고 비싸서 안 쓴다 그러면, 수입할 필요성이 없으면 수입 안 하면 되는 거지요. LPG 가스가 없습니까, 미국에는 지금 셰일가스가 나와 가지고 철철 넘어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것 3년 정도 1600cc 이하…… 어차피 수소가 스차나 전기차 나오기 전에는 이 방법이 저는 환경개선에서는 더 이상 크게 뭐 고려할 것도 없다고 봅니다. 경유차·휘발유차의 93분의 1인데 그것을 왜 머뭇거리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 주유소 업계, 정유 업계에서 로비가 들어옵니까? 이것 차꾸 산업부에서 미적거리면 그렇게뿐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소문이 지금 파다하게 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지금 위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찬열 위원 100% 공감하세요. 저 틀린 얘기한 것 하나도 없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다만 지금 자동차 업계가 이 법 개정 이후에 전체적인 모델 개발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법 개정과 또 실제적으로 상용화되는 LPG의 차량이 조금 타임랩을 가지고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동차 업계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법들이 계속 나올 것이니까 새로운 모델에 대해서 개발해 달라라고 지속적으로 독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LPG차에 사용되는 전체적인 에너지, 가스에 대한 수급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급에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인, 지금 바이어스 마켓은 맞습니다. 다만, 바이어스 마켓은 맞지만 또 얼마만큼 저장할 수 있는 용량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 국가가 같이 봐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점을 저희들이 같이 고민하면서 위원님 말씀이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열 위원 아니, 기름 탱크, 정유 탱크 보관하는 그것 좀 개조해 갖고 가스탱크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그게 그렇게 기술적으로 쉽지는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찬열 위원 해 보셨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

○이찬열 위원 하여튼 연료비가 더 들어가는 것은 장관님도 인정하시지요, LPG가 경유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그게 기종마다 좀 다르다고 그러고……

○이찬열 위원 아니, 기종마다 뭐 달라요? 다 똑같지. 같은 단위 기종을 놓고 봤을 때는 LPG가 더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

○이찬열 위원 인문계 나오셨나?

답변 좀 해 보세요. 나 그 대답이나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요즘 디젤의 가스 마일리지 이피션시(efficiency)에 대한 굉장히 획기적인 연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존 디젤 엔진의 가스 마일리지가 낮아 가지고 그것이란 평균적으로 비교하면 여전히 LPG 쪽이 좋습시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신형에 대한 전체적인 디젤차에 대한 가스 마일리지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또 가스 마일리지가 지금 전체적으로 여러……

○이찬열 위원 장관님 말씀은 국민들이 들었을 때 100명에 1명도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도시……

○이찬열 위원 아니, 그냥 쉽게…… 제가 계산해 본 것은 수원에서 목포 갔다 오는 데 1만 2500원 더 들어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어떤 차량과 비교를 하느냐에 따라……

○이찬열 위원 아니, 동일 차종 경유 1600cc, LPG 1600cc 그렇게 기준으로 하는 거지 무슨 그 기준도 달라집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가격하고 연비를 합치면 그래도 경유, LPG, 휘발유 순으로, 경유가 가장 저렴한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찬열 위원 정말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이찬열 위원 그것 누가 자료 봤어요,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경유는 지금……

○이찬열 위원 이따가 이 회의 끝나고 제 방에

잠깐 오시라고. 우리 아주 내놓고 결정하자고. 그렇다면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됐지요?

누가 주셨지? 이 회의 끝나고 저하고 좀 보시자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아마 유로6 때문에 그런 것……

○**이찬열 위원** 1600cc 등 같은 LPG차하고 같은 경유차, 같은 배기량을 놓고 목포를 한 번 갔다와 보자고, 이론상으로라도. 이게 지금 전혀 그렇지 않디니까요. 나는 이게 정말 한심한 거예요. 왜 경유가 연료비가 더 들어간다고 판단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한번 보시자고, 그것.

실장님이세요? 누구세요?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 박원주** 에너지자원실장입니다.

○**이찬열 위원** 에너지자원실장님?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 박원주** 예.

○**이찬열 위원** 실장님이 거짓말할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저하고 우리 의원실하고 같이 한번 보시자고요. 그것 판결되면 환경을 위해서라도 LPG 빨리 적용시키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박원주 실장이 이야기하는 게 유로6 엔진을 탑재한 차량인 것 같습니다.

○**이찬열 위원** 자꾸 이것 핑계, 저것 핑계……

국내에서 나오는 1600cc면 1600cc LPG차, 디젤차 그것 갖고 구별하면 되지 또 유로6은 뭐…… 국민들이 유로6이 뭔지 압니까, 그게? 그것은 배기가스 기준이지. 그것 했다가 전부 사기꾼들로 몰린 것 아니에요, 폭스바겐이니 뭐 이런 사람들? 그것 지금 두둔하시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에서의 가스마일리지하고 또 고속도로 고속 운행 시의……

○**이찬열 위원** 그러니까 수원 도시 거쳐서 목포 고속도로로 간다는 것 아닙니까? 언제 제가 고속도로로만 간대요, 국도로만 간답니까? 도심 도로도 가고 또 고속도로도 가고 그렇게 하는 거지 어떻게 장관님께서는 그렇게 좁게 보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저희들 평균적으로 한번 수치를 다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열 위원** 빨리해 보세요. 실장님은 저하고

한번 얘기하시고.

○**위원장 장병완**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규환 위원님.

○**김규환 위원** 자유한국당 김규환 위원입니다.

‘신산업 프로젝트 중심 가시적 성과 창출’이라는, 13페이지 좀 보실까요?

○**위원장 장병완** 아직 지금 업무보고 저기……

○**김규환 위원** 예, 자료 요청입니다.

○**위원장 장병완** 자료 요구요?

○**김규환 위원** 예.

여기 전기·자율주행 차 얘기 나왔지요? 본 위원이 16년도에 컨트롤타워 얘기를, 있느냐 없느냐를 거론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든 학교마다 자율주행차·전기차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컨트롤타워가 있는지 없는지 그 자료를 상세하게 해서 본 의원실에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완** 여기구 위원님.

○**여기구 위원** 19번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존경하는 주광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했는데, 이 법률 내용을 보니까 수도권 공장의 건축 면적을 현행 500㎡ 이상에서 1000㎡로 완화하는 법률입니다. 그렇지요, 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여기구 위원** 이것은 전형적인 수도권 완화 법인데요. 이렇게 되면 많은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이게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토 균형발전 정책이라든지 지방과 수도권 불균형 개선 정책에 반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신중하게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저도 지금 여기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이고, 그래서 수도권 집중 현상에 따라서 난개발 및 또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격차 심화 문제가 조장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신중하게 이것을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구 위원** 그렇게 신중하게 접근 좀 해주시고요.

지금 지방 산단 같은 경우 텅텅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 산단 분양에도 치명적이다 이렇

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장관님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완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36항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52항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의 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법안 제45항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이 내용은, 학생들이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서 리콜 명령을 하게 되면 명령 이행률은 높은데 실제 회수율은 절반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를 봤더니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는 것이 교육기관을 통해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겠다는 내용인데요.

정부 측에서 알릴 제품의 정의에 대해서, 이것을 그냥 ‘학생들이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하게 되면 좀 막연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은 시행령에 규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수정의견인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대신에 이 부분은 어쨌든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좀 신속하게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53항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70항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의 법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구 위원님.

○여기구 위원 중소기업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4번 법안, 존경하는 채이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법안인데요.

지난번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서 기술보증기금의 주무부처가 금융위에서 중기부로 변경된 것 아시지요, 장관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그렇습니다.

○여기구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법안은 다시 기

보기금을 금융위원회에서 감독을 하겠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여기구 위원 그러면 비효율적이잖아요. 중기부에서 이것 감독할 자신이 없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아직 이관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새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감독을 해 보고, 부족하면 그다음에 금융위에 요청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구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 법안을 잘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71항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88항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의 법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제가 법안심사소위 위원이 아니라서요, 제가 제출한 법안에 대해서 정부나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대해서는 입장을 좀 밝혀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제71항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 부칙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로 하자라는 것, 성과공유기업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취지인데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대신에 성과공유제가 제대로 시행된 지가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확산이 좀 더딘 편입니다, 지금 보면 중소기업의 약 36% 정도.

문제가, 중소기업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절반이 넘는 중소기업들이 성과공유제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법을 이렇게 개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중소기업부에서 실제로 중소기업이 성과공유제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하는 부분도 정확히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국정과제에 포함되어서 저희가 금년부터 적극적으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더 홍보하고 중소기업과 협동해서 제도가 널리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대체토론을 마친 88건의 법률안은 법률안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전체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9.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추진 계획 보고

90.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추진계획 보고

91. 업무보고

가. 산업통상자원부

나. 중소벤처기업부

다. 특허청

(11시05분)

○위원장 장병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9항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추진계획 보고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91항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소관 업무보고의 건까지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FTA 추진계획 및 업무현황을 계속해서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운규 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간부직원을 소개한 다음 FTA 추진계획 및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직원들은 소개 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존경하는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계획과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및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의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업무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산업부는 실물경제 총괄부처로서 우리

경제의 회복과 미래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무역 1조 달러와 경제성장률 3%를 회복하는 데 힘을 보탤고, 사상 최대의 수출과 외국인 투자 유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산업 육성을 위해 기술개발, 규제개선 등의 지원을 강화하고, 조선 등 일부 주력산업의 구조조정에 있어 산업과 금융이 균형 있게 고려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산업·기업·지역 등 3대 분야의 혁신 성장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바라는 국민적 요구와 세계적 흐름에 부응해 에너지 정책의 큰 틀을 근본적으로 개편하고, 에너지전환 로드맵, 재생에너지 3020 계획, 제8차 전력수급계획을 차례로 마련하였습니다.

한미 FTA, 중국 사드 등 급박한 통상현안에는 국익 우선의 원칙하에 당당하게 대응하는 한편,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면서 신흥 시장으로 향하는 길을 넓히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 앞에 놓인 경제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보호무역주의 확산, 주요국의 금리 인상과 같은 대외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년 실업, 양극화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도 풀어 나가야 합니다.

올해 산업부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도전을 새로운 성장 기회로 바꾸고자 다음의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산업의 혁신 성장을 가속화하고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전기·자율주행차,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주력산업의 구조혁신 노력도 강화하여 신산업과 주력산업이 모두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아가 우리 기업들이 과감하게 투자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규제혁신, 인재양성, 제조혁신 등의 정책적 지원도 한층 더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산업의 허리 보강을 위하여 매출 1조 원 이상 혁신형 중견기업을 올해 5개 이상 육성하고, 2022년까지 80개로 늘려 중견기업을 새

로운 성장주체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혁신 성장을 위한 지역거점으로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지역별로 자립 가능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전 지역이 고르게 잘 사는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에너지전환 정책과 에너지신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해 마련한 에너지전환 정책의 후속조치를 착실히 추진하여 재생에너지 확대, 석탄화력의 친환경화 등 에너지 정책 변화를 국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전환을 계기로 에너지신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새로운 성장 기회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나아가 A ICBM 기술을 접목한 에너지 신서비스를 확산하고 전력망 전반에 걸쳐 IoE 시스템을 구축해 에너지 고효율 사회의 실현을 앞당기고자 합니다.

이러한 에너지 비전과 정책을 종합해 2040년까지의 에너지 수급 목표와 에너지 산업의 미래 청사진을 담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금년 중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신남방·신북방 정책 추진과 미중 통상현안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선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유라시아, 아세안, 인도 등으로 시장을 다변화하고 우리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미국과는 한미 FTA 개정, 수입규제 조치 등 통상현안에 적극 대응하면서 에너지, 첨단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중국과는 민관의 다양한 협력채널을 재가동하고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개시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더 많은 중소기업이 수출에 나서고 수출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도록 수출과 투자 지원제도를 개편해 무역 2조 불 시대를 여는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어서 통상절차법에 따라 보고드리는데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과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의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중 FTA 후속협상에서는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서비스 시장의 추가 개방과 중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에 대한 실질적 보호 강화를 목표로 협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김수민 간사와 사회교대)

메르코수르는 브라질·아르헨티나·우루과이·파라과이로 이뤄진 중남미 최대의 경제권이나 현재 주요국과의 FTA 체결 사례가 없습니다. 이에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메르코수르와의 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여 우리 기업들의 중남미 신흥시장 진출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장병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경제가 당면한 과제가 많은 만큼 실물경제를 총괄하는 산업부의 역할과 책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산업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산업부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추진할 것이며,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고 경제 회복의 온기가 실물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정책의 방향과 중심을 잘 잡아 주시고 입법 등으로 뒷받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안하시는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 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강성천 통상차관보와 박진규 기획조정실장이 각각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 1급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천 통상차관보입니다.

박진규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박건수 산업정책실장입니다.

문승욱 산업기반실장입니다.

박원주 에너지자원실장입니다.

김영삼 무역투자실장입니다.

김장규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입니다.

허남용 국가기술표준원장입니다.

(간부 및 소속기관장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수민 통상차관보 나오셔서 한중

FTA 서비스 및 투자 후속협상 및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통상차관보 강성천** 통상차관보입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신규 통상협상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후속협상 추진경과입니다.

15년 12월 발효된 한중 FTA는 서비스 및 투자 챕터를 포함하고 있으나 시장개방 수준은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특히 서비스 분야는 기재된 분야만 개방하는 포지티브 자유화 방식을 취하였으며, 비서비스 분야 투자의 경우에는 시장개방 약속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한중 FTA 부속서에서 네거티브 방식의 후속협상을 한중 FTA 발효 후 2년 내 개시하기로 규정하였고, 지난해 12월 우리 정상의 중국 방문 계기에 산업부는 중국 상무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금년 초에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개시하는 데 합의하였습니다.

정부는 그간 경제적 타당성 검토, 공청회 개최 등 통상절차법상 규정된 절차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금번 후속협상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주요 결과와 기대효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상절차법 9조에 따라 실시한 경제적 타당성 검토 주요 결과입니다.

양국의 시장개방 수준에 따라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한중 FTA 후속협상 체결 시 우리 실질 GDP, 대중 수출입, 중국의 대한국 직접투자가 증가하는 등 우리 경제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페이지 중간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비스 투자 시장개방에 따른 정성적 효과로서, 국제협정 형태로 중국 서비스 투자 시장개방 약속을 확보함으로써 중국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우리 기업 활동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투자 및 투자자 보호 규범을 개선하여 우리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강화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4페이지입니다.

후속협상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협상 목표입니다.

세계 제2위 서비스 교역국이자 우리의 제1위 서비스 수출시장인 중국에 대한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통해서 시장 선점효과를 향유할 수 있도록 협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국은 16년 기준 우리의 제2위 투자대상국으로 우리 기업 투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를 확대하여 기업 애로를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국의 대한 투자 증대 및 제조업보다 고용효과가 높은 서비스 분야 수출 확대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 촉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예상 쟁점 및 대응방향입니다.

먼저 우리 측 중점 제기 필요 분야입니다.

우리 측은 관광·문화·의료·금융·법률 등 우리 업계의 중국 진출 관심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 시장개방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중국 측은 국내적 필요성에 따라 개방을 확대 중인 분야와 달리 문화·콘텐츠 분야 개방에는 다소 소극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측의 예상 제기 분야로서는,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려우나 자국 산업 육성 차원에서 관심이 있는 금융·회계 등 분야를 개방할 것을 요청해 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중국 측의 제기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 국내적 민감성과 이익 균형을 고려하여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보호 규범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송금·청산 등 우리 투자자가 겪는 애로 해소 및 우리 투자자의 활용 가능성을 감안하여 ISDS 규정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금일 국회 보고 이후 국내 절차가 완료되면 한중 FTA 후속협상 1차 협상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후속협상 과정에서도 중요한 계기마다 진행경과를 위원님들께 보고하고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는 가운데 협상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다음으로는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메르코수르는 남미 공동시장을 의미하며 브라질·아르헨티나·우루과이·파라과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약의 명칭은 메르코수르 측과 협의를

통해 무역협정, 즉 트레이드 어그리먼트(Trade Agreement) 표현을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의 추진 경과입니다.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논의는 2004년 11월 한·브라질, 한·아르헨티나 정상회담 합의에 따른 공동연구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메르코수르 측의 소극적 입장으로 인해 별다른 진전이 없다가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정권 교체로 메르코수르 측이 개방경제에 보다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동 협정 논의에 진전이 있게 되었습니다.

17년 3월에는 양측 주무장관이 예비협의를 성공적 완료를 선언하고 각자 협상개시를 위한 내부절차에 착수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측은 17년 4월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추진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지난해 12월 대경장 회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메르코수르 측도 17년 12월 메르코수르 장관급 회의에서 협상개시를 승인하여 협상개시 관련 4개국의 내부절차를 모두 완료한 바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의 추진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메르코수르는 중남미 지역 최대시장으로서 우리나라에게 중요한 신흥시장입니다. 남미지역 인구의 70%, GDP의 76%를 차지할 정도로 거대 경제권이면서 아직 역외 주요국과의 FTA를 체결하지 않아 상호 시장개방의 혜택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브라질·아르헨티나의 최근 수년간 경제 부진으로 한·메르코수르 양측 간 교역량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였기 때문에 교역량 회복의 모델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제적 타당성 관련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협정 체결로 인한 우리나라의 GDP 증가 효과는 약 1.22~1.28%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메르코수르에 대한 수출은 자동차 및 부품 등 제조업 중심으로 약 24억 불, 수입은 사료 및 가금류 등 농산물을 중심으로 약 12억 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2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은 상품·서비스 무역·투자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협정으로 하되 양측 산업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점진적인 자유화

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분야에서는 관세·비관세 장벽 인하 및 철폐를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는 한편 투자 자유화 및 투자자 보호 강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남미 시장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협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명성 증진, 지적권 보호 강화 등을 통해 남미 지역에서의 우리 기업, 우리 국민의 비즈니스 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쟁점 및 대응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품 분야에서는 가급적 높은 시장 자유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남미시장 진출을 지원하되 우리 농축산물 분야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협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서비스 및 투자 분야에서는 개방 경험이 적은 메르코수르 측의 입장을 감안하여 협상토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분야는 기재된 분야만 개방하는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 방식으로, 비서비스 분야 투자는 설립 챕터 마련을 통해 직접투자의 자유화를 추진토록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규범 분야에서는 SPS, 무역구제, 정부조달, 지적권 챕터 등을 마련하여 메르코수르와의 통상규범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일정입니다.

국회 보고 이후 양측 간 협의를 통해 협상 추진일정을 마련하겠습니다.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상개시를 조만간 선언하고 곧이어 제1차 협상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계기별로 국회에 협상 진전 상황을 보고하고, 협상 진전 상황을 감안하여 우리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에 협상을 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수민 다음으로 박진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산업통상자원부 업무현황에 대해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기획조정실장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기초실장입니다.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업무현황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년 성과 및 2018년 정책 추진 여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2017년 성과입니다.

무역 1조 불 달성, 실물경제 회복세 등을 통해 산업 혁신 성장과 경제활력 회복의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실물경제 회복세를 이어 가기 위해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 재생에너지 3020 계획 마련, 제8차 전력수급계획 수립 등 에너지전환을 추진하였습니다.

통상·무역 분야에서는 사상 최대 수출 및 외국인 투자 등 무역투자 여건 개선, 한미 FTA 개정 요구 등 통상현안 대응, 신남방·신북방 시장 개척 등을 통해 경제회복의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8년 정책 추진 여건입니다.

대외 여건입니다.

세계경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불확실성 확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외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중국 등 주요국들의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강력한 산업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등 글로벌 대외 패러다임의 구조적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대내 여건입니다.

실물경제는 회복세이나 주력산업의 경쟁력 저하, 기업·지역 간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가 지속 가능한 혁신 성장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작년 포항 지진, 미세먼지 농도 증가로 인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공급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정책 추진 방향입니다.

산업부는 금년에 국민의 삶을 바꾸는 산업 혁신 성장 가속화,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에너지로의 전환 이행, 혁신·포용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통상·무역 정책 추진을 기본방향으로 산업, 에너지, 통상·무역 등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11쪽입니다.

국민의 삶을 바꾸는 산업 혁신 성장 가속화입니다.

13쪽입니다.

첫째, 신산업 프로젝트 중심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전기·자율주행차, IoT가전, 에너지신산업 등 국민 체감이 높은 신산업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구체적 성과 창출에 매진하겠습니다.

산업부 R&D 예산의 30%인 9000억 원 이상을 신산업 프로젝트에 집중 투입하고, R&D 단계부터 규제를 발굴하고 해소하여 실증·시범 사업과 연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로서 이에 대응해 로봇, 조선, 석유화학 등 업종별로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우리 경제의 허리 보강을 위하여 매출 1조 원 이상 혁신형 중견기업을 올해 5개 이상 육성하고 2022년까지 80개로 늘리는 '중견기업 비전 2280'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출 도약 중견기업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고 기업 역량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수출 중견기업 1800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6쪽부터 19쪽까지 주요 업종별 정책 방향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쪽입니다.

혁신 성장의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역량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술이 실증, 사업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발, 실증, 사업화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전략적으로 기획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R&D로 혁신하겠습니다. 또한 시장 수요에 기반한 인력양성 신속 추진제 및 실증 규제특례, 디지털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역량 확충을 위한 3대 혁신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산업 등 6대 혁신산업 분야를 지원하여 지역이 자립 가능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이 혁신 성장을 견인하는 거점으로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지역 거점대학에 산학융합지구를 조성하여 혁신 성

장의 거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제품안전관리체계 강화 및 제도 개선입니다.

작년 말 개정된 전안법은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주요 업종 및 소비자단체로부터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는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품안전관리체계는 소비자 안전을 우선으로 리콜제도 등을 혁신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에너지로의 전환 이행입니다.

먼저 25쪽, 에너지전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에너지전환 로드맵, 재생에너지 3020 등 기준에 발표한 계획의 후속조치 이행과 선제적 제도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원전 해체는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등 산업육성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원전 수출은 영국, 사우디 등 국가별 특성을 감안해 고위급 인사 방문 등 차별화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6쪽입니다.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은 규제 개선 등 후속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2040년까지 에너지 수급목표, 국민 중심의 에너지전환 정책과제를 담아 '에너지전환 2040'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전환을 계기로 미래에너지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차세대 송·변전 시스템 도입, 소규모 분산자원 중개거래 추진 등 IoE 기반의 미래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V2G 실증사업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A ICBM을 활용한 에너지 신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수민** 기초실장님, 지금 시간이 많이 지연된 관계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업무현황은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기획조정실장 박진규** 예, 알겠습니다.

28쪽, 해외 자원개발 추진체계 및 에너지 안보 강화입니다.

과거 에너지 개발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반성

을 통해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 석유·가스·회유금속 등의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수요관리 및 에너지 복지·안전관리 강화입니다.

ICT 기술을 활용하여 에너지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안전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혁신 성장을 위한 새로운 통상·무역 정책 추진입니다.

먼저 33쪽,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통한 경제지평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G2에 대한 의존도 완화 및 혁신 성장을 통한 새로운 기회 창출을 위해 유라시아, 아세안, 인도 등으로 시장 다변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수입규제 및 한미 FTA 개정협상 등 통상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신산업, 첨단산업 등에서 미국, 중국과의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혁신·포용적 성장을 위한 수출·투자 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무역 2조 불 시대를 여는 수출·투자 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출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영세기업에 대한 FTA 컨설팅을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FTA 활용률을 높이고 무역구제제도를 적극 활용해 국내 산업 피해 구제기회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수민** 수고하셨습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간부직원을 소개한 다음에 업무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직원 소개 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존경하는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신설 부처인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의 기능과 역할에 힘을 실어 주시고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글로벌 금리인상 기조와 원화 강세, 유가 변동성 확대 등 대내외 불안요인으로 중소기업에게는 녹록지 않은 한 해가 예상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민의 눈높이와 요구에 맞춰 정책과 조직을 새롭게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성과 중심으로 정책을 개편하겠습니다.

성장 가능성 높은 기업에 기술, 금융, 수출 등 정책을 일관지원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정책의 방향도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후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더불어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를 위해 고용 창출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인건비 부담 경감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관계부처와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기술탈취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 노력을 강화하여 공정한 경쟁구조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상권 내몰림 등 어려움을 겪는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노력도 강화하는 한편 혁신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전통시장이 개성과 특색을 살려 나가면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저부터 현장을 찾고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한층 배가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부가 현장 중심 서비스 기관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정책대안들은 앞으로 정책 수립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김수민 간사, 장병완 위원장과 사회교대)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중소벤처기업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윤모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조봉환 중소기업정책실장입니다.

석중훈 창업벤처혁신실장입니다.

김병근 소상공인정책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내용은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병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윤모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기획조정실장 정윤모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일반현황, 2017년 정책추진 평가, 중소기업 정책 방향,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1쪽부터 4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체하고 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과 6쪽, 2017년 정책추진 평가입니다.

지난해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수립 등 중소기업 중심의 역동적 생태계 조성에 주력하였고, 창업·벤처 투자 열기가 고조되고 전통시장 매출액이 증가하는 등 성과가 일부 가시화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다만 우수한 기술창업이 아직 부족하고 대·중소기업 간 격차는 여전하며 소상공인의 수익성과 생존율도 아직 낮은 상황입니다.

7쪽과 8쪽, 정책 방향입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한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8쪽입니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중심 혁신 성장, 일자리·소득 주도성장, 공정경제 실현 등 우리 정부의 3축 성장정책의 실천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9쪽부터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목표로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 중소기업 성장환경 구축, 상생협력 및 균형발전 생태계 조성, 소상공인·전통시장 자생력 강화, 정책·업무 혁신 및 국민 체감도 개선, 이상 5개 전략 14개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과 11쪽, 기술혁신형 창업 촉진입니다.

민간역량을 활용하여 창업벤처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선 민간투자 후 정부지원 방식의 창업 지원 시스템을 정착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인재, 아이디어, 정보가 모이는 혁신문화의 허브로

운영하는 한편 벤처기업 확인제도도 민간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12쪽과 13쪽, 민간 주도 벤처투자·회수 환경 조성입니다.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을 통해 투자규제 완화 등 투자제도를 시장친화적으로 개편하고, 모태펀드를 통해 2018년 1조 원 규모의 투자자본도 공급하겠습니다. 모태펀드의 자펀드 가상통화거래소 투자에 대하여는 벤처 투자가 민간 차원의 결정 사항입니다만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투자금 회수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14쪽, 철전팔기가 가능한 제도적 시스템 구축입니다.

정책금융의 연대보증 폐지 등 실패에 따른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한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전환과 구조개선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5쪽과 16쪽, 일자리 중심 중소기업정책 개편입니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기술개발 등 정책자원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정착 등을 위해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부담완화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내일채움공제 등을 통해 근로자 임금 상승을 유도하겠습니다.

17쪽과 18쪽, 중소기업 내수·수출 판로 확대입니다.

창업기업 제품의 공공구매를 확대하여 혁신제품의 초기 시장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또한 온라인 수출 쇼핑몰 육성, 신흥시장 진출 확대 등을 통해 해외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19쪽과 20쪽, 중소기업 혁신역량 및 성장잠재력 확충입니다.

4차 산업혁명 전략분야 등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산단 등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스마트공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금년 중소기업의 융자, 보증 등 자금을 총 100.8조 원 규모로 공급하고 정책자금 상환제도 등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 혁신하겠습니다.

21쪽과 22쪽,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 근절입니다.

임치제도 활성화,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확보 등 기술탈취 근절정책을 강화하고 공정한 수·위

탁 거래문화 조성에도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또한 2022년까지 약속어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습니다.

23쪽,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문화 확산입니다.

상생결제시스템 적용 확대 등을 통해 상생협력을 2·3차 협력사까지 확산하고 중소기업 간 협업 활성화를 위해 근거법 제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지역 중소기업 균형발전 기반 마련입니다.

신사업 창출 촉진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형 지역특구제도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산업구조 변화와 자연재해 대응을 위해 지방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25쪽과 26쪽, 골목상권 보호 및 소상공인 생업 안전망 확충입니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복합쇼핑몰에 대한 영업규제 도입, 임차상인의 영업권 보호제도 강화, 그리고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7쪽,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입니다.

질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보유한 혁신형 소상공인을 발굴, 육성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소상공인 간 협업 및 소공인 특화를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28쪽, 활기차고 안전한 전통시장 조성입니다.

온누리상품권 판매를 지속 확대하고, 전통시장의 개성과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상인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는 희망사업 프로젝트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화재 취약시설을 개보수하고 2022년까지 화재알림시설을 모든 시장에 설치하여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9쪽, 대국민 행정서비스 질 향상입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기술, 금융, 수출 등 정책의 일관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지원사업 사전협의제도를 도입하여 정책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30쪽, 국민 체감 규제 발굴·개선입니다.

기업 규모에 맞게 규제가 차등 적용되도록 하고, 정책에 처음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책 진입장벽을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병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윤모 특허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간부직원을 소개한 다음 업무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장 성윤모** 존경하는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월 임시회를 맞이하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첫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지식재산 분야는 과거에도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끄는 촉매 역할을 하였지만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혁신과 성장의 견인차로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에 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산업계·학계·특허업계와의 소통과 토론을 거쳐 지난 연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정책방향’이라는 지식재산 발전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돈이 되는 강한 특허를 창출해서 혁신 성장을 주도하고 지식재산을 제대로 보호해서 공정경제를 실현하며 지식재산 사업화를 촉진해서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다각적인 실행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실천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이러한 특허행정의 발전 방향을 점검해 보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특허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준호 특허심판원장입니다.

강경호 기획조정관입니다.

(소속기관장 및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포된 자료를 통해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반 현황 등은 생략하고 6페이지의 주요 정책과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혁신 성장을 주도하는 강한 지식재산 창출을

위해 특허창출 전 주기에 걸쳐 품질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 단계로만 한정하던 특허품질 제고 노력을 R&D·출원 등 특허창출의 모든 단계로 확대해서 발명품질, 출원품질 및 심사품질을 동시에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핵심·표준 특허의 전략적 확보를 위해서 4차 산업혁명 분야 특허디자인 출원에 대해 우선 심사를 실시하고 중소기업이 특허 유지비용을 경감할 수 있도록 연차등록료 감면을 20년차까지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특허심판의 공정성, 신속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가 심판에 참여하는 전문심리위원회제를 도입하고 또 심판과 조정을 연계해서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경제적 약자의 지식재산을 제대로 보호하여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공정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영업비밀 침해와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해 신속한 행정조치 수단을 마련하고 대기업 등의 악의적인 지식재산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되겠습니다.

해외에서의 K-브랜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해외지식재산센터의 지원을 확대하고 상표·디자인 분야 선진 5개국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UAE에 수출된 바 있는 한국형 특허행정서비스를 다른 나라로 적극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여성, 경제적 약자 등에 대한 지식재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생활발명코리아, 세계여성발명대회 등을 통해 여성의 지식재산 역량을 제고하고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식재산 사업화를 촉진해서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서겠습니다.

공공이 주도하고 있는 지식재산 서비스를 과감하게 민간에 개방하고 지난해 특허 분야에서 시작한 전문조사기관 등록제를 상표·디자인 분야

에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중소·벤처 기업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해 특허공제 사업의 내년도 본격 시행을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고 금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특허바우처 사업을 통해 스타트업이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지식재산서비스를 선택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창업기업이 지식자산을 기반으로 사업화 자금을 보다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금융을 4500억 규모로 확대하고 IP 가치평가기관도 민간 중심으로 확대하는 등 지식재산 금융의 저변을 확충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4차 산업혁명 본격화에 대비한 지식재산 기반을 마련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발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체계적인 발명교육을 실시하고 발명교육센터와 지역아동센터를 연계해서 청소년을 위한 체험형 발명교육도 적극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인공지능 등 새롭게 출현한 기술을 지식재산권으로 적절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하고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특허기술도 명확히 보호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특허정보시스템 고도화 등 미래기술을 활용한 특허행정 효율화를 위해서도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25페이지 이하에 첨부된 국회 계류 법률안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병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참고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위원장과 간사들 양해하에 건강상 이유로 불참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 김정일 FTA정책관이 배석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시간은 간사 간의 협의에 따라 5분으로 하겠습니다.

○정운천 위원 의사진행발언 한번 하고 갑시다.

○위원장 장병완 예, 정운천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정운천 위원 아까 기획실장님들의 보고를 받았는데 중소벤처기업부 한 6분 하니까 이찬열 위원이 아주 잘했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아까 중소기업부 기획실장의 보고가……

○이찬열 위원 나는 속삭였습니다. 속삭인 건데 들으셨네.

○정운천 위원 속삭였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사전 보고를 우리 의원실로 언제 보냈느냐 했더니 금요일 날 보냈다고 그래요, 이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것 7분간 보고받아 가지고 무슨 내용 파악하고 질의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청와대 업무보고가 아마 1월 달에 다 끝났지요? 업무보고가 끝나면 그 내용들을 의원실에 다 보내 주셔서 가지고 그 내용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렇게 와서 질의를 해야 내실 있는 질의가 되고, 또 여기 오셔서 가지고 업무 내용에 대해서 보고할 필요는 없다고 나는 봅니다.

오시면 바로 질의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다 내용을 스터디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금요일 날 오후에 보내 가지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누가 그것 하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비효율적이예요, 이러한 상임위 운영 자체가.

그러니까 사전에, 며칠 전에 통보해 가지고 최소한 일주일 전이든 5일 전이든 하계 위원장님이 좀 해 주셔서 가지고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여러분들 전체가 여기 오시는데 시간의 효율을 좀 가져와야 돼요. 이 시간 다 뺏기고 오전에 이것 업무보고하고 다 끝나면 점심 먹고 오후에 좀 질의하다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내용들을 다 파악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막 바로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장님이 해주십시오.

○위원장 장병완 예, 다음부터는 저기를 하는데…… 아마 사흘 전에 그래도 어쨌든 제출은 된 것 같으니까……

○정운천 위원 아니, 사흘 전인데 토요일, 일요일 까먹으면 하루도 없어요.

○**위원장 장병완** 예, 하여간 앞으로 최대한 조속히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숙지하시고 올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해서 보고 자료를 미리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오늘은 최저임금 관련된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중형조선소 구조조정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중기부장관님, 지금 최저임금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이 얼마나 되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일자리안정자금 지금 10%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얼마 전에 보도 나올 때는 한 자릿수였는데 그 사이에 많이 올랐네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이게 월급이 지급되고 나서 신청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김경수 위원**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2월 달 들어서서 본격적으로 신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 달이 지나야지만 금년 월급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1월 달에는 절반 정도밖에 지급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신청률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그 외에도 최저임금 대책을 작년에 정부가 발표한 게 76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76개 중에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게 몇 개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지난번 1월 달에 저희가 점검한 것에 의하면 36개는 이미 완료가 됐고요.

○**김경수 위원** 나머지는 왜 안 되고 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나머지도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률 개정 사항들 이런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추진해야 될 부분들은 국회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그런 부분이 정상이다라는 건데 시행은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렇지요. 그게 시행이 되려면 국회에서 관련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루빨리 개정을 해 줘야 시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최저임금 관련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가 지금 해야 될 역할들도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정부 측에서 위원님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하는 작업들을 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보면 최저임금이 주는 정부와 자영업자·중소상공인·중소기업 이런 구도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대기업이 빠진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예를 들자면 최저임금을 인상했을 경우에, 얼마 전에 하도급법 개정한 것에 의하면 공공요금이나 최저임금 이런 인상이 있을 경우에 단가 조정이 가능하게끔 법을 개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능하다고 돼 있지 의무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돼도 그게 원청회사 또는 대기업들의 협력업체에 대한 단가 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제자리를 빨리 잡으려면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저는 대기업도 함께 참여해야 된다. 왜냐하면 대기업이 사내유보금부터 해서 지금 실제 이익률이 중소기업과 격차가 많이 나는데,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 국민소득이 향상되고 내수 진작을 통해서 대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함께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 업체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 요율이라든지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이익률이라든지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부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은 저는 산자부도 같이 책임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산자부와 중기부가 최저임금 대책에 대기업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위원님 말씀에 적극 찬성하고요. 다행히도 지금 대기업에서도 그

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현대차에서는 2차·3차 하도급업체의 임금 인상분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1500억 원을 출연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상생협약을 맺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이것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업체 그리고 정부까지 나서 가지고 상생하는 것은 아주 보기 드문 사례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수 위원 시행되고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알려 주시고, 그다음에 동참을 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은 동참할 수 있도록 더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두 번째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최소한데 제가 오후 질의가 없어서 2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완 예.

○김경수 위원 두 번째로 카드 수수료 관련해서는 작년 7월 달에 중소·영세 가맹점들에 대한 수수료를 3억 이하 0.8%, 5억 이하 1.3%로 인하를 했는데 이게 약 3500억 원 정도의 혜택이 있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5억 원 이상의 일반 카드 가맹점인데 이것을 전체를 통으로 놓고 얘기를 하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기업의 대형 가맹점들, 대형 마트나 백화점들은 협상력이 있기 때문에 낮은 수수료율을 보이고 있는데 편의점 같은 경우 연평균 매출이 약 6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프랜차이즈 빵집 같은 경우는 약 10억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슈퍼나 중소 마트만 가더라도 20억 훌쩍 넘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반 가맹점 같은 경우에는 거의 2.5%의 최고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구분을 5억 원 이상을 한 번 더 구간을 정해서 실제 중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가맹점들의 수수료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중소기업부에서는 챙겨봐 주시고요, 이것은 금융위가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은 신용카드가 약 81%

정도 사용이 되고 체크카드가 18.7% 정도 사용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외국과는 거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체크카드 사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체크카드야 바로바로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거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약 0.2~0.7%입니다, 수수료율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반 가맹점이 1.5%로 돼 있습니다, 영세는 좀 낮긴 하지만. 그래서 체크카드 사용률을 높이고 수수료율을 낮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금융 당국과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일괄적으로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산자부장관님께, 중형 조선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조조정 실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컨설팅 회사에 일방적으로 맡겨서 그 결과를 가지고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방식이 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그러면 과거 정부와 달라진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실사 진행 과정에서 최소한 노사정 대화라든지 그리고 회사 측이나 노조 측의 입장과 채권단의 입장을 제가 확인해 보면 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수주 전망이라든지 경쟁력에 대한 입장들이.

이런 부분이 실사 과정에서 충분히 서로 간의 대화를 통해서 입장 차이를 좁히고 그게 컨설팅 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사정 대화의 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산자부에서 그게 진행될 수 있는 조정자 역할을 중간에서 꼭 해 주셔야 결과가 나온 뒤에 구조조정이 이루어져도 수용성이 높아집니다. 이대로 가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간에 분명히 노조부터 시작해서 지역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난리가 날 텐데 이런 부분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사정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완 답변하실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융위에서 7월 달에 카드 수수료 재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 지

금 말씀하신 5억 원 이상의, 하지만 소상공인이거나 자영업자들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체크카드 문제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찬동하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바를 열심히 찾아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완** 수수료율 중에 특히 우대수수료율과 관련해서 지금 모바일 페이들 있잖아요. 네이버나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 우대수수료가 작동이 안 돼요. 왜냐하면 카드사하고 직접이 아니라 결국 하나가 더 끼어든 바람에 그게 3.5% 정도로 높단 말이지요, 카드사하고 직접적으로 할 때는 1.3%인데.

그런데 그 경우에 지금 현재 굉장히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또 금융위하고 협조를 해서 우대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완** 다음은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규환 위원** 자유한국당 김규환 위원입니다.

한국전력공사 김시호 부사장님 나오셨지요?

○**한국전력공사국내부사장 김시호** 예.

○**김규환 위원** 답변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에 한전에서 한국과 러시아 전력망 연계사업에 관해서 자체조사를 하셨던데 결과 보셨습니까?

○**한국전력공사국내부사장 김시호** 예, 용역 결과……

○**김규환 위원** 이 결과를 보니 총사업비 대비 무려 13.1% 내부수익률과 7년 남짓 회수 기간 등 경제성이 아주 좋은 것으로 나왔어요, 그렇지요?

○**한국전력공사국내부사장 김시호** 예.

○**김규환 위원** 러시아의 전기를 안 가져오면 우리 안 됩니까? 우리 그만큼 러시아에서 전기 안 갖고 오면 안 될 만큼 전력 부족해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 보세요.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이 왜 욕을 얻어먹었나 하면 정부 바뀔 때마다 한 단계 한 단계 한 개씩 했으면 더 잘하기 경쟁이 붙었을 텐데 한꺼번에 다 하는 바람에 많은 욕을 먹고 제대로 똑바로 잘 못했다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이번 정부 임기 내에서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국전력공사국내부사장 김시호** 예.

○**김규환 위원** 맞습니까? 잘 알고 계세요?

○**한국전력공사국내부사장 김시호** 예, 맞습니다. 상업운전보다는 지금 용역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추진할 거냐라는 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규환 위원** 김시호 부사장님, 맞습니까?

○**한국전력공사국내부사장 김시호** 예, 맞습니다.

○**김규환 위원** 잘 알고 대답하세요.

화면 한번 봐 주세요.

한전이 전력망 연계사업을 추진한다고 의원실로 보내온 자료입니다. 저희들이 만든 게 아니고요.

이 사진을 국민들이 보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 사진 한전에서 만든 것 맞습니까? 러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전기를 사 오겠다 하고 전력망 구축에 대한 내용을, 전봇대를 세우겠다 하는 내용인데 맞습니까? 모르세요?

○**한국전력공사국내부사장 김시호** 제가 이 그림은 못 보고 헤저케이블 쪽만 봤습니다.

○**김규환 위원** 케이블이 뭐예요?

○**한국전력공사국내부사장 김시호** 헤저……

○**김규환 위원** 자, 보세요. 저기 보면 서울에서 개성을 거쳐서 평양, 원산, 김책, 청진, 나진, 러시아 쪽으로 전봇대를 깔겠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북한을 빙빙 돌아서 갈만큼 전력이 부족해요, 러시아 가서 올 만큼? 가져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개성을 거쳐서 평양을 가서 다시 거꾸로 원산을 가 가지고 함흥, 김책 이렇게 가야 될 이유가 뭐였어요?

다른 화면 한번 보여 주세요.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저 녹색 보세요. 저 길로 바로 질러가면, 가져올 필요도 없지만 가져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가면 되지 뭐하려고 온 북한 전체를 다 빙빙 돌아가는 전봇대를 세워 갖고 무슨 전기를 어떻게 갖고 온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전력이 러시아에서 전력 갖고 오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부족해요?

○**한국전력공사국내부사장 김시호**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규환 위원** 아니, 거기서 갖고 온 자료인데 뭘 자료가 필요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당 야당을 떠나서 대한민국이 잘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 는 거니까 허심탄회하게 대한민국 위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이 한전에 매달 전기요금을 납부하 고 그 전기요금을 가지고 북한에다가 전봇대를 세우고 모자라서 러시아에서 전기를 가져온다라 는 얘기 들으면 한전 부사장님 뭐라고 얘기들을 하겠습니까?

계획을 정확하게 짜고요. 100년, 200년 나갈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얼마나 에너지에 대해 강하고 전력에 대해 강하고 전 세계 최고의 원자력을 우 리가 만들고 있는데 뭐하려고 구걸하듯이……

전봇대 깔면 북한이 가만있습니까? 그 전기 안 끌어 쓰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또 그렇 게 대답할 수 있겠지요, 고압선이 지나가기 때문 에 아무도 손을 못 댈다. 그 분야에 대해 제가 잘 알고 있는 전공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기 어기구 위원이 계시지만 전봇대 밑에 있는 사람들 참 기절초풍 할 얘기 수도 없이 했는데 무슨 전기가 부족하다 고 러시아에서 전기를 갖고 오고……

저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 지고 있고, 본 위원은 북한 송전선 사업을 절대 로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상세한 내용을 모르신다니까 다시 알 아 가지고 그냥 온 의원실에 아니면 내가 한국전 력 사장 방에 가든지 같이 의논해서, 다 퍼 놓고 제일 좋은 게 뭔지 허심탄회하게 함께 다시 한번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시지요? 말씀해 보세 요.

○**한국전력공사국내부사장 김시호** 위원님, 동북 아 전력망 연계사업은 러시아·중국·일본·한국 해 가지고 망을 서로 융통하는 관계로 알고 있고 요. 제가 저 그림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환 위원** 한국전력에서 온 자료라는 사실 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전력공사국내부사장 김시호** 예, 알겠습 니다.

○**김규환 위원** 보충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완** 한전에서는 오찬 시간 중에 확 인해서 오후에,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구요.

○**한국전력공사국내부사장 김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완** 오전 질의는 우선 여기까지 진 행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중소기업부장관에게 말씀드릴 게 있는 데, 아마 지금 명절을 앞두고 있어서 여러 위원 님들이 전통시장 방문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위 원장으로서 저도 최근에 몇 개 전통시장들을 방 문해 봤는데요. 거기 보면 요새 청년몰들 만들고 또 야시장들을 운영하는 전통시장이 많지 않습 니까?

대개 전통시장에 불법 건축물들이 많이 있습 니다. 그런데 불법 건축물들은 카드 사용이 안 되 고 1금융권, 2금융권에 거래를 못 해요. 금융 혜 택을 못 받습니다, 불법 건축물의 경우에. 그런데 요새 화재도 많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로 집중 저기를 하면서 국토교통부 쪽에서는 그 것을 양성화하는 것을 지금 못 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양성화가 안 되는 상황에서도 영업은 계 속해야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카드를 사용하는 것하고 예를 들어서 금융권에 혜택을 받는 부분 을 우리 전통시장 육성지원 특별법에 근거해서 그것을 양성화해 주는 방안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중소기업부 에서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확인해서 보 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 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병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 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강원도 원주 출신의 김기선 위원 입니다.

산업부가 얼마 전에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을 발표했는데 이 내용 중에서 폐기물에너지와 관련해서 ‘폐기물, 우드펠릿 등에 대한 REC 가중 치를 올해부터 축소하고 국제기준에 맞게 비재생 폐기물을 재생에너지에서 제외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신·재생에너지 체계와 관련해서는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인정도 하지 않는 비재생폐기물에 대해 가지고 우리나라만이 이걸 신·재생에너지로 인정을 하고 거기가 REC뿐만 아니라 RPS 제도까지 국제적으로 인정도 해 주지 않는 것을 추진해 온 아주 상당히 왜곡되고 그리고 국제적으로 평가받지 못하는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백운규 장관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여러 정책 현안과 관련해서 바로 폐기물에너지하고 관련돼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을 국제기준에 맞춰서 새롭게 편성을 해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높게 평가를 하고 잘하셨다고 봅니다. 많은 관련된 지역민들이 앞으로 큰 박수를 보내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서 이것을 하루속히 법제화시켜야 됩니다. 제가 비재생폐기물에너지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 분류에서 제외하는 국제기준에 맞는 그러한 법안을 발의해 냈는데 이것이 조속히 국회 통과될 수 있도록 산업부가, 장관께서 앞장서서 이걸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정말 이 부분만큼은 장관님께 큰 박수를 보냅니다.

이어서 전력수요 예측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8차 에너지수급계획에 보면 2030년에 579TW/h로 해서 7차 계획보다 약 77TW/h 축소되는 걸로, 수요가 줄어드는 걸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많은 전문가들이 탈원전 에너지 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에너지수급계획이라고 하는 중대한 국가 대사를 여기에 맞추는 문제를 상당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011년도에, 바로 노무현 정권 시절에 에너지 수급 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블랙아웃 직전까지 가 가지고 에너지 대혼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입니다. 2030년도에 7차보다도 약 80여 TW/h 정도를 줄여서 예측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미래의 에너지수급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걱정하는 전문가들이 너무 많습니다.

DR 수요관리시장이 2014년도에 발족하고 난 이후에 지난 4년 동안 2014년도에 한 번, 2015년도에는 한 번도 없었고 2016년도에 두 번, 불과 세 번밖에 발동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

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벌써 급전 지시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여름철에 네 번 하고 겨울철, 작년 12월 들어 가지고 올해까지 열 번이나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올해의 전력량에 대한 수요 예측을 잘못했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소 약 12기가 가동 중단된 상태에서 이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후변화, 지금 지구온난화와 관련해 가지고 많은 전문가들이 온난화가 진행이 되면 여름철은 더 덥고 겨울철은 더 추워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예측을 했다고 그런데 한 경우가 지금 이렇게 나타납니까? 어떻게, 장관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 겨울이 유난히도 기상청 예보하고 다르게 혹한기를 저희들이 겪고 있습니다. 81년도 기상 예측 이후로 저희들이 처음으로 -15°C 이하로 떨어진 날이 5일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최대수요치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 하더라도 DR에 관한 정책은 2014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시행령을 지금 저희들이 조금 수정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DR 제도는 지금 선진국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법이고 방법입니다. 최대수요치에 맞춰 가지고, 피크타임에 맞춰 가지고 설비를 늘린다는 것은 굉장히 경제성에서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 피크타임 때 수요를 좀 더 관리하는 게 맞는 방법이고 또 선진국가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2014년도에 그러한 방법을 저희들이 채택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제도를 좀 더 원활하고 어느 정도 수용성 있게 하기 위해서 제도의 시행령을 조금 저희들이 조정을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김기선 위원 제가 추가질문 안 하겠습니다.

장관님 말씀 국민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 유독 추운 날씨였다’ 국민들이 이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앞으로 여름철에 더 더워지고 겨울철에 더 추워진다 이것이 기후변화와 관련돼 있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얘기입니다. 그 전문가들 얘기는 왜 안 들으시고 납득할 수 없는 얘기로 합리화만 시키려고 합니까?

그리고 기후변화 관련해 가지고 반영을 시켰다

고 하는데 기후변화 전문가들이 ‘이게 무슨 반영이냐’…… 당장 올해도 여러분들 예측이 전부 다 틀리지 않았습니까? 반성하십시오.

그리고 DR 수요시장 마찬가지로입니다. 2014년도에 해 가지고 16년도까지 큰 문제 없이 수요 예측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되고 있었어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수요 예측이 영 틀려진 겁니다. 이것을 바로잡을 생각을 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를 하시니까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해 드려도……

○**김기선** 위원 설명을 하시는데, DR 시장 제도에 그동안 어떤 문제가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장관님 그 말씀 해 주셨기 때문에 관련된 실무자는 나한테 와 가지고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간략하게 제가 답변을 해 드리면……

저희 실무자들이 의원님실에 가서 좀 더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설비예비율이 올해도 27%, 22년도까지 34%까지 가는 역대 최고의 전력설비예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때보다도 저희들 전력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지금도, 오늘도 그렇지만 최대전력수요치 87GW 정도로 나올 때도 저희들 예비력이 한 12, 13GW 정도 남습니다. 관심 단계인 5GW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아직도 전력이 많이 남습니다.

다만 DR에 대한 시행령을 저희들이 조금 수정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들이 좀 더 효율적인 DR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병완**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재현 위원님이 첫 질의 하시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경기 광명갑 백재현 위원입니다.

먼저 한미 FTA의 현안 중심으로 몇 가지 물어봅시다.

한미 FTA 협상과 관련되어서 지금 1·2차 협

상이 끝났지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중** 예.

○**백재현** 위원 특히 김현중 차관은 당초 FTA를 체결했던 분이고 그때도 대표단을 이끌고 했던 분이기에 때문에 누구보다도 가장 적합한 자가 지금 2차 협상을 하고 있다고 봐요, 재협상을.

3차 협상은 언제부터 할 계획이예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중** 3월 초 정도 될 겁니다.

○**백재현** 위원 1·2차 협상을 해 본 결과 느낌이 어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중** 1·2차 협상에서는 우리가 상대방한테 무역 구제, ISDS 이런 분야에 대해서 개정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세이프가드하고 반덤핑에 대해서, 이 부당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백재현** 위원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중** 그런데 미국 측에서는 위원님, 참고로 양국 간의 교역 불균형 해소를 해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를 했고요.

○**백재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이익 균형을 맞춰서 상호 간에 도움이 되면 된다는 방향이고 거기는 무역 불균형을 해소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가 가장 중요한, 가장 강한 주장들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중** 예.

○**백재현** 위원 이익 균형을 맞추는 게 어찌면 더 핵심일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주장이 타당하더라도 미국이 저렇게 보호무역주의가 강해지면서 이상한 조건들, 이상한 주장들을 해 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다른 나라가 미치는 영향도 마찬가지로 아닙니까, 다른 나라와의 FTA도, 미국 입장에서는? 계속 우리 한국만 문제 삼는 것은 아니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중** 예.

○**백재현** 위원 그래서 3차 협상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중** 3차 협상도 2차 협상과 유사하게 각자 자기네 관심사에 대해서 계속 더 협의를 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백재현** 위원 그분들의 관심 사항은 지금 우리 자동차를 제일 문제 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중** 예, 미

국 쪽에서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백재현 위원** 우리 자동차는 한 160억 불 정도 수출하고 미국 자동차는 한 17억 불 정도, 10분의 1밖에 사 주지 않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중** 예.

○**백재현 위원** 실제 17억 불밖에 안 들어오는 것은 우리 국내에 그만큼 수요가 없어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강제로 막거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중** 우리 시장 규모가 보면 미국의 인디애나 주밖에 안 되고 텍사스 주의 8의 1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백재현 위원** 그렇지요, 규모가. 워낙 시장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어쨌든 이것을 염려하는 우리 한국 기업들의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실제. 그래서 한미 재협상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어쨌든 간에 우리 대한민국의 이익이 또는 그 균형을 맞추는 데 초점을 맞춰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역할을 꼭 해 주시고, 특히 이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가장 전문가이고 또 한미 FTA에 관해서 누구보다도 가장 책임 있게 죽 해 왔던 분이니만큼 역할을 당부드리고 이러한 것을 좀 더 공개적으로, 국민이 알 수 있게끔 해 갔으면 좋겠어요.

특히 셰이프가드 조치와 관련해서 우리도 강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거기에 끌려가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소해야 할 것은 제소도 하고 법적 싸움을 해야 할 것은 법적 싸움도 과감히 하고 그래야지 항상 움츠러든 자세로 협상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중** 움츠러고 협상하지는 않고 있고요, 위원님. 그리고 셰이프가드하고 반덤핑에 대해서 태양광하고 세탁기에 대해서는 곧 WTO 제소 들어갑니다.

○**백재현 위원** 하여튼 좀 더 투명하게 그리고 국민들이 알 수 있게 설명을 잘해 가시면서 협상을 잘 마무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그리고 장관님, 광물자원공사 어떻게 할 계획이요? 광물자원공사가 작년 12월

달에 국회에서 부결되어서 증자하는 것은 금년에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해 봐도. 뭔가 다른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산업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와 관련해서? 광물자원공사를 어떻게 할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참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그래도 방향 설정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저희들이 그래서 전반적인 광물자원공사에 대해서 지금……

○**백재현 위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안 되니까요. 우선 광물자원공사가 갖고 있는 모든 자산의 평가를 제대로 좀 해야 돼요. 우량 자산과 불량자산을 정확히 구분해 가지고 불량자산은 불량자산대로, 우량자산은 우량자산대로 모아 가지고 대안을 만들어야지 섞어서, 섞어찌개 만들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 우리 국민들의 세금만 투입되는 것이지.

그렇다면 광물자원공사가 갖고 있는 모든 자산에 대해서 판단을 하세요, 이것은 불량이나 우량이나. 그래 가지고 도저히 회수가 불가능한 이런 것들을 한 군데에 모아서 자산공사에 넘겨 주든 뭔가 대안을 만들고 적어도 우량자산만 만들어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산이 어떤 것들인지 그것을 판단해서 좀 구분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구조조정을 정확히 해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를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저희들이……

○**백재현 위원** 이것은 시한을 좀 정해 놓고 하셔야 돼요. 무한정 끌면 이것 하나 마나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그런데 다만 시간을 정해 놓고 저희들이 하게 되면 우량한 자산이라도 제값을 주고 팔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아니, 어느 시점에, 그러니까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한다든가 금년 6월 말을 기준으로 한다든가 금년 3월을 기준으로 한다든가 그 기준을 정해서 그 시점에 우량과 불량을 구분해 가지고 우량자산을 어떻게 모으고 불량자산을 어떻게 모으고 우량자산은 어떻게 앞으로 운영체계를 만들어 가고 불량자산은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을 만들어야지 무작정 아무 대안 없이 시간만 끌면 다 불량자산 되는 거예요. 이것은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위원님, 이것을 저희들이 태스크포스팀을 가지고 지난 9월 달부터 광물자원공사에 대한 전체적인 개선 방안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산 같은 경우에도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런 선별 과정을 거칠 수 있겠지만 그게 잘못해서 밖으로 나가게 되면 또 자산의 매각이, 제값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저는 매각이 옳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불량자산도 그것 모아 놓고, 불량자산을 모아 놓은 상태에서 처분을 하든가 무슨 처리를 해야지 지금 판단해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떤 것은 팔고 어떤 것은 팔지 않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조금은 테크니컬한 방법들이 남아 있고 아직 전체적인 구조조정에 대한 것도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다 못 드립니다.

○**백재현 위원** 광물자원공사만 가지고 저한테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산업부가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저희 실장이 가서 설명을 좀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찬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찬열 위원** 수원시 장안구 출신 국민의당 이찬열입니다.

산업부장관님, GM 관련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좀……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그랬는데, 작년에 GM 해외사업부 사장을 만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작년이 아니고 올

1월 달에 만났습니다.

○**이찬열 위원** 올 1월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이찬열 위원** 시간이 그렇게뿐이 안 됐나? 그런데 왜 만나셨어요? 뭐라고 그래요, 거기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배리 앵글 사장이 1월 달에 취임을 하면서 취임 차 저를 찾아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이찬열 위원** 그런데 지금 철수설이 있는 것은 어제오늘 얘기는 아닌데 와서 뭐 도와달라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언론에도 나왔는데, 유상증자 관련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구체적인 이야기는 저하고는 하지 않았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죽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찬열 위원**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이런 얘기 없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인 이야기는……

○**이찬열 위원** 이것 2월 10일 자 조선일보에 나온 얘기인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저하고는 없었습니다.

○**이찬열 위원** 그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이찬열 위원** 그러면 산업부 다른 분하고는 있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그렇지는……

○**이찬열 위원** 누구누구 참석하셨습니까, 거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그날……

○**이찬열 위원** 산업부 쪽에서, 장관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저랑 실장하고 그다음에 담당 과장 이렇게……

○**이찬열 위원** 둘, 셋 이렇게 있으니까 장관님은 직접 얘기 안 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산업부의 입장은 뭘니까, 그러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당연히 외투기업이 와서 한국에서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자기들의 이윤에서 최소한의 이윤의 구조는 가질 수 있는 방향이 뭔지도 이제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된다, 그러나 다만 지금 GM의 손실 문제가……

○**이찬열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지금 GM의 경쟁력의 문제도 와 있다라는 겁니다.

○**이찬열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세제나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안 하고 유상증자에 대해서 허락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으로 들리는데 최종적으로 우리 산업부 입장은 뭘니까, 그러면? 이것 최소 한 30만 명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인데,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GM에서 경영 개선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은 GM이 전반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롱 텀 커미트먼트(long-term commitment)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서로 했었는데 롱 텀 커미트먼트를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전체적인 경영구조 개선의 어떤 형태든지 우리가 도와……

○**이찬열 위원** 장관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경영 개선을 하고, 한국GM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왜 대한민국의 산업부장관을 만나냐고요, 그 사람들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취임 인사차 처음 와서 인사를……

○**이찬열 위원** 아니, 취임 인사는 나한테도 안 오는데 장관님한테만 가요? 뭐가 있으니까 갔을 것 아니냐 이것이지. 이것이 철수해도 큰 문제가 되니까 장관님께서 대책을 꼭 확실하게 세워 주시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냥 바로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기관 채용 부정은 제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하는데, 가스안전공사의 규정을 보면 마지막에 ‘사장이 인사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아니, 이런 게 뭐…… 삭제하겠다고는 나왔는데 아니, 사장이 인사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가 아닌 때가 어디 있어요? 여기 사장도 낙하산으로 오니까 사장이 필요한 사람 낙하산으로 앉히려고 이것 합리화시켜 놓은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이 양반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가스안전공사 사장? 그만두고 어디 가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그만두고 어디로 가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찬열 위원** 어디 가서 있는 것 저도 아는데 모르신다는 말이에요?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주식회사입니까,

개인회사입니까? 어디 인사규정에 그렇게, 사장이 인사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뽑는다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규정이 이게 세상에 있을 수가 있는 규정입니까? 참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

그다음에 장관님, 월성 1호기 언제까지 폐쇄하실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월성 1호기는 전체적인 에너지 로드맵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서 조기 폐쇄하는 것으로……

○**이찬열 위원** 언제요, 언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전반적으로 이게 이 수급계획……

○**이찬열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자꾸 물어보느냐 하면요 분명히 월성 1호기는 폐쇄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한수원에서 1월 달 초에 수소감시설비 설치공사 29억 원 들여서 하는 것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알고 있습니다.

○**이찬열 위원** 이것 왜 하느냐 그랬더니 산업부에서 나온 게 ‘수소감시설비는 예비품으로 분류해서 다른 원전에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예비품으로 해 갖고 한수원에서 문제가 생길 때 갖다 쓰면 되는 것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그러나 지금……

○**이찬열 위원** 이것 이렇게 보면 장관님하고 한수원 사장하고 이게 뭐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한수원 사장이 그만둔 것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그렇지 않는다고요. 안전을 중요시……

○**이찬열 위원** 아니, 그냥 앞뒤 전후로 봤을 때 그렇게만이 해석이 안 된다 이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지금 원전이 가동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수소에 대한 감지장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찬열 위원** 그러니까 좋아요 다 좋은데, 기본적으로 장관께서는 폐쇄한다고 그리고 대통령도 폐쇄한다고 그리고 한수원 사장은 수소감시설비를 1월 달부터 또 시작하고, 이게 제대로 안 맞는 것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찬열 위원** 뭐가 그렇지 않아요? 사실대로 얘기하면 되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지금 아이들(idle)

상태에서도 수소감지장치는 좀 엄격해진 안전 규정에 따라서 설치하게 되어……

○이찬열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 철거시키는데 화장실 고쳐 갖고 철거시키냐’고 그랬더니 ‘급하면 화장실은 고쳐 놓아야지요’ 이런 얘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그렇지 않고 그것은 다시……

○이찬열 위원 집 철거시키는데 집 수리해 갖고 철거시키는 것과 뭐가 다르느냐고요, 재개발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이 수소감지기는 나중에 다른 비슷한 유형의 6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찬열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굳이 지금 여기다가, 내일모레 폐쇄시킬지도 모르는데 여기에다가부터 설치를 하느냐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완전 섣다운이 되어야지 저희들이 수소감지……

○이찬열 위원 무슨 말씀이든지 하실 얘기는 있으시겠지요.

홍 장관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이찬열 위원 댐사 갑질 하는 것, 이것 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위원님 기자회견 하는 것 봤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찬열 위원 조금만…… 저 두 번째 질문 안 하겠습니까.

이것 정말 나쁜 사람들이예요. 카드 한 번 긁는 데 46원인가가 전화 통화료로 나간다면서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이찬열 위원 그것 방지하려고 1639 카드결제 호처리 서비스 이것 했는데 이것은 26원뿐이 안 되는데 그것은 못 쓰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 통신사하고 댐사하고 짹짹해 갖고 수백억씩 리베이트 주고…… 이게 피해가 누구냐? 소상공인들에게요, 재래시장 같은 데. 저는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 벼룩의 간을 빼 먹지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고.

장관님, 이것 특별히 신경 써 주셔 갖고요…… 이 소상공인들이 무슨 죄가 있냐고. 1639 쓰면 통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기다리고 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카드를 수 번 긁어봐야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못 써먹는 거지. 비싼 것 사십몇 원짜리 전화통화요금내고 하는 거지요. 장관님 이것 특별히 신경 써서 이 소상공인들이 추운 날 와서 기자회견하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모태펀드에다 투자해 갖고 약 36억 4000만 원이 가상화폐에 투자가 된 것은 다 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가상화폐는 아니고요 거래소에 투자가 돼 있습니다.

○이찬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래소에 했는데 일단 그게 결과적으로 가상화폐로 들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아닙니다.

○이찬열 위원 아니예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저희 가상화폐에는 투자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찬열 위원 그러니까 가상화폐 거래소에 투자를 했다는 얘기 아니냐 이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거래소에는 투자가 됐습니다.

○이찬열 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거지 뭐가 다르냐고. 정책자금을 지원해 줬는데 그것 투자를 하라고 그랬더니 돈에다 투자를 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아니, 거래소가 가상화폐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찬열 위원 아니, 36억 여기 나왔는데 뭐가 아니예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그게 거래소에 지금 투자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소는……

○이찬열 위원 거래소는 기업이에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기업입니다.

○이찬열 위원 그것 무슨 기업이에요? 거기가 제조업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현재는 지금……

○이찬열 위원 돈회사 아니예요, 돈회사. 재정을 지원해 갖고 투자를 하라고 했더니 돈장사하는 데다가 투자를 하느냐고. 이걸 안 되는 것 아니예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지금 그 문제가 돼서……

○이찬열 위원 제조업에다 정상적으로, 정말 생산성을 올리기 위한 데다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애기를 해 주시고 정책을 바로잡아야지, 소상공인 것하고 이것 확실하게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원자력 폐쇄할 것 날짜를 못 박으세요. 날짜를 못을 안 박으니까 장관은 폐쇄한다고 그리고 한수원 사장은 1월 초부터 또 29억씩 갖다 쳐바르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게?

○**위원장 장병완** 이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이찬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완** 다음, 홍 장관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위원님, 그래서 댘사 관련해서는 현재 과기부와 방통위에 실태파악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그것 나오는 대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열 위원** 아니, 지난번에 우리가 수사 의뢰까지 다 하라고 했어요, 댘사 건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찬열 위원** 그것 장관님이 해 주셔야지…… 소상공인들이 700만 있으면 뭐 합니까? 누가 애기를 해 줘야지.

○**위원장 장병완** 이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완** 이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재호 위원** 중소기업부장관님, 최근에 최저임금 문제 때문에 소기업하고 소상공인들, 소상공인들하고 한 번씩 간담회를 해 보셨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여러 번 했습니다.

○**박재호 위원** 저희 동네의 장사가 잘되는 음식점에서 여태까지 하루도 안 쉬다가 하루 쉬답니다, 월요일마다. 이유가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최저임금보다 높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좀 더 월급을 받기를 원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장사하시는 분들은 어려우니까 그러면 하루 정도 쉬자 이렇게 가는 곳도 있고요. 또 어떤 업체들은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게 주는데 새로운 신입사원들을 최저임금 주니까 또 이 사람들은 올려줘야 됩니다. 이런 연쇄 효과도 있고.

생각보다 이 문제가 간단한 해결 방법은 아니라서, 이제 제가 장관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습니다.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정책을 새롭게 도입하면 한 1~2년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효과를 봐서 과연 기존에 해 왔던 정치, 정책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빈부의 격차뿐만 아니고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니까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한번 어쨌든 기다리면서, 시행하면서 한번 해 보자 해서 이제 시작을 한 건데요.

한 110조 정도 하는 공공기관·정부 구매 알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박재호 위원** 거기에 여러 가지 있지요. 지금 판로법에서 소상공인들 이런 것도 있고 다 있는데 거기에 혹시나 소기업들 이런 목표비율을 한번 정하는 것도, 어쨌면 지금 현재로서는 많은 분야가 목표비율 돼 있지만 그것도 한번 하면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 중소기업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요……

○**박재호 위원** 그래서 그중에서 소상공인들을 별도로 해서, 물론 분류가 너무 많으면 복잡하지만 지금 이게 최저임금 때문에 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목표비율을 한시적으로라도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카드수수료 부담 추가 완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임대료 안정화를 위한 공공임대상가 공급, 금융채무 부담 완화, 온누리상품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5%에서 10%로 됐지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 정부사업 우선지원 등 정부가 1월 달에 추가로 보완대책을 내렸는데 실행을 다 하고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그렇습니다.

○**박재호 위원** 그러면 홍보할 필요도 있겠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박재호 위원** 물론 언론에 내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가까이 가서 홍보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국정감사를 할 때 중소기업부에서 구청 단위로 그런 플래카드를 걸고, 한 분이나 이렇게 하면 그런 문의가 오면 언제든지 답변해 줄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현재 저희 지방청과 유관기관에서 현장을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은 홍보의 날로 해서 전국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박재호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플래카드도 한 번 못 봤고, 아무것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 최근에 어떤 이야기가 들리는 것 잘 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박재호 위원 이게 주민등록증을 여러 개 갖고 와서, 다 함께 가져와 갖고 10%를 버니까 이게 승수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투기만 조장하고 있다는 이야기 들었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그 얘기가 나와서요 저희가 긴급, 전국에 그런 부정사용이 없도록 저희 지방청에서 지금 감시단을 파견해서……

○박재호 위원 감시단이 너무 작고요. 감시단만으로 될 일이 아니고 부정유통 단속 인원도 늘리고 또 처벌 수위도 상당히 높아야 됩니다. 이것은요 소상공인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유통은 안 되고 자기가 깡을 해서 10%를 그냥 먹는 겁니다. 지금 장사를 해 본들 1~2%뿐이 안 남아요. 그래서 이게 어찌보면 사회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승수효과가 하나도 없는 상품이 돼요. 그것 법체계를 좀 더 고치고 어떻게 하면,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 보시고 그리고 직접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본인 아니면 안 해 주는 그런 방법도 연구해 보시고.

지금도 그렇게 하지만 공공연히 주민등록증 열 개 갖고 오면 다 해 줘니다, 현장에서는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맞습니다. 그래서 온누리상품권을 많이 교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할 생각이구요.

이번에 10% 할인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그 할인 받아서 나간 액수가 2000억이 넘는 등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아마 설 전통시장 경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게 훼손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재호 위원 그것 잘 지켜보시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박재호 위원 오히려 더 사회에 다른 것만 조장하게 됩니다. 잘 단속하시고 법규정 잘 만드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장병완 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통상교섭본부장님, 작년 국정감사 당시에 제가 우리 세탁기 세이프가드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을 때 본부장님 답변 기억 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중 잘 기억 안 납니다.

○김도읍 위원 작년 국정감사 때 제가 세탁기 세이프가드 발동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니까 본부장께서 ‘다행히도 한국에서 제조한 세탁기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가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발언하셨습니다. 발언 석 달 만에 세이프가드가 발동이 됐거든요. 어떻게 책임지실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중 그게 원래 ITC에 있어서는 한국산, 한국에서 제조한 것은 제외가 됐었는데 백악관에 가서 그 결정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김도읍 위원 본부장님, 일본은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경제 관련해서 핫라인을 구축해서 경제회담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부총리하고 부통령. 그런데 우리는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 당시에 제가 지적을 했음에도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지난해 6월 달에 미국 전문 연구소인 피터슨국제연구소에서는 이미 미국의 대한 무역규제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아무 대책이 없었고.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여덟 건이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중 예.

○김도읍 위원 그리고 작년 10월부터 우리 반도체에 대해서 특허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반도체 수입 금지까지도 고려하겠다는 이라고 있거든요, 또 더 나아가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뭘 하고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중 우선……

○김도읍 위원 저는 지금 단일 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에 대해서도 대응을 못 하는 우리 정부

가 과연 지금 지속되는 미국의 한국 수출품에 대한 규제 여기에 대해서 대응이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난번 국감에서 제가 분명하게 ‘본부장님, 한미동맹은 경제동맹과 안보동맹이 확고하게 연결되어 있다, 연관성을 가진다’ 이럴 때 본부장님은 ‘그렇지 않다’고 단언하고 선을 그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예, 별개라고 대답했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중국이 지금 대미 교역 흑자가 제일 큼니다. 한 3700억 불, 맞지요? 그리고 일본이 한 700억 불, 우리가 280억 불 정도 되는데 중국은 이제 미국이 무시 못 할 상황이 되었고 일본은 굳건한 미일동맹을 거치면서 미국의 교역 규제에 대해서 우리보다도 피해가 더 적어요. 저는 이것이 안보동맹과 경제동맹이 뗄 수 없는 관계다,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이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부장님 아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백운규 장관님, 조금 전에 김기선 위원님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어요. 이상기온 현상을 수요전망에 반영해 설비계획을 수립할 경우 전력설비의 심각한 공급 과잉을 초래한다 이런 취지로 답변했어요. 저는 탈원전을 위해서 이 정부가 전력수요에 대해서 너무 낮게 책정을 한다, 의도적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게, 장관님 그 답변이 이치가 안 맞는 게요 1979년부터 이상기온은 변수가 아니고 상수예요. 급기야 1990년부터는 환경과 에너지 관련해서는 이게 완전히 상수화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기온 흑서와 흑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전력수요에 전혀 반영을 하지 않는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4차 산업혁명이다, ICT다 전부 전기를 많이 요구하는 분야들인데 그런 분야에 치중하겠다고 하면서도 전력수요를 이렇게 낮춰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이고 조절 가능한 전력공급원을 반드시 확보해 놔야만 우리 경제의 든든한 받침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또 이렇게 안일하게 이야기를 해요, 수요감축 요청이 기업의 선택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업에 손해를 주는 것이 아니다. ‘수요감축 요청이 기업을 옥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정부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업이 급전지시에 응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기업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기업에 손해를 주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요 그것은 장관님 정말 지탄받아야 될 그런 답변 내용입니다. 왜냐? 정산금을 우리 한전에서 주잖아요. 그 정산금 다 나중에 국민의 혈세로 들어갑니다, 또 전기요금에 반영되고. 그러니까 정산금을 받아서 손해가 안 갈 것 같으면 기업이 가동을 안 하지요. 그런 상황을 가지고 기업에 손해가 없다? 기업에 당장 손해가 없지요. 그러나 산업에 손해가 있고 나중에는 정산금을 통해서 우리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2015년도의 정산금을 보면 기본정산금하고 실적정산금이 766억에 불과했는데 16년도에는 정산금이 1320억, 2017년도 정산금이 1863억이에요. 지금 갈수록 정산금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조절 가능한 전력공급원을 마련하지 않고 탈원전에만 매달린다 그러면 앞으로 국가의 미래에 큰 죄를 짓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깊이 새겨들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십시오.

중기부장관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김도읍 위원 이제 우리 국민들도 최저임금 폐단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 가지고 제가 일일이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작년 11월 9일 날 예결위를 하면서 ‘받는 사람도 실무적으로 신청 번거롭고 못 받는 분들 불만만 가질 것이다. 지원 기준을 종업원 수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인원수 기준 때문에 고용주가 고용 축소할 것이다. 취약계층은 수급자격 유지를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 못 하는 경우가 생긴다. 정작 어려운 분들에게는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문재인 정부쪽에서는 ‘아무 문제없이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노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일자리안정자금 3조 원이 문재인 대통령 쌈짓돈입니까? 3조 원 호주머니에 넣고 이 사람 줬다가 안 되니까 저 사람 줬다가 이런 정책을 펴는 정부가 어딴습니까, 장관님? 이것은 있

을 수 없는 일이에요.

1분만 더 주시면……

○위원장 장병완 3분 더 드렸습니다만, 마무리 하십시오. 1분 더 드리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장관님.

이제 와서 기재부·고용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 정부가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가 예산심사하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했었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핏수로 국무회의에서 예타 면제를 딱 해 버리고 이제 와서 이것 뒷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하성 정책실장하고 김동연 부총리 또 뭐라고 그러냐면 2000년도와 2007년도에도 십 몇 % 올리지 않았냐. 그때는요, 2000년도는 경제성장률이 9%였고 2007년도에는 경제성장률이 5%였어요. 지금 우리 3%도 장담 못 하는 상황이라는 것 이것도 계산을 안 넣은 거예요.

카드수수료 인하 해 보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연회비 올리지요,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이 받던 각종 혜택 줄이지요.

영터리 같은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을 통해 가지고 피해를 보는 것은 부지불식간에 일반 국민들, 서민들이 다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완 김도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정 위원 산자부장관님, 지금 현재 중동에서 LNG 도입하고 있는 게 한 50% 근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박정 위원 이제 계약 다시 할 시기가 2025년 근처로 한 1000만t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정 위원 그리고 중동에서 예멘 같은 경우에는 200만t 정도 우리가 구매하기로 돼 있었는데 내부 문제로 지금 전혀 그 약속이 이행되고 있지 않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정 위원 등등 해서 또 그러다 보니까, 카타르에서 우리 한국까지 들어오는데 보니까 32일이 걸리더라고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야말(Yamal) LNG 광구를 샀더니 그 개발이 성공해서 굉장히 낮은 가격에, 단위당 0.6달러 정도로 생산성이 굉장히 있게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기 정도 되면 가스 도입에 대한 다변화가 필요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박정 위원 제가 그런 것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러시아 측에서는 트루트네프 부총리 만나서 얘기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한국하고 협조할 생각이 있고, 물론 민간 회사이기는 하지만 노바텍의 미켈슨 회장도 한국이 지금 야말 프로젝트에 참여를 못 해서 야말 LNG 참 아쉽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옆에 있는 기단에 대한 LNG 개발 참여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지난 정부 때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인해서 굉장히 위축돼 있고 투자할 여력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 LNG 도입에 대한 다변화, 그리고 국가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러시아 가스에 대한 도입도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가스에 대한 구입 문제가 가스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 우리 대통령께서 1월 4일 날 거제도에 가서서 LNG 쇄빙선 5호 발주하는 것에 대한 기념행사도 가졌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굉장히 어려운 해운사업 그다음에 선박, 조선사업이지요. 그리고 또 북극 항로 개척 이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우리 LNG 수입은 에너지안보와 경제성 그리고 또 전체적인 통상하고 교역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야말 같은 경우에는 야말-1 프로젝트는 거의 중국이 독식하다시피 했고 야말-2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경제성 그리고 또 LNG가 겨울에, 동절기에 저희들이 수요가 많이 높은 데 반해서 야말-2가 개발이 되면 동절기에는 이쪽 북극 항로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수송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

면 하절기에만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거 이제……

○박정 위원 알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전체적인 수급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 위원 알겠는데 2025년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2025년에는 러시아 측에서는 1년 내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만들어서 보내 준 쇠빙선 자체의 기능이 워낙 뛰어나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고.

그것 충분한 대비가 돼야 되고요. 그쪽에서는 액화 시설에 대한 투자 그다음에 또 캄차트카의 선착장에 대한 투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본부장님도 나중에 연관이 되시겠지만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시되 이 가스를 도입하는, 단가를 싸게 구입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다른 산업과의 연관성도 감안을 하시고요.

한 가지 더, 지금 러시아대사관에 봤더니 가스담당관 한 분 나가 계시는데 그렇게 해서는, 또 우리가 가스공사에서 나가든지 그래도 가끔 비정규적으로, 그리고 이메일 같은 것을 가지고 지금 주고받기 때문에 정보를 충분히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할린-2도 그렇고 야말 또는 기단에 대한 것, 아크틱(Arctic)-2지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가스공사에 대한 지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갈 필요가 있다, 설립할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가스 다변화하는 쪽으로도 저희들 깊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완 마무리 따로……

○박정 위원 다 했습니다.

○위원장 장병완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와 직접 관계는 안 되는데 지금 박정 위원님은 가스 수입선을 다변화하자는 말씀이시고……

이인호 차관님, 지금 민간 가스발전사하고 한전 발전자회사들의 가스발전 비율 어느 정도 차이가 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팩트를 모르는데……

○위원장 장병완 박 실장님…… 아니, 박원주 실장님 알면……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 박원주 저도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완 아니,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예방정비 때문에 원전들 가동 안 하는 데가 많다 보니까 가스 발전이 좀 늘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 박원주 예.

○위원장 장병완 그런데 사실 공기기업들은 그쪽에서 제외되고 민간 가스발전사가 상대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혜택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민간이 우대받고 공기기업은 사실 오히려 홀대를 받는 저기인데, 이게 공정한 경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가스공사의 독점 공급 문제 지금 시점에서는 확실하게 저는 이것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승일 사장, 이번에 새로 취임했는데 이것 때문에 노조하고 갈등이 많이 있었지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정승일 예,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장병완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공기기업들을 민간 기업보다 더 저기하고 재벌 기업들은 오히려 혜택을 받게 하느냐는 말이지요. 이 부분은 정말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가스공사의 독점 문제는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그것은 노조에 절대 굴복하면 안 돼요.

다음은 이채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채익 위원 올해 예산으로 국립산업기술박물관 로드맵 용역비 3억 원이 반영이 됐는데 본 위원이 보고받기로는 아직도 산업부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구성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2월 달 안으로는 구체적인 용역 로드맵이 반드시 나올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특별히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산업기술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 운영·관리방안 등 정밀한 로드맵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채익 위원 두 번째로 여기 이 자리에 강원랜드 사장 계시지요?

○(주)강원랜드대표이사 문태곤 예.

○이채익 위원 산업부장관님하고도 같이 연관되는 부분인데, 강원랜드 채용비리 이 부분에 대해서 채용비리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지

금 현재 채용비리에 직간접적으로 관계될 수 있다는 추측성 직원들이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한 239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직원들을 지금 업무에서 배제시켰지요?

○**㈜강원랜드대표이사 문태곤** 예, 일단 업무에서 배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채익 위원** 그래서 부정한 절차의 여러 가지 문제라면 분명히 바로잡아야 되는데 적폐라는 이유로, 정치적 여론몰이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일도 상당히 많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폐광지역 주민과 탄광근로자 및 자녀들을 우선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폐특법 취지는 물론 카지노 업무의 특수성과 높은 이직률 또 위장전입 취업 등의 문제로 강원도와 폐광지역 자녀들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다수 추천되었고 또 채용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강원랜드의 여러 가지 업무 특성상 정규직이 아닌 분들은 교육생 선발과정 또 한 6주 정도의 교육과정 또 실습과정 6개월, 인턴과정 6개월 또 계약직 과정 1년을 거치면서 그야말로 많은 어려움과 인내의 시간을 보내서 업무 적성과 능력을 평가받아서 비로소 정규직원이 되는 특수한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요즘 언론에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된다고 해서 아직까지 완전 확정되지 않은 직원들을 239명이나 업무에서 배제시켰다 이것은 나는 온당치 못한 일이라고 보는데, 사장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강원랜드대표이사 문태곤** 정확하게 226명에다가 저희 내부 직원이 청탁한 것으로 나오는 게 1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3명에 2013년에 채용된 226명 이렇게입니다. 그런데 여러 모로 검토를 해서 정부 방침도 그렇고 저도 생각은, 일단은 기소장에 점수가 조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채익 위원** 자, 그런데 지금 시간이 없는데요.

사실 강원랜드는 김대중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채용이 제일 많이 되었어요. 지금 공식적으로 말하기가 좀 그래서 내가……

○**㈜강원랜드대표이사 문태곤** 저는 하여튼 증거에 입각해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채익 위원** 사장은 내가 답변 기회 줄 테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지금 현재 239명이라고 하는 직원들을 강제로 업무에서 배제시킨 것은

나는 온당하지 못하다. 그리고 조사하려면 민주당 정권 때도 다 해야지 왜 그렇게 편파적으로 해요?

그리고 239명 이 부분도 확정되기 전에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본 의원실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랜드대표이사 문태곤**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기소가 되고 하는 것은 사법적인 조치이고요. 업무 배제는, 저는 행정적 조치는 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민들의 분노라든가 채용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비리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제가 취할 수 있는 필요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따로 설명은 드리겠습니다.

○**이채익 위원** 사장은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고 무겁게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랜드대표이사 문태곤**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채익 위원** 이게 한두 명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은, 아직까지 정확한 사실 규명이 되지 않은 입장에서 그 지역민들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또 이름이 오르내리는 직원들에 대한 사기 문제도 나는 판단해야 된다……

○**㈜강원랜드대표이사 문태곤** 그 부분은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솔직히.

○**이채익 위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원자력문화재단 관계자 나와 있습니까? 오늘 참석 안 했어요?

그런데 백운규 장관님, 원자력문화재단이 작년 11월 말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으로 사명을 바꾸었습니다. 이것을 국회에 보고도 없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원자력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회사명을 다 바꿀 수 있어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원자력환경공단(KORAD) 저 부분도 사명을 바꿀 때는 입법사항이었고 국회 본회의에서, 원자력 문제는 중요하다고 해서 국회에서 입법사항으로 사명을 바꾸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원자력문화재단을 한국에너지정보재단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일방적으로 바꾸고 원자력 이 부분을 뺀

수 있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사명은 지금 원자력이 축소되는 입장에서 전체적인 에너지 정보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가 더 높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 그런 취지에서, 포괄적인 의미에서 사명을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채익 위원 하여튼 백운규 장관 취임한 이후에 각종 업무 추진을 보면 거의 국회를 무시하는…… 어떻게 이런 중요한,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원자력과 같은 이런 중요한 국가 에너지정책을 국회에 보고 하나 안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조금 전에 이찬열 위원께서도 월성 1호기 문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월성 1호기도 분명히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빠졌던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수소감시설비 설치공사 29억짜리는 공사를 이행하고 있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일을 계속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원자력환경공단 같은 명칭은 법의 개정사항이 맞습니다. 다만 원자력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민법상의 재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 산업부가 승인을 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채익 위원 이것은 산업부의, 본 위원이 파악하건대는 산업부의 지시에 의해서 사명을 바꿨다 했는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저는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채익 위원 회사 자체적으로 사명을 바꾸었습니다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저희들한테 승인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이채익 위원 원자력문화재단이 알아서 사명을 바꾸었다는 말이에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채익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건대는 산업부장관께서 ‘이제 이 정부는 원자력하고는 거리가 머니까 원자력 이것을 빼라’ 그렇게 해서, 지시에 의해서 했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이것 위증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저는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채익 위원 그런데 그쪽에서는 거의 다 장관

께서 지시했다고 얘기를 하던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그쪽에서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채익 위원 아니, 원자력문화재단이 사명을 정부의 승인이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사명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민법상의 재단이고 사명에 대한 변경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준 그런 사안입니다.

○이채익 위원 본 위원은 근본적으로 지금 원자력문화재단도 마찬가지로이고 한수원 이사도……

○홍의락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채익 위원 한수원 이사도 탈원전 교수들이 임명을 내정받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위원장 **장병완** 이채익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이채익 위원 거의 탈원전정책으로 이렇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방금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조사해서……

제가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그러겠습니다.
.....

○홍의락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장병완** 홍의락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홍의락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서로 약속된 시간이 있으면 가능하면 그 시간을 지키고 또 보충질의하고 추가질의하는 제도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 원칙에 위배되고, 2분 컷다가 1분 더 컷다가 자꾸 이런 식으로 가면, 기본 다 자기가 계획한 시간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무질서하게 위원장님께서 운영해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완** 예, 가급적이면 정해진 시간 내에 해 주시고, 보충질의를 안 하신다는 조건으로 하실 경우에만 드리고 있는데……

○홍의락 위원 본질의를 하고 보충질의를 안 하면 되지 왜 그것을 한다는 조건으로 자꾸 그렇게 편법으로 사용합니까?

○위원장 **장병완**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송기현 위원 한수원 부사장님 나와 계시지요?

한수원 전영택 부사장님 나오셨나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발전부사장겸발전본부장 전취수** 발전부사장 전취수입니다.

○**송기현 위원** 발전부사장 나오셨나요?

최근에 효성과 현대중공업의 변압기 담합 의혹 때문에 한수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많지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한수원에 관련되어서, 특히 원전에 관련되어서 신문보도가 났을 때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한테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발전부사장겸발전본부장 전취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기현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모 일간지에 미인증 변압기라는 게 보도가 됐어요, 그렇지요? 아시지요, 미인증 변압기?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발전부사장겸발전본부장 전취수** 예.

○**송기현 위원** 그런데 뭔가 해서 또 찾아봤더니 이게 실재는 미인증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지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발전부사장겸발전본부장 전취수** 예.

○**송기현 위원** 효성 2공장에서 납품한 것이 납품한 기간이 인증이 안 된, 연장 안 된 기간에 납품이 됐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신문에서는 ‘미인증 변압기가 납품이 됐다’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그것을 만든 시점은 인증 기간 내에 다 만들고 인증 기간 내에 포장까지 다 되어서 딜리버리(delivery)만 미인증 기간에 인도 가 된 거더라고요.

(장병완 위원장, 이채익 간사와 사회교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발전부사장겸발전본부장 전취수** 예, 그렇습니다.

○**송기현 위원** 그러면 그것은 미인증 변압기가 아닌데, 아니면 정확하게 그 언론보도에 대해서 ‘이것은 아니다, 국민께서 안심하셔도 되는 인증된 변압기다’ 그렇게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하시고 계셔서 국민에 대한 홍보 부분,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또 같은 문제인데, 거기에 보면 한국전력기술 기준의 인증을 못 받은…… 해당이 되는데 그것도 안 받은 것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또 보니까 그것은 해당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지요, 변압기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발전부사장겸발전본부**

장 전취수 예, 그렇습니다.

○**송기현 위원** 전력산업기술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변압기는. 그 부분도 잘못된 보도인데…… 자칫 하면 가짜나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데 거기다 더해서 인증받지도 않고 위험한 그런 것을 납품해서 원전을 운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국민들이 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한수원에서 아닌 것은 아니고 설명을 해 주시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발전부사장겸발전본부장 전취수**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언론사에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언론에도 그런 보도자료를 작성을 하고 배포를 해서 가능한 한 사실이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더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송기현 위원** 그렇게 하세요. 특히 원전은 국민들이 안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항이니가 정보를 정확히 전달해 주시고요.

중기부장관님, 장관님이 취임하시기 전에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문제가 많이 됐던 홈앤쇼핑 문제인데요. 그때 장관님이 취임하시기 전이라서 내용은 정확히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국정감사에서 문제점은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하시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잘못된 정관을 고치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외부인을 포함하는 감사도 하겠다 이렇게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올해 1월 달인가 감사계획서도 아마 저희 국회에 제출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이행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정관 고치겠다고 한 것, 정관이 이사회 내 평가위원회를 폐지하고 또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를 이사회의 승인을 안 받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게 잘못되어 있으니까 폐지를 하겠다, 변경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국정감사 때 약속한 게 지금 또 아무런 절차가 이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또 외부인이 포함된 감사를 받겠다 해서 감사위원회에서 결정까지 했는데 그것도 무슨 법률자문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도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것 좀 중기부에서 책임지고, 그때 위원님들께서 여러 명이 말씀하신 내용이고 사실 이게 1~2년 된 문제가 아닌데 지난번에 약속까지 한 사항이 이렇게 이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챙겨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가 진행이 되고 그 감사 결과에 따라서 진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감사를 거부하는 바람에 차질이 좀 빚어졌습니다. 제가 다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현 위원** 그때 중기중앙회장님도 하겠다고 여기서 약속을 하셨는데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건 꼭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챙겨보겠습니다.

○**송기현 위원** 간단하게 산업부장관님, 지난번에 원주까지 오셔서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된 문제에 관심 가져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그런데 제가 몇 가지 하다 보니까 그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든 게 그거예요. 실제 여러 부처에 관련된 사항이 다 들어가 있는데 각 부처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지요. 원주 같은 경우도 그 업무가 복지부와 관련된 업무가 거의 대부분이고 실제 복지부에서 해야 되는 게 많은데 산업부에서만 와서 하시니까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그래서 과기정통부에서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주무부처로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부처 간에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제가 한경 밀레니엄포럼 때 이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받았습시다. 그래서 제가 당일 날, 금요일이었지요. 지난주 금요일 날 평창 개막식 가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님 뵙고 봄까지 2명의 장관이 원주에 가서 이 바이오·헬스에 대한 4차산업 접목해서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저희들이 좀 선물을 가지고 가자, 선물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규제를 완화 아니면 규제철폐를 통해서 그런 산업들이 더욱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 업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능후 장관님도 그것을 흔쾌히 승낙하시고 저희들이 지금도 국장급에서는 서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바이오·헬스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속히 마련해서 바이오·헬스가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현 위원** 4차 산업혁명 대비하는 정부 역할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규제를 적절하게 해제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율자동차 같은 경우도 보면 산업부·국토부·환경부 3개가 같이 연결되어 있고 바이오·헬스 같은 부분도 산업부와 중기부하고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보건복지부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규제를 적절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부처가 정말 협업이 잘 돼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위해서는 항상 얘기하지만 거버넌스가 딱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산업부가 주무부처니까 그런 부분을 특별히 더 신경 쓰셔서 한꺼번에 딱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채익** 송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택 위원** 산업부장관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7월 24일이나 지금 7개월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우택 위원**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장관 부임하시고 산업정책이 어떻게 바뀌느냐 유심히 보고 있는데 별 바뀌는 게 없어요. ‘장관’자 앞에 ‘산업’자가 제일 먼저 들어가는데 이 나라의 산업정책이 과연 어떤 기조로 가고 있는지, 지금 어떤 변화를 장관께서 꾀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걸 다 논할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서비스산업 같은 데에 고용 효과가 높다는 건 지금 누구나 다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정우택 위원** 그러면 서비스산업 이것에 어떤 정책을 펴는지는 모르겠는데 박근혜 정권 때 하던 규제프리존법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까, 묵살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간단하게, 길게 들으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계속 질문할 거니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지금 장단점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규제 샌드박스 이런 것들을……

○**정우택 위원** 규제 샌드박스를 대체 개념으로 하고 있는 것 제가 알겠는데 그 기본적인 개념

자체를 계속 밀고 나가겠다는 것인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정우택 위원 그런데 저번에 초안 만들었다고 하다가 또 초안 안 하겠다고 해서 이미 보도도 되고 그래서 초안 자료 좀 달라고 그랬더니 담당 과장은 또 제출 못 하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만약 장관께서 규제프리존법을 규제 샌드박스로 해서 지역특구법이니 만들겠다는 의도가 있으면 초안 같은 것도 같이 협의도 하고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왜 그걸 숨기고 안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결국 내용을 보면, 제안이 유 보면 규제프리존법이나 지역특구법이나 제안 이유가 똑같아요, 똑같아. 각 지자체를 시도라는 말로 바꾼 것 말고는 똑같은 내용을 갖고서 규제프리존법은 박 정권이 했으니까 말 바뀌어서 규제 샌드박스로 해서 이걸 하겠다는 건지 그 의도도……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강한 의지가 있는 것을 장관께서 표현을 안 하고 계시다, 지금 그걸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 의도가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실증이 최고 중요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지역이 선정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저희들이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우택 위원 제가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이것만 지적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런 산업정책이나 여러 가지 정책이 그래도 산업부만큼은, 다른 데는 내가 모르겠지만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요, 반기업 정서 또 반시장 정서를 갖고 정책을 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제가 들어보면 많은 분들이 지금 산업부가 국민 소리 귀 닫고 있고 또 기업 소리도 귀 닫고 있고 국민 정서 이해 못 하고 또 시장 상황도 거의 고려하지 못하고 있고 세계 추세하고는 동떨어져서 가고 있고 이런 지적들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런 점에 대해서, 오늘은 제가 이것만 지적하겠습니다. 반기업 정서, 시장 정서에 반하는 정책은 장관께서 과감하게 떨쳐내고 소신 있게 기업 정서에 맞는 또는 우리 시장 정서에 맞는 정책을 계속 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대표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산업

부가 그런 모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대한상의 특강 했고 오늘 아침에도 한경 밀레니엄포럼 가서 특강을 했습니다. 많은 산업체, 기업인들이 이제 걱정을 누그러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우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 초과해서 또 얘기하면 저 홍의락 위원한테 야단맞아요.

그러니까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강조하는 건 반기업·반시장 정서에 맞는 정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우택 위원 잘 선택해서 잘하시라는 말씀만 제가 강조하겠습니다.

홍 장관께 여쭙보겠습니다.

지난 2월 4일 날 KBS ‘생방송 일요토론’에 나가서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거기서 보면 ‘최저임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이 가장 혜택을 받는 분들이다’ 또 ‘아파트마다 주민들이 나서서 경비원들 임금을 올려 주자고 하고 있다’ 이것 도대체 어느 시장을 보고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예를 들어서 현대아파트 이런 데 보면 경비원들 전원 다 채용 안 하겠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어느 아파트 가서서 보셔 갖고, 물론 그런 데도 있겠지요. 그런데 아파트마다 주민들이 나서서 경비원들 임금 다 올려 주자고 한다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과연 장관께서 현장을 제대로 보고 다니시는 건지 또 어떤 시청자들은 그 말씀에 아연실색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지금 조그맣게 썼지만 언론에서 다…… 지금 시커멓게 나온 게 다 언론에서 경보음 또 적신호 보내는 얘기가 계속해서 매일같이 나오고 앉아 있는데 장관께서는 지금 눈과 귀를 닫고 듣고 있는 게 아니냐 또 장관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현장 편식주의자가 아니냐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답변드릴 시간은 드리는데, 한마디만 더 드리면 제가 모 중견 건설하시는 분 한번 만나 봤어요. 자기네가 외국

인근로자 800명을 쓰고 있대요. 그런데 이분 말씀은 자기네가 연간 한 200억 인건비가 나가는데 요새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233억 원이 나갈 것 같대요, 금년에. 그러면서 여기다 근로시간까지 단축돼서 추가 인력을 더 써야 되면 정말 회사 운영하기 어렵다 이렇게 나와요. 제가 지금 중견 기업 얘기했지만 중소기업 얘기 들어보면 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종별·지역별 탄력 적용을 한번 검토해 주실 건지 또 두 번째는 근로시간 문제도, 물론 환노위 쪽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전체 총량 중에 조금 바쁠 때는 더 쓸 수 있게 하고 덜 바쁠 때는 시간을 세이브해서 바쁠 때 쓸 수 있는 것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근로시간을 탄력 운영하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현재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굉장히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서민경제에 돈이 돌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고 일자리안정자금 3조 원과 그다음에 보험이라든가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약 5조 원 정도가 서민경제, 서민들의 지갑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것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어려운, 시간이 걸려서 그 기간까지 어렵기 때문에 지금 대기업도 나르고 프랜차이즈 본점들도 나르고 이렇게 다 상생의 기운이,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되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구요.

지금 경비원들은 성북구의 많은 아파트단지, 150개 단지 중에서 상당수가 동행계약을 채택하고 있고요. 이것이 인근 구로 옮겨 가고 있고 지금 전국에서 굉장히 많은 아파트에서 이런 현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남의 아파트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미 그전에 소송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해고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분명히 그렇게 해서 해고되는 아파트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민들이 나서서 함께하는 것이 경제에 굉장히 도움이 크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종별이나 이렇게 최저임금 적용을 달리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타당성이 있어서 지금 최저임금산정위원회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중소기업부 입장에서는 중소기업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내부에서 이런저런 반론들이 있어서 지금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의 경우에도 중소기업, 특히 소규모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상당한 유예기간을 주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현장에 가서 그런 어려운 사정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있고 지금 현재 그런 타당한 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정책으로 반영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이렇게 차근차근히 해결을 해 나가게 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채익**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여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구 위원 **충남** 당진 출신 여기구입니다.

홍종학 장관님, 최저임금 때문에 요즘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지요? 최저임금이 잘 정착이 되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잘 조치를 취해 주시고 현장을 자주 나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도라는 것이 항상 장단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득과 실이 있는 건데 어떤 제도를 하게 되면, 정책을 하게 되면 실보다는 득이 많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이 최저임금이 사회에 잘 정착되어서 그야말로 소득주도성장이 잘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각별히 현장을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여 질문하게 되면 4차 산업혁명에서 스마트공장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여기구 위원 그래서 지금 정부도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2만 개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그렇습니다.

○여기구 위원 그리고 2020년까지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5만 명을 양성하겠다 이렇게 두 가지 큰 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지금 정책을 추진하고 계신데 이게 2022년까지 2만 개 보급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현 상태로 보면? 실제로 보니까 매우 어려운 것 같은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여기구 위원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중소기업이 가야 될 길은 스마트공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스마트공장을 적용한 기업들은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월 중에 스마트공장 확산계획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책이 마련되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산단과 업종별 중심으로 대표적인 스마트공장의 시범공장들을 만들고 그래서 그 효과를 다른 기업들에게 알려서 확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지금 전개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되고 나면 내년도부터 예산이 좀 보충이 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구 위원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관련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스마트공장이 확산되면 기존 일자리가 파괴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유념해서 스마트공장이 좋은 일자리 창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실제로 스마트공장을 적용한 많은 기업에서는 오히려 일자리가 늘어난 기업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기구 위원 독일 같은 경우는 또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우리 방에서도 토론을 하시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알겠습니다.

○여기구 위원 그다음에 산업부장관님, 오늘 업무보고 아주 잘 봤는데요. 정말 산업정책, 에너지 정책 이러한 것들이 잘돼서 국민들이 체감할 있도록 올해는 각별히 열심히 더 일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구 위원 여기에서 빠진 부분 몇 가지를 제가 보충해서 질문드리면, 지금 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지금 장관님께서 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하고 있습니다.

○여기구 위원 지금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파견·용역 비정규직이 몇 명이나 되고 있는 것으로 산업부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전체적인 비정규직에 대한 수치가 제가 가지고 있는 전환계획……

○여기구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파견·용역 비정규직이 약 3만 2000명 정도 됩니다. 제가 산업부에서 가지고 온 자료를 보니까 자체적으로 3만 2000명 중에 1만 6000여 명만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 파악하고 계신가요, 장관님? 한 절반 정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제가 가지고 있는 숫자하고 조금 다른데요, 위원님.

○여기구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3만 2000명 중에 1만 6942명을 전환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한 절반 정도인데, 지금 현장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약속을 하셨고. 그런데 한 절반 정도 전환할 계획이다라고 지금 산하 공공기관에서는 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제가 가지고 있는 숫자는 3만 5000명 중에서 1만 8000명 정도 전환 예정으로 되어 있고 그게 한 51.6%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구 위원 51.6%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여기구 위원 어차피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아

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그런데 전환 계획은 고용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수립한 잠정적인 계획이며 실제 정규직 전환 인원은 기관별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가 노·사·전문가 협의체에서 논의해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기구 위원** 지금 협의체에서 협의하고 있습니까? 이게 협의체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고 저희 방에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저희들은 지금 노·사·전문가 협의체를 통해서 논의를 계속 해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기구 위원** 이것 별도로 보고를 저희 방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현장에 그렇지 않거든요.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고 또 협의체가 구성됐다고 하더라도 노동계 위원을 사측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지원한다 이런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장관님께서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고 저희 의원실로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어기구 위원** 그리고 공공기관 입찰 비리, 불공정 하도급 건에 대해서도 저희 방으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간 대기업과 똑같이 공기기업들도 원청의 갑질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장관님께서 그냥 단순히 사법기관이나 공정위의 판단에만 맡기지 말고,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가지고 산하 공기기업들 공공기관 입찰 비리, 불공정 하도급행위 철저히 근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기구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채익**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유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유섭 위원** 산자부장관님, 올 겨울 무척 추웠습니다. 그래서 최대전력 예측보다 초과한 날이 16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고 등유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등유가 월 소득 100만 원 미만 가정에서 21%

가 난방용으로 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이 등유 공급이 지금 완전히 예측하고 어긋나 가지고 판교물류센터는 2월 5일 날 14시 30분에 등유 출하가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산자부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자료요구를 해서 이것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산자부에서 일시적인 거고 2월 8일부로 정상 출하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2월 10일 날 상황 보겠습니다. 판교물류센터, 2월 10일 날 ‘출하 중단’ ‘재고 없음’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그다음 날 인천물류센터, 12시간 동안 등유수송차량이 대기입니다.

이것 북한도 아니에요. 이것 우리나라예요. 최하층민들이 쓰는 난방유가 등유입니다. 서민 위한다고 하면서 왜 이런 것 제대로 공급 못 해 주니까? 말씀해 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위원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석유제품 수요 중에서 등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2.1% 정도 수준의……

○**정유섭 위원** 2.1%밖에 안 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정유섭 위원** 그러니까 서민들만 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난방유로. 그런데 이분들 서민 난방유 여기에 개별소비세 또 그것까지 붙입니다. 개별소비세, 물론 기재부장관이 아니시니까 답변드리기가 어렵겠지만 그래도 서민들을 위해서 개별소비세 낮출 생각은 없습니까, 문제인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섭 위원**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저희 지역구에 한국GM이 있어서 아까 이찬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안 물을 수가 없어요. 4년간 적자가 3조고 직원이 1만 6000명, 협력업체까지 30만 명이예요. 제가 GM 알아보니 GM에서 이것 추가 투자 불가능하고 현금유동성도 없대요. 이것 거의 철수하거나 문닫는 게 맞아요. 이럴 경우에 우리 한국 경제와 인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노조가 매년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생산성은 계속 떨어져요. 내가 경영자라도 이런 것은 철수해요.

그런데 보니까 기재부장관하고 협의를 했더라고요. 증자하고 재정지원 논의를 기재부장관하고

논의했다고 인정했어요. 그리고 아까 이찬열 위원 물었을 때 산자부에서도 협의를…… 와서 인 사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최소한 이 GM의 철수 문제에 대한 산자부의 입장이 뭔지, 산자부의 컨트롤타워가 어딘지, 어느 부서에서 이것 담당하고 있는지 그것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제자 제 지역구 문제이기 때문에, GM 어떻게 할 건지 산자부의 어디서 누구한테 이것 물어보면 돼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산업부의 자동차 항공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유섭 위원 과가 이걸 결정을 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물론 그 위에 시스템산업국이 있고 그 위에 산업기반실이 있습니다.

○정유섭 위원 GM에서 요구하는 것은 분명하 더라고요, 정부 재정지원 해 달라. 거의 3조 요구 하는 것 같아요. 이것 할 건지 안 할 건지 진짜 신중하게 검토를 좀 해 주셔서 저한테도, 제 지역구인데 GM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정부의 정확한 수치를 저희들한테 요구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이게 조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님실에 가서 직접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섭 위원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중기부장관님, 임용되시고 처음 뵈었는데 중기부장관님은 유명한 경제학자 출신이시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저임금 문제 있잖아요, 이것 참 이상주의적이고 당위성 있고 참 좋은 거예요. 왜 1만 원만 해요 최저임금을, 2만 원 하지? 그런데 2만 원 못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임금 주도 성장한 나라들이 보니까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태리, 브라질, 베네수엘라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나라 임금 주도 성장한 나라 없어요. 어려운 사람들의 소득을 보호해 주고 취약계층한테 돈을 지원해 줬지 임 금으로 주도 성장한 나라 여기서 성공한 나라 있습니까?

아니, 유명한 경제학자로서 그러면 왜 최저임 금을 1만 원만 합니까, 2만 원 안 하고? 물론 홍 종학 장관님 취임 전에 최저임금 인상된 건 저도 알아요. 그러나 지금 중기부장관이시고 유명한

경제학자시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저임금 주도 성장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그 당시에 최저임 금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때 그때 대선 주자 다섯 분이 전부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했기 때 문에 그것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판 단하고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 시 사용자들도 7300원을 제안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이미 결정은 된 것이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최저 임금을 올렸지만 이렇게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 으로 5조 원 이상을 지원하고 또 민간의 대기업 에서부터 프랜차이즈까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서 지원하는 사례는 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이 사례를 잘만 성 공시킨다고 한다면 저희가 생각할 때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정유섭 위원 저도 1분만 주십시오.

장관님, 장관님이 다니시는 데는 모범기업이나 잘되는 데만 가서서 그래요. 소상공인들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소상공인의 대변인인 줄 알았 더니 이번 정부가 소상공인의 배신자라고 그래 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현실에서 국민이 최저임금을 수용 가능해야 돼 요. 대선 주자 다 올리자고 했지요. 그러나 어느 국가든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의 한 두 배 수준 을 오버해 버리면 이게 수용이 불가능해요. 그러 면 엄청난 부작용이 생기고 엄청난 충격이 옵니 다. 그게 지금 온 거예요 한계기업들한테, 그리고 일선 자영업자들에게. 이분들 입장을 전혀 고려 하지 않으시고 무작정 시행했기 때문에 저번에 보니까 김동연 부총리께서도 좀 속도 조절을 해 야 되겠다 부작용을 느끼는 거예요.

중기부장관님이 다니는 업체들 현장점검하는 것은 다 잘되는 데만 다니시더라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못되는 데 다니셔 가지고 그 사람들 가슴에 울분 에 찬 얘기 들어 주고 제대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그런 얘기 많

이 듣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소상공인들 얘기 많이 듣고 있고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워낙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에, 서민경제에 돈이 돌지 않아서 그런 것이고 서민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서민경제가 좀 좋아지게 되면,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이 좋아지게 되면, 소득이 높아지게 되면 이분들이 구매하는 곳이 바로 중소기업 물건이고 소상공인 물건들을 많이 파는 곳에서 구매를 하실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걸 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긍정적인 면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정유섭 위원 아니 장관님, 경제학자시라면서 최저임금 너무 올리면 고용 떨어지고 경제성장 떨어지는 것 인정 안 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반면에 정부의 모든 정책을 일자리정책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예를 들면 저희 중소기업부의 중소기업 지원도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작용이 틀림없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부가 지금 총력을 기울여서 그 부작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도 지금 이게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건데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어느 쪽이 우세할 것인가 그것에 따라서 정부가 추가적인 대책을 계속 내놓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채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운천 위원 질문할게요.

산자부장관님, 지금 영덕에 있는 천지 원전 1·2호기 땅 한 80만 평 보상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보상됐습니까? 백지화시킨 게 20% 보상하고 나머지 80% 지금 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계속 그냥 왔거든요. 그 계획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거기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정운천 위원 아니, 지금 벌써 몇 개월이 됐는

데…… 8차 수급계획도 보고했고, 그 후유증에 대한 뒷설거지는 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운천 위원 열심히 하는데 보상 어떻게 언제, 금년 안에 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전체적인 토지에 대한 이용률 그리고 또 다른 용도변경 이런 전반적인 것을 지자체하고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운천 위원 사전에 정부가 계획 세워서, 그게 백지화되면…… 그때 계속 얘기했잖아요, 수출전략지구로 만들든 아니면 그런 것으로 해서 토지 보상하라고. 정부가 계획 세워 놓은 것을, 우리 국민들이 피눈물 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장관님 오시면 똑같은 답밖에 없어요. 시간이 가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가 제일 잘못하는 게 뭔지 압니까? 속도 조절이 안 돼. 그리고 타이밍을 잘 못 맞춰요, 타이밍, 속도가.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일 힘든 게 최저임금 속도 조절이 필요한데 속도가 너무 빨리 가 버린 것 그 뒤치다꺼리하느라고 그렇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천지 원전 거기 백지화했어요, 8차 수급계획에. 그러면 거기의 뒷설거지하는 이야기를 하라 하면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고, ‘고민 중에 있다’ 정도가 말이 되겠습니까?

다음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2357억 들여서 8년 동안 차세대 원전 원천기술 개발 APR+ 그것은 아예 백지화됩니까, 그냥? 2357억 원의 공금이 들어간 돈인데, 8년 동안 투자한 건데 그것 살립니까, 죽입니까?

아까 보니까 사우디 원전 수주 가능성 제고를 위해서 고위급 인사가 방문한다는데 사우디에서도 분명히 APR+ 원할 겁니다, 아마. 최고 원천적 기술인데 그것 원하지 않겠어요? 원하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아직 그 정도까지는 원하지……

○정운천 위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그리고 실증 레코드가 있어야 되는데 실증 레코드가 아직 부족한 상태입니다.

○정운천 위원 그래서 2357억을 들인 것을…… 이번에 3차 에너지기본계획이 있다면서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정운천 위원 거기에다 넣든,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드릴게요. 원전을 줄이는 게 안전 때문에 그렇다면 노후화된 월성 2호기나 3호기 이런 걸 조기 폐쇄시키고 차세대 원전 최고의 원천기술을 살려 내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정책 방향에도 맞고 또 새로운 차세대 원천기술 개발을 통해서 세계 수출전략으로 확대 발전시킬 수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전체적인 원전에 대한, 새로운 APR+에 대한 기술은 실증에 대한 레코드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체적인 미국의 NCR 규정이라든지 유럽의 기준에 저희들이 계속 시간적인 절차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원전에 대한 것들은 계속 균등한 발전……

○정운천 위원 제가 답변을 중단시킬게요.

지금 장관님 답변은 진짜 알맹이가 없어요. 장관님이 하시는 건 알맹이 있게 해 주셔야 돼요. 정치인이 아닙니다. 행정의 최고 수장은 지금까지의 일에 대해서 실질적인 얘기를 여기 와서 해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항상 답변이 그 정도예요.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수출전략지구로 하면 네 가지의 효과가 나요. 차세대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600조나 되는 세계 수출생태계를 구축하고 또 800명의 미보상된 사람들 보상해 줘야 되고, 그래서 안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노후 원전 조기 폐쇄하고 새롭게 개발된 것을 다시 거기다 투입해서 문재인 정권이 원하는 것도 하고 또 문제 해결도 하고, 이런 대안을 마련해 와 가지고 오늘 제가 질문하면 분명히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몇 번을 얘기해도 답변은 똑같다.

답변하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위원님 아시다시피 원전에 대한 수출은 이번 정부가 계속 추진을 해 나가는 상황이고 제가 그것 관련해서 2월 달에도 UAE하고 사우디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다만 원전을 수출한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수익구조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APR+ 같은 경우에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기종이기 때문에 APR+를 가지고 수출해

나가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여건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운천 위원 검증되지 않았으니까 백지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원전에 대한 수출과 함께 또 원전의 차세대 기종의 필요성, 전체적인 시장이, 마켓이 어떻게 나가느냐에 따라서 준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운천 위원 그 기본계획에 꼭 넣을 것을 검토하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채익 정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동수 위원 한국GM 대책 관련해서 저한테도 같이 보고를 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수 위원 장관님, 지금 현재 원전 24기 중에 10기가 정비·점검 이유로 중단되어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10기 맞습니다.

○유동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2017년도 가동률이 71.3%고요. 올해 1월 원전 가동률이 57.5%에 불과하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유동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원전 가동률 저하가 자연스럽게 원전 발전 비중의 저하를 가져왔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유동수 위원 작년도에 몇 %인지 혹시 아세요, 전체 발전 비중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30% 중반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수 위원 15년도 31%에서 16년도 30.3%인데 작년도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27.2%로 떨어져 있습니다. 27.2%로 떨어지다 보니까 원전 가동 중단에 따라서 발생한 고정비용이 1조 한 40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수원의 2017년도 당기순이익이 한 8000억 정도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2016년도 대비해서 한 1조 6000억 정도 줄어든 금액입니다.

장관님께 여쭙보겠습니다.

정비·점검이 끝나면 원전 가동률을 정상화시킬 겁니까, 아니면 일부러 이렇게 줄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지금 원전을 저희들이 일부러 정지시키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전반적인 예방정비……

○**유동수 위원** 그러니까 정비가 끝나면 가동률을 정상화시킬 거다 이렇게 생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몰랐던 원자로 내의 녹슌 현상을 봤습니다.

○**유동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있어서 중지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정비·점검 끝나면 정상화시킬 거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유동수 위원** 그다음에 작년도 11월 5일 날 가스공사 인천본부에서 사고 난 것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알고 있습니다.

○**유동수 위원** 그 내용을 보면 완전히 인재라는 것 아시지요, 보고받으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유동수 위원** 액위측정기 2기 중의 1기는 10월 10일 날 고장 났는데 사고 당일인 11월 5일까지 보수 중이었고 나머지 1기는 작동도 안 되고, 이 머전시 셧다운 설비도 자동으로 설정되어야 하는데 임의로 해 놓고, 그다음에 하역작업 중 네 차례 6시간 동안 계속 오차가 발생했는데도 인지하지 못하고, 야간근무 취약시간대에 설비운전원 3인이 6시간 동안 세 사람이 똑같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지들끼리 2시간씩 순환으로 근무한 것, 그다음에 운전 총괄 책임자인 1공장·2공장 생산 담당자가 5시간 반, 5시간 동안 자리를 비웠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자리를 비운 사실 보고도 기지 본부장이 안 해 버리고. 이런 사고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최소 27억에서 한 96억 정도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장관님 보고받으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유동수 위원** 어느 하나도 제대로 작동하는 곳이 없습니다. 완전히 당나라군대입니다. 그중에 누구 하나라도 정신 차리면 사고 안 날 게 전체가 다 통괄적으로 근무태만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그래서 저희들 사고 책임자에 대해서 엄정한 징계를 했습니다.

○**유동수 위원** 징계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유동수 위원** 징계했는데, 불법행위의 고의 또는 중과실은 구상권 청구하게 되어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유동수 위원** 그런데 법무법인한테 구상권 청구할 수 없다는 답변서 받아 갖고 구상권 청구안 하려고 하고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지금 법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수 위원** 그냥 구상권 청구하시고 재판에서 결과 나오면 안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대야지 일벌백계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다시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수 위원** 이게 국민의 생명하고 직접 관련되는 겁니다.

중소기업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기술임치제도 있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유동수 위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하고 있는데요.

일단 임치할 때 30만 원 내고 수정하고 할 때 마다 5만 원씩 더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단계별로 자료를 임치해 가지고, 아카이브해 가지고 증거 자료를 계속 임치해 놓으면 기술보호가 되는데 여기 센터 자체도 ‘다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 해라’ 이렇게 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용 문제라든지 절차도 좀 간소화해서—기술탈취 굉장히 중요하니까—이 임치제도를 좀 활성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술탈취 문제에 대해서 당정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거기의 핵심 중의 하나가 바로 임치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저희 생각에는 대기업이 기술자료를 요청했을 때 그러면 중소기업이 지금 거부할 수가 없으니까 주고 싶지 않은데 줬을 경우에는 임치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조용히 내가 이런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충분히 증거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가격도 좀 더 낮추고 그리고 또 디지털화해 가지고 가격 낮추는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동수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상관분석 정보 시스템 작년 7월 16일 날 정부에서 발표했는데, 예측 정보까지 제공하겠다, 그리고 창업 과밀지수 대상 업종을 30개에서 45개로 하겠다, 그다음에 유망업종·입지 추천하는 창업 기상도 구축하겠다, 또 소상공인 과밀지역을 선정하겠다, 이런 대책 만들어서 발표했거든요.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관분석 정보 시스템이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서 분석 시스템까지 해 달라고 제가 작년 국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십시오. 추가질의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채익 예.**

○**유동수 위원** 제가 가장 주장하고 싶은 게 뭐냐면 창업 전 단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테리어 하기 전 단계, 그 전 단계부터 과밀지역이라든지 과밀 업종에 안 들어가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자체나 국세청, 사업자 등록 하기 전에, 사업자등록 신청하러 오면 그 단계에서 상관분석이나 정보 시스템을 해서 반드시 한 번 거치도록 이렇게, 그래야지……

이게 굉장히 과밀 업종·지역이니까 인테리어 하기 전 단계부터, 돈이 안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임대까지는 괜찮은데 인테리어 해 놓고 그다음에 여기 과밀 업종·지역이니까 다른 쪽으로 유도하는 게 설득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전 단계에서 미리 설명하는 제도를 좀 갖춰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알겠습니다.

사전에 홍보가 많이 되어 있다면 아마 그렇게 될 것인데요 지금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행정 절차 중에 어느 단계에서 홍보를 하면 이게 효과가 있을지 다시 한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동수 위원** 홍보하고요 그다음에 창업 전 단계에서 미리 알려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저도 지난번에 가서 한번 시험을 해 보니까 상당히 고도화되

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도화 작업이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채익** 수고하셨습니다.

홍의락 위원님, 제가 여당 위원들한테 더 많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홍의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락 위원** 산업부장관님, 4차 산업혁명을 문재인 정부에서 앞세우고 있는데 산업부에서는 스마트시티를 하는 데 역할이 뭐가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국토부가 전체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를, 어떤 형태의 스마트홈이 가전이 되고 그다음에 자율주행차는 어떻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설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국토부는 하드웨어적인 것이고 저희들이 그 안에 들어가는 소모품……

○**홍의락 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산업부의 역할이 눈에 안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서 금방 말씀하신 소프트웨어산업이라든가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로드맵이 산업부에서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게 없으면 이게 어떻게 갈지를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지금처럼 하면 저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스마트 신호등, 스마트 가로등 이렇게 만들고 스마트시티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각 부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모여서 정말 진지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여쭙보고 싶어서 말씀드렸고.

또 오늘 업무보고를 보면 혁신 생태계 산업 기반 조성에 대한 산업부의 고민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장관님 취임하시고부터 이제까지 죽 보고를 들으면서 일관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장관님께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태계 산업 기반 조성에 대한 고민이 있어가지 지금 그게 없이 그냥 이렇게 백화점식 나열을 해서는 정말 우리 미래가 걱정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설명하시기는 그렇겠지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 는 겁니다. 정말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올해 에기본을, 에너지기본 계획을 해야 되는데 정말 1·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해서 평가하고 반성 꼭 해 주십시오. 지난 번에 8차 전력기본계획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도 보면 결국 경제성장률이 둔화되었기 때문에 전력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그 말 한마디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니까 지금 계속 급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우려들이 나오고 하니까 분명하게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도 전원 세부 활용 방안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인 문제 해법을 찾아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또 에기본을 만들면 굉장한 여러 가지 혼란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에너지전환에 관련된 전원의 역할을 재평가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구조적인 문제 해법, 전력시장 문제를 고민하지 않고는 저는 신·재생에너지 3020은 불가능하다. 가는 길을 보여 줘야 되는데 가지도 않으면서 자꾸 간다고 얘기하면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전 정부하고는 좀 다른 측면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홍종학 장관님한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기존 창업보육센터하고 다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가져오면서 여러 가지 인프라나 멘토링 이런 것을 다 그쪽으로 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보육센터 하던 일과 중첩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조금 더 살펴보시면 좋겠고, 이게 걱정스러운 부분이 좀 있어서 언급하니까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의락** 위원 살펴봐 주시고.

그다음에 최저임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용보험에 대한 얘기도 있고 또 지금 대학생 아르바이트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받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 더 주세요.

안고 있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계속 몇몇 장관님들이 같이 토론하고 풀지 않으

면……

방향은 분명히 맞는 것 아닙니까? 방향은 맞는데 그것을 해 가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니까 장관님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다른 부서, 고용노동부라든가 다른 장관님들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꼭 풀어 주시면……

지금 제가 대구에 있으면 소문이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끝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대기업 기술탈취·특허 침해 문제들이 지금 장관님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 여기 한전도 와 계십니다—한전 경찰청 한국장학재단 서울교육청 안전행정부 이런 부분들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실은 기술을 탈취했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도 공개적으로 정부 측에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이러한 부분인데 이렇다라고 얘기해야 우리가 대기업보고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정부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침해하는 게 없는지 저희가 적극 살펴보고 그리고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의락** 위원 감사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저도 간략하게 답변을……

○위원장대리 **이채익** 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지금 홍의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4차산업에 대한 우리 산업부의 준비, 걱정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4차산업이라는 게 아직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기술들이 많고, 거기에 따라서 스마트시티를 계획함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모르는 기술을 적용해야 되는 스마트시티를 만든다는 그런 갑갑한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 더 여지를 갖고 스마트시티가 계획이 돼야 된다고 지금 국토부에 이야기하고 있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저희들이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관계 부처 간의 협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산업부가, 지금 신산업이라든지 새로운 산업정책을 가지고 제가 대한상회에 가서도 강의를 한 1시간 정도 했습니다. 오늘 아침도 한 30분가량 환경 밀레니엄포럼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 강의를 듣고 난 청중들 대부분의 의견들이 ‘아, 듣고 나니까 산업부가 조금 뭔가 방향성을 가지고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만약에 상임위에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상임위 위원님을 대상으로 제가 그 강의를 간략하게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차 전력수급계획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의락 위원** 장관님, 강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업무현황을 받아 보면 흐름이 없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그게 제한된 페이지에서 저희들이 다 표현을 못 한 것 같습니다.

○**홍의락 위원** 제한된 페이지라 하더라도 제가 계속 보면, 예를 들어 4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 손에 잡히지는 않지요. 그러나 산업부에서는 그 길에 대해서 로드맵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서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 보여야 되는데 산업부 오늘 보고서를 보면 예를 들어서—제가 지적을 안 하려고 했지만—철강, 조선 이쪽에 가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 놓은 게 있어서 이것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그쪽은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

○**홍의락 위원** 주력산업이지만 해 놓은 게 예를 들어서 조선에 가서 스마트 친환경을 하겠다, 스마트 기자재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것은 내 눈에는 뜬구름 잡는 얘기같아 보여요. 그래서 ‘아, 스마트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한번 지적을 드리는 거니까 같이 고민을 해 봅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채익** 됐습니다.

다음은 홍익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익표 위원** 중기부장관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홍익표 위원** 지금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잘 알고 계

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홍익표 위원** 지난번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최저임금 인상분에 따른 공공 조달 납품단가가 좀 조정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왜 몇 가지 문제가 있냐면……

공공 조달 납품단가 결정 방식에 있어서 인건비가 포함되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홍익표 위원** 그런데 이 인건비를 시중 노임단가로 하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맞습니다.

○**홍익표 위원** 시중 노임단가가 최저임금하고 연동되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홍익표 위원** 그 경우에……

그런데 시중 노임단가는 10월 달 돼야 결정이 돼요. 예를 들면 금년 같은 경우도 조정이 금년 10월 이후에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0월 이전에 계약되는 것은 사실상 그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시중 노임단가 조정을 좀 당겨서 상반기 이내로 하시거나, 아니면 시중 노임단가를……

연중으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그 계약 기준을 발표해 주면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금년 같으면 1월에 발표해서 3월까지 적용하고, 시중 노임단가 4월에 발표해서 6월까지 적용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시기를 조정해서? 그래서 좀 현실화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한번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재부하고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공공 조달의 경우에 지금 노임단가가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조사 시기를 여러 개로 나누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최저임금 자체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 더 나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익표 위원** 어느 방법이든 이게 현실화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예산이 필요하다면 기재부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적

극적으로……

왜냐하면 이것은 정부가 먼저—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지만—적정 가격을, 단가를 받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민간의 자율적 시장경제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지만 지금처럼 최저입찰제가 아니라 물가 인상분 그다음에 최저임금 인상분 등등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적정입찰제로 해 줘야 되거든요, 시장에서도. 먼저 정부가 그것을 빨리 선제적으로 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빨리하겠습니다.

○**홍익표** 위원 아울러서 지금 일자리안정자금 문제, 이게 몇 가지 좀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금 중소기업부장관께서 노력을 해 주셔서 210만 원까지 상향을 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210만 원까지 상향한 것은 아니고요 190만 원인데……

○**홍익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과세 항목을 좀 포함시킨 것 아니겠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홍익표** 위원 총액이 210만 원까지인데, 그런데 이 경우도……

예를 들면 총액이 210만 원을 넘어도 실제 기본급 관련된 부분은 180이고 비과세 한도가 한 40만 원이 된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예외가 되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거기에서 한 20만 원 정도까지만 지금 비과세를 인정해 주고 있는 겁니다.

○**홍익표** 위원 그것을 좀 더 늘릴 수는 없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

○**홍익표** 위원 왜냐하면 노동계 쪽에서는 상당히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조금만 일해도 20만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잔업수당이나 초과근로수당 하고 나면 대부분 이백 한 사 오십만 원까지 올라가 버린다는 것인데 이것은 실제로 노동시장 현실하고 좀 동떨어져 있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노동부장관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 가지고 비과세 부분 폭을 좀 확대해 주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저희 중소벤처

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입장을 하여튼 최대한 정부 내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익표** 위원 그리고 지난번 한번 말씀드렸던 소상공인 전용카드 문제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구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홍익표** 위원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서류 작성이 매우 복잡하지요. 서류 작성 간소화 여러 차례 지적했는데 이것 좀 빨리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고용보험 가입 때문에, 4대 보험 가입 때문에 지금 신청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시그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소 기준을 좀 완화하는 게 하나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일자리안정자금이 이미 작년 예산안 통과할 때 저희가 합의한 게 앞으로 한 3년 동안 계속적으로…… 내년 예산에도 금년도 예산 수준만큼 반영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채익 간사, 장병완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만큼의 지원이 계속된다라는 어떤 시그널을 분명히 해 주시면 좋겠어요, 신호를요. 그러니까 ‘이게 금년 한 해에 그치는 것 아니야?’ 이런 시장의…… 아직 홍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금년 한 해 지원하고 끝나는 것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익표** 위원 그러다 보니까 4대 보험 가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금년 한 해 대충 넘어가고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불안감이 있는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그렇습니다.

○**홍익표** 위원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계속 지체되고 있어요, 신고가.

왜냐하면 금년 10월 달 가서 신청을 해도 금년 1월부터 소급 적용하다 보니까 자꾸 늦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현장에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조기에 신고를 해 달라고 해 주십시오. 만약에 자칫하면 10월 달 넘어가서 해서는 도리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청을 하고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예산의 특성을 좀 설명

하면서 고용노동부하고 또 행정안전부하고 협의 해서 대상 기업들에게 또는 대상 근로자들에게 빨리 설명을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기 신청 여부를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대개 2월 말에서 3월 초가 되면 전반적으로 그 추세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위원님 말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익표 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산업부장관님께는 한 가지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소 조선사 그다음에 GM자동차, 금호타이어 등 여러 가지 산업 부문의 불확실성들이 너무 커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산업부가 조기에 좀 더 잘 관리해 주시기를, 필요합니다. 제가 따로 설명을 또 듣기는 하겠지만 그만큼 시장에 대한 우려도 높고 하반기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 중에 매우 대표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구요.

김현중 통상교섭본부장 역시 한미 FTA 지금 까지 잘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믿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우리 국내 기업들의 문제를 잘 이해해 주시고. 특히 세이프가드나 덤핑 때문에, 미국의 무역구제제도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제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면……

○위원장 **장병완** 백 장관님, 중소 조선사 구조 조정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중견 조선사 같은 경우하고 대형 조선사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호황일 때 그리고 재작년도하고 작년도 전체적인 발주량에서 보시면 2016년도 발주량이 한 1300만t, 작년도에 한 1900만t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클락슨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한 4200만t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것은 너무 장밋빛 숫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한 3500만t 정도가 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3500만t의 시장이 열렸을 때 과연 어떤 중견이라든지 대형 조선사의 구성이, 포트폴리오가 형성되어야지 전반적인 경쟁력이 있는

지 그리고 어떤 특정 기업이 그런 호황의 시기가 오더라도 그 기업이 그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산업적인 측면에서 지금 고려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중견기업들이 각자의 기업의 특성이 조금씩 다르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다른 점을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함께 보고 있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 KPMG가 실사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저희들이 협의해야 될 내용들이 많고 또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시원스럽게 모든 것들을 답변을 못 해 드리는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병완** 혹시 통상교섭본부장도……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중** 아까 홍 위원님께서 세이프가드에 대해서 언급하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 위원님, 세탁기 관련 세이프가드는 이번 3월 달에 제소를 할 겁니다. 2월 달에 제소하려고 했는데 그것 안 하는 이유가 지금 아직도 보상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로 세이프가드는 공정하게 된 무역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승소하자마자 소위 말하는 무역 보복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세탁기 세이프가드를 부과하기 전에 세탁기 반덤핑에 대해서 우리가 승소한 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WTO 차원에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그 역시 그것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무역, 미국 상품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약 7억 1000만 불어치에 대해서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곧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탁기에 대해서는 수출 다변화 또는 대체 수출시장을 찾고 지금 여러 가지 다방면 차원에서 더 노력을 해서 우리 기업들이 애로사항을 좀 더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참고로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삼성은 사우스캐롤라이나하고 LG는 테네시주에 투자를 해서 거기서, 그나마 다행인 게 시장점유율은 앞으로 몇 년 후면 더 좋아질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도 갖고는 있습니다.

.....
○위원장 **장병완** 홍익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께 질문드릴게요.

공공기관 80%가 채용 비리에 연루됐다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김수민 위원** 산업부도 마찬가지로 오늘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 보니까 산하 공공기관 채용 비리 근절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지금 한 줄도 안 쓰여 있더라고요.

지난 1월 29일에 중소벤처기업부도 포함해서 17개 부처가 참석해서 기재부 주관으로 공공기관 채용 비리 관련 부처 회의 하셨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김수민 위원** 이것 보니까 내용이 지금 공공기관 275개 중에 257개에서 2311건 채용 비리가 적발됐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여기에서 2000건이 넘는 채용 비리를 적발해 놓고 수사 의뢰를 지금 47건, 5%밖에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솜방망이나 아니냐 이것은 문제가 아니고, 일단 이 자리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니까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하는데, 제가 중벤처 산하 공공기관에서 수사 의뢰가 된 세 군데 공공기관—한국벤처투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유통센터—대상으로 열흘 간 직접 대면 설명을 한번 받아 봤거든요.

먼저 한국벤처투자 보면 ‘고위 인사가 면접에 직접 참여해서 특정인을 계약직으로 채용한 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수사대상에 올라 있더라고요. 이 내용 잘 알고 계시실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김수민 위원** 한국벤처투자의 대표이사가 된 모 이사님이 전에 일하시던 투자증권에서 알고 있던 여비서를 채용했어요. 그런데 해명을 뭐라고 했냐면 ‘대표님과 전에 있던 회사에서 같이 근무한 것은 맞지만 같은 부서는 아니었고 다른 임원의 비서였다’라고 대답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전임 대표께서 투자증권에 근무하실 때 다른 임원의 비서였던 이 직원을 굉장히 예뻐하셨나 봐요. 이분을 뽑는 과정에서 대표이사 직접 면접장에 들어가서 채용을 결정하셨거든요.

이 채용 절차가 공채로 진행이 됐는데, 지원자

들의 입장에서는 해당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전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던 여직원을 특혜채용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참 박탈감이 크겠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마찬가지예요. 당초 계획과는 달리 합격 배수를 확대하고, 고위 인사가 직접 면접 평가에 참여하여 특정인을 채용했다고 하네요.

세 번째로 보면, 중소기업유통센터 채용비리 관련해 가지고 한번 보면 정부의 채용비리 합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인사부서를 배제하고 일선 부서를 통해서 고위 인사의 지인을 특혜 채용했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수사의뢰가 되어 있어요. 잘 알고 계신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김수민 위원** 이 내용 어떤지 알고 계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김수민 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어떤 거요? 유통센터요?

○**김수민 위원** 예.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저희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어서 이미 퇴직……

○**김수민 위원** 아니,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시냐고요. 제가 어떤 내용인지 여쭙본 거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기관장의 지시로 기관장의 지인을 특혜채용 한 내용이라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시다.

○**김수민 위원**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자회사인 공영홈쇼핑 설립 과정에서 인사 채용비리가 나왔어요. 신설 TF 및 준비단에서 인력·인사 부서가 아니라 TF에서 직접 채용을 했다는 것인데, 이때 부당하게 채용된 인원이 총 몇 명이라고 알고 계시죠, 장관님께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저는 1건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수민 위원** 10명입니다. 이 10명 모두가 고위 인사의 지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고위 인사는 것이 대표이사 맞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지금은 그만됐습니다.

○**김수민 위원** 이 채용비리 적발 내용에 대해서 중소기업유통센터가 해명을 이렇게 해 왔습니다. ‘자회사인 공영홈쇼핑 설립 과정에서 TF 및 준비단을 통해서 채용을 한 것일 뿐이다’ ‘미래부 승인이 워낙 긴박하다 보니 인사팀을 거칠 시간

적인 여유가 없어서 TF와 준비단에서 대표이사의 결재 받고 뽑았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시간이 없고 긴박하면 고위 임원의 지인들을 대표이사 결재만 받고 절차적인 투명성과 모두가 합의한 공정성에 대한 절차를 다 무시하고 마구 뽑아도 되는 것인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아닙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필요한 경우 지금 고발을 해 놓은 상황이고요.

○김수민 위원 지금 중기유통센터가 중기부에다가 처분요구서를 보내 달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처분요구서요?

○김수민 위원 무슨 내용인지, 본인들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으니 처분요구서를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저희가 지금 조직 혁신TF를 가동해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은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산업부장관님께서서는…… 지금 국민의당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외압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안을 발의해 놓은 상황입니다. 무너진 공정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데 산업부도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완** 김수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훈 위원 장관님,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것인데 한전·한수원하고 효성·현대 담합 관련해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보하신 효성에서 근무하시던 김민규 전 차장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발전공기업에서 발주한 7건의 변압기 구매사업에서 담합한 것으로 나오는데, 그중에 효성이 직접 수주한 것이 4건, 효성이 들러리 선 게 3건 이 정도 됩니다.

그중에 2010년에 신울진 1·2호기 변전설비 사업 같은 경우는 현대는 변압기를, 효성은 차단기를 수주했는데 이들이 이 담합판을 짜면서 투찰금액, 낙찰금액 등등을 다 짜고 했어요, 보면.

이 과정이 되게 복잡한데, 그중에서 효성이 수

주한 차단기 장치 같은 경우는 이 핵심부품이 다 일본 제품입니다, 미쓰비시라는 데서 가져오는 것이고. 국내에는 미쓰비시로부터 독점 수입하는 업체가 있어요. 거기로부터 다시 또 효성이 납품 받아 가지고 사실은 이중으로 빼먹는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효성이 이 과정에서 막대한 차익을 남기고 원가를 부풀렸다는 의혹까지 있습니다. 문제는 한전은 이것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이 있고요.

그 외에도 효성은, 2010년도 200억 원 수준의 UAE 원전 변압기 사업 따내기 위해서 효성 측은—저도 이런 얘기가 있다는 게 너무 웃겼는데—독수리 3형제라고 불리는 한수원 관계자들한테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까지 지금 있어요.

물론 지금 공정위하고 검정, 검찰·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워낙 중요하니까 산업부나 한전이나 한수원 스스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감사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아주 그것도 치열하게 해야 됩니다. 외부 손에 빌리는 것도 빌리는 것이지만 자체적으로도 좀 철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지금 한수원은 전 효성 직원의 입찰담합 제보 이후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으며 공정위·경찰에서 담합 여부를 조사 중인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체적인 감사의 수준에서 떠나 있는 상태인데, 자체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자체적인 감사 진행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 위원 왜냐하면 이게 자체감사를 해야 되는 게 자기 스스로 자기 개혁하는 데 대한 기본적인 기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본인들이 본인들의 잘못을 스스로 밝혀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앞으로 한전과 한수원이 이런 문제로부터 얼마만큼 자유로울 수 있는지에 대한 분명히 지렛대가 될 것이다, 잣대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전안법 아시지요? 지난번에 통과가 됐는데, 이 하위법령 관련해 가지고 제가 우려스러운 것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1월 26일 날 안전기준준수대상 품목안이 발표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평가항목에 보면 리콜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어. 그러니까 상품에 따라서 보면 리콜이 가능한 것이 있고 가

능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폴리염화비닐관이라고 해서 PVC 파이프관이 있어요. 이것 같은 경우는 대부분 매립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리콜이 불가능해, 그게 설사 불량이나 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명이 되더라도.

리콜과 관련해서도 평가항목에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판단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위해도 항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용 지팡이, 고령자용 휠체어 테이블, 고령자용 지팡이 등 이런 것들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품목 하나하나에 대한 업계의 민감도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하위법령을 만드는 데 산업부나 관련 산업 공무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업체들로부터 얘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다 무시하고라도 아주 철저하게 안전에 대한 문제, 왜냐하면 안전과 관련해 가지고 전안법을 이렇게 해 놓으면 안전에 혹시라도 핑크 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위법령을 만드는 데 좀 더 치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이훈 위원 그리고 산업부가 곧 있으면 제13차 장기천연가스 공급계획 공고할 예정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이훈 위원 그런데 12차 보면 발전용 천연가스 수요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 보면 실수요 전망이 아니라 전원별 설비계획 중심으로 전력계획을 반영하는 바람에 오차가 커, 실제로 보면요. 그래서 이번에 13차 할 때는 이 오차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판단하는 데 실제 실수요 전망 위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천연가스 비중 확대 가능성, 천연가스가 현재는 구매자 시장 우위로 해 가지고 민간 직도입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에 대한 진단과 책임 부과 문제, 앞으로 어느 정도 지나가면 다시 이게 바이어스 마켓(buyer's market)으로 전환된다는 우려도 있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줘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중장기 물량 계약 체결에 대한 계획도 좀 세워야 할 것 같고, 앞으로 다른

동료 위원들이 얘기했듯이 LNG하고 PNG에 대한 최적 수준의 믹스 문제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어떻든 할 것이 많아.

그런데 문제는 천연가스 공급계획을 국회에 보고 안 해요, 지금 상황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전력수급계획처럼 에너지기본계획이나 녹색성장기본계획, 전력기본계획하고의 정합성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에 사전에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한번 논의해 보시고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그것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간단히 드리는데, 근로시간 단축하고 최저임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커다랗게 보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조금 더 우려하고 있고요, 영세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제를 더 우려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보면 뿌리기업 같은 경우는 근로시간 단축을 하면 구인난이 문제예요. 지금도 사람이 없어 가지고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늘려 달라는 수준의 요구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각각의 분야별로, 기업 규모별로 지금 당장에 급하게 생각하는 현안들이 좀 다르다는 점들을 명심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최저임금 문제는 산업기준에 대해서 빨리 그 불투명성을 해소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는 보면 다시 노사정위원회인가 거기로 넘어간 듯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논의를 기다려서 산업범위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 입장을 분명히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해야 된다, 다른 것을 다 떠나서. 방향이 어떻든 간에 불확실성 제거가 시급하다는 측면에서 얘기를 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꺼졌는데, 죄송합니다. 이것 하나는 꼭 물어보고 싶은데…… 지난번에 조선일보 2월 1일 자로 기사가 났는데—저도 나중에 읽어 봐서—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으면 이것 소득세 신고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취지의 해석을 국세청에서 내렸는데, 이것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정부 내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아닙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사실무근이라고 이미 보도자료 냈습니다.

○이훈 위원 발표하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완** 이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대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곽대훈** 위원 대구 달서갑의 **곽대훈**입니다. 통상교섭본부장님, 앞서 답변에 세탁기와 태양광 미국의 세이프가드에 대해서…… 세탁기는 3월 중에 WTO에 제소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태양광은 안 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태양광도 합니다.

○**곽대훈** 위원 3월 달에 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예.

○**곽대훈** 위원 그런데 그동안 WTO에 제소한 현황을 보면,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소에 우리가 승소한 경우에도 미국이 제대로 이행을 안 하고 시간을 도파시켜 가지고 그냥 끝나버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우리가 그 이후의 수단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행을 강제한다든가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수단들이 어떤 것이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위원님, 만약에 이행을 안 하면 우리가 미국에서 수입된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추가로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곽대훈** 위원 보복관세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이때까지?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우리가 지금까지 그 전에 협의를 다 해 가지고 끝났기 때문에 한 적이 없습니다.

○**곽대훈** 위원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안 했다?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예.

○**곽대훈** 위원 앞으로 그러면 협의가 되지 않으면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우리 그것 진행해야 됩니다.

○**곽대훈** 위원 앞으로 이제, 이번에 승소를 해도 미국이 이행하지 않으면 하실 수 있다 이런 얘가지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예.

○**곽대훈**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한미 관계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으로 봐서는 사실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관해서 본부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이게 WTO에서 우리의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의 권한을 우리가 이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곽대훈** 위원 그러면 그 전 정부에서는 왜 그렇게 안 했지요, 나왔을 때?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아마 두 당사국들끼리 협의를 해서 원만한 해결책을 찾았기 때문에 아마 진행이 안 됐을 것입니다.

○**곽대훈** 위원 알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현재 세이프가드 발동에 따라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우리 국내기업이나 그 해당 기업이나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어떤 것이 있냐고, 예를 들면 피해금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제가 답변을 받아 보니까 ‘지금 현재 산정하기 굉장히 어렵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산업부에서는 사전에 기업이나 관련 업계의 얘기를 들어서 한 번씩 예상을 해보지는 않습니까?

그 전에 장관님 답변을 보면, 세이프가드 발동 이전에 국회에서 또 여러 가지 간담회 자리에서 하신 것을 보면 ‘해당 기업이나 관련 업계와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국내기업의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부는 아예 손 놓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세탁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20만 대 쿼터……

○**곽대훈** 위원 아니, 세탁기와 태양광의 대미 수출액이 적어도 한화로 1조씩 다 넘는단 말이지요. 그러면 세이프가드가 발동됐을 때 우리 국내 산업에 또 국내 해당 기업에 어느 정도 피해가 되는지는 산업부가 어느 정도 관련 기업과 협의해서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저희들이 지금……

○**곽대훈** 위원 그러면 너희는 세이프가드에 의해서 손해 보든지 말든지 팽개쳐 놓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저희들이……

○**곽대훈** 위원 장관이 이때까지 에너지만 챙기다가 이것은 안 챙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저희들이 이것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워낙 민감한 자료이기 때문에 대외……

○**곽대훈 위원** 왜 민감한 자료라고 해서 국회의원한테 제공을 안 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저희들이 의원님실에……

○**곽대훈 위원** 못 믿어서 그렇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저희들이 의원님실에 따로 보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대훈 위원** 공개할 수 있는 것은 공개를 해서 관련 기업으로부터 또 산업계로부터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턴기업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산업부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유턴하겠다는 기업이 0.4%밖에 안 돼요. 1299개 중에서 한 5개 정도는 ‘유턴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턴기업 관련 법령이 2013년도에 시행이 됐는데 그동안에 이게 부진한 이유와 앞으로 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역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13년 이후 유턴 정책을 본격 시행을 했습니다. 다만 총 43개 정도의 기업이……

○**곽대훈 위원** 그건 다 아는 것이고, 안 들어오는 이유가 뭡니까? 복귀하지 않은 이유가 어떻게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영세한 중소기업이 대부분이고……

○**곽대훈 위원** 그러니까 영세한 중소기업이 복귀하고자 했을 때 산업부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책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외투기업에 준하는 그런 지원 정책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지에 나가서도 낮은 인건비 구조 내에서도……

○**곽대훈 위원** 장관님은 아까 정운천 위원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정치인처럼 얘기해요, 정치적인 발언만 하시고. 실질적으로 기업이 유턴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홍종학 장관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곽대훈 위원** 그런데 장관은 경제학자시고 또

전직 국회의원을 하셔 가지고 이론 또 현장도 잘 아시리라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상당히 기대를 했고, 또 오늘 장관으로서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대통령께서 일자리안정자금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시고 난 뒤에 장관이 이런 얘기 했어요.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산하기관에 매주 한 번씩 길거리에 가서 홍보하라고 지침을 줬다고 그랬는데, 장관이 지침을 준 바가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제가 취임하고 나서요, 저희 중소기업부는 서비스 기관으로 전면 탈바꿈하기를 선언했구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곽대훈 위원** 제가 일자리안정자금에 관해서는 말씀을 안 하겠습니까마는 적어도 중소기업부장관은 산하기관에 매주 한 번씩 나가 가지고 길거리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하라고 홍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예요, 내가 알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일자리안정자금……

○**곽대훈 위원** 장관님, 그게 아니고, 산하기관이나 장관님이나 중소기업부 직원들은 현장에 나가야 돼요, 현장에. 현장 기업들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 것인지 파악을 해서 일자리안정자금뿐만 아니고 이와 같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에 관해서 중소기업부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했어야 된단 말이지요.

지금 오늘까지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이 얼마쯤 됐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지금 상당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대훈 위원** 얼마나 늘어났어요? 몇 % 됐어요? 제가 파악하니까 2월 7일 날 11%인데, 빠르게 늘어나서 몇 % 신청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지금 제가 2월 9일까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15%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대훈 위원** 저는 중소기업부장관께서는 직원들을 몰아쳐 가지고 길거리에 나가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하게끔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현장에 파고들어 가서 기업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곽대훈** 위원 지금 현재 장관이 파악하고 있는, 지금 현재 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뭐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지금 저희는 아직 저조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이게 월급이 지급되고 나서 신청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1월 말이 지나서 2월 초가 돼서 본격적으로 지금 신청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2월 달까지 저희가 지금 목표하는 게 47% 정도 거든요. 그래서 그 추세에 비하면 크게 지금 저조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애로사항을 듣는 거고요. 홍보하면서 또 애로사항 듣고, 그래서 시정사항 있으면 저희 본부에 얘기해서 지금 개선해 나가는 이런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곽대훈** 위원 장관님, 지금 현재 일자리안정자금과 관련해서 장관이 직접 수도권 외의 비수도권 기업에 가서 얘기를 들어 본 적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대전에 가서 들어 봤습니다.

○**곽대훈** 위원 대전하고 수도권에 있는 기업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수도권에 비해서 열악한 것은 사실이고요. 크게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비슷했습니다.

○**곽대훈** 위원 비슷한 것이 아니고, 제가 기업주라도 지금 현재와 같은 이런 상황이면 비수도권으로 가서 기업 할 생각이, 엄두도 못 낸단 말이지요. 그만큼 지금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임금 격차가 굉장히 큼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다른 위원도 말씀을 주셨는데, 수도권과 비수도권뿐만 아니고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물론 이게 장관님 소관 사항은 아니지만 장관님께서도 중소기업뿐만 아니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정책을 펼치시기 때문에 지역별로 최저임금제에 관해서 차등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는 중소기업 입장을 정부 내에서 대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합리적인 의견은 정부에서 지금 받아들여졌습니다. 예를 들면 30인 미만이었다가 고용이

늘어나면, 30인이 늘어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지금 개선이 되었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지적이 된 것처럼 비과세가 되는 그런 연장근로의 경우에 포함을 해서 대개 한 20만 원 정도 더 받아도 일자리안정자금의 혜택을 받는 그런 경우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진을 한 결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곽대훈** 위원 잠깐만요.

장관님,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금년 2월 7일 날 나온 자료를 보면 5인 이하 소상공업체의 지역별 임금 통계를 보면 전국이 100만 원인데, 100만 원 넘는 곳이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경기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지금 현재 제주자치도는 82만 원, 전북은 81만 원밖에 안 된단 말이지요. 임금 격차가 굉장히 크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방에서 기업 할 사람이 없단 말이지요.

지금 현재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현장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하고 있던 말이지요, 채용이 아니고.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들을 잘 알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일은 바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 추가적인 그런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완** **곽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부장관님, 아까 이훈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13차 LNG 수급계획 작업 중이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병완** 그런데 전력수급계획은 보고가 지금 의무화가 되어 있는데 LNG 수급계획은 국회 보고가 지금 아직 의무화는 안 되어 있습니다 마는, ‘그것을 산업부에서 국회에 보고해 줬으면 좋겠다, 나중에 향후 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하는 취지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완** 지금 어떤 식으로 작업하고 있는지 담당 에너지실장은 저한테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다음은 권철승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권철승 위원 권철승입니다.

홍종학 장관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홈쇼핑이라는 업체를 잘 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권철승 위원 운영상에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했고, 작년에 경찰의 압수수색도 있었습니다. 국감 때도 많은 문제점이 제기됐고, 또 그 문제점 중에서 명확하게 밝혀진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중기중앙회·농협·기업은행·중기유통센터를 합치면 78%가 주주가 됩니다.

그런데 지난 1월 16일 날 홈쇼핑의 감사위원회 명의로 종합감사를 의결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문제가 제기되니까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 회사인 이 홈쇼핑에서 감사를 거부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알고 있습니다.

○권철승 위원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저희도 감사를 하고 나서 그 감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려고 그랬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감사를 거부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주들끼리 상의를 해서 조치를 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권철승 위원 이게 지금 주주들끼리 상의를 해서 조치를 한 거거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그렇습니다.

○권철승 위원 아니, 어떻게 도대체 이럴 수가 있지요? 이게 외부에서 감사단이 들어간 게 아니고요. 잘 아시다시피 내부기관인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의결을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또 다른 의혹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계속되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이 꼭 좀 챙겨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감사를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철승 위원 예, 그렇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따라서 더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철승 위원 그리고 최저임금 관련해서 이훈 위원님과 저는 같은 의견인데요. 산업범위 문제가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최저임금만으로는 실질소득에 대한 계산이 사실 기준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정책효과가 많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 있게 기준을 마련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권철승 위원 그다음 통상본부장님께 간단하게 한번 여쭙어보겠습니다.

협상 이전에는 농산물 레드라인이라든가 FTA 폐기도 고려한다는 입장이셨는데 1, 2차 협상 이후에 혹시 협상전략에 기조가 바뀐 게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지금 우리 협상팀은 레드라인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권철승 위원 FTA 폐기도 고려한다 이렇게 처음에 전략이셨는데 그것도 여전히 유효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FTA를 폐기하겠다는 언급은 아니었고요. 지금 FTA가 만약에 우리한테 불리하고 아니면 조건이 굴욕적이면 우리도 이것은 체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철승 위원 중국도 지금 태양광 세이프가드 받았지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세이프가드는 유니버스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에 해당이 됩니다.

○권철승 위원 그래서 중국도 지금 같이 걸렸다고 들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예, 중국, 멕시코, 캐나다, 한국 다 걸려 있습니다.

○권철승 위원 그런데 중국은 미국산 수수 수입에 대해서 반덤핑조사를 하겠다고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이것에 대한 보복이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 우리도 이런 공격적 수단이 있습니까? 검토는 하고 있습니까? 제소와 같은 방어적 수단 말고 이런 공격적 수단도 고민하고 있으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위원님, 제 생각에는 그건 좀 매우……

○권철승 위원 알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좀 바

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권철승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업부장관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급전지시와 관련해 가지고 이게 탈원전 정책의 후유증이다 이렇게까지 언론에서 공격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권철승 위원 그런데 급전지시가 감축요청 기준을 낮춘 건 사실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감축요청을 낮추지는 않았…… 그러니까 DR 지시, 저희는 ‘급전’을 쓰지 않는데 DR 지시를 시행령 규정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철승 위원 그것 낮춘 건 사실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낮추진 않았습니
다.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권철승 위원 88.2GW에서 85.2GW로 낮췄다고 하는 걸 제가 어디 자료에서 본 것 같아서, 그것 낮추지는 않았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그렇지 않았습
니다.

○권철승 위원 그러면 DR 등록용량을 4.4GW에
서 2031년까지 8GW로 높인다는 목표를 가진 건
사실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지금 DR의
전반적인 것은 2014년도에 저희들 시행령 만들어
서 운용하고 있는데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
다시피 DR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들
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
분히 예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같이
12GW 정도의 예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는 저희들이 DR을 요청할 당시에 전
체적으로 한 10GW 정도의 여유분이 있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의해서 저희들 어쩔
수 없이 DR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그런 DR의 시행령을 저희들이 조금 손을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권철승 위원 그러니까 급전지시가 한 번도,
만약에 1년 내내 한 번도 없었다 하더라도 들어
가는 예산이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권철승 위원 그게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그게 1800억 정도
돼 있습니다.

○권철승 위원 거의 2000억 가까이 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권철승 위원 그렇다면 이 급전지시 했던 계약
업체가 급전지시가 떨어졌을 때 계약한 만큼의
전력량을 반드시 감축을 해야 됩니까?

1분만 주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계약 자체는 당연히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지
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계약은 자율
적으로 하고 감축에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권철승 위원 그러니까 감축지시가 왔을 때 여
유분이 있는 만큼, 계약업체에서 자기들이 감내
할 수 있는 양만큼만 전기를 줄이면 되는 거지
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권철승 위원 그렇다면 이 자체의 계약내용 때
문에 공장을 스톱시켰다든가 생산 활동에 지장이
있다든가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것 아닌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참여에 대한 결정
권은 전적으로 민간업체에, 참여하는 민간업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권철승 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했더라도, 계약
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권철승 위원 그러니까 기본급으로 받는 그 부
분을 참여를 덜한 비율만큼 지원금을 까나가는
방식으로 돼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그렇고 3회
참여를 하지 않게 되면 원래는 쓰리 스트라이크
아웃이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손을 봐서 세 번
참여하지 않더라도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
게 시행령을 저희들이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권철승 위원 여유가 있을 때 급전지시가 떨어
지지 않도록 하는 방식을 찾아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권철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완 권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윤한홍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한홍 위원** 산업부장관님께 방금 급전지시와 관련한 이야기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급전지시라는 것은 예외적인 사항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요즘에는 저희들이 급전지시라는 단어를 사용……

○**윤한홍 위원** 그러니까 말은 DR 쓴다 그러는데 그게 예외적인 것 아니에요? 시장에서는 예외적인 현상인데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일상화됐어요. 올 겨울에 지시를 몇 번 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열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한홍 위원** 열 번, 그게 2014년~16년 그때 보니까 딱 세 번 했더라고요, 2014, 15, 16년 사이에. 그런데 올 겨울에 벌써 열 번 했습니다. 일상화됐다고.

지금 원자력발전소 몇 기가 수리한다는 명분으로 놓고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10기가……

○**윤한홍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난 8차 수급계획이 연말에 확정 됐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윤한홍 위원** 그런데 연말에 확정될 때 8차 수급계획에 보면 최대전력수요가 올 겨울에 8520만 kW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6일 날 최대전력수요가 8824만kW, 304만kW 초과했습니다. 아직 8차 전력수급계획 잉크가 안 말랐어요. 그런데 이 300만kW가 벌써 오버했다고.

7차 전력수급계획을 우리 이인호 차관님 계실 때 하셨나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제가 그 담당은 아니었습니다.

○**윤한홍 위원** 담당 아니셨나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윤한홍 위원** 7차 전력수급계획 때 최대전력수요가 8820만kW입니다. 그 숫자가 정확하게 올 겨울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탈원전이라는 이념도 좋지만 현실하고 안 맞는 거예요. 벌써 올 겨울에 급전지시, 여러분들은 표현을 DR로 바꿨다고 하지만 벌써 열 번을 했어요, 올 겨울에. 그래서 300만kW가 지금 부족했어요, 최대전력수요치에. 이제 일상화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참여한 기업에 대해서? 얼마

지원이 됐지요, 올 겨울에 벌써? 한전에서 지원합니까? 전력거래소야 돈이 없을 거고 한전에서 지원합니까?

한전 사장님 계세요?

부사장님, 한전에서 지원합니까?

○**한국전력공사국내부사장 김시호** DR은 한전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윤한홍 위원** 그러면 정부예산으로 지원합니까? 무슨 돈으로 지원하지요?

잘못된 정책과 멸절된 원자력발전소를 세워 놓고 급전지시하면서 돈을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나중에 갚아줘야 될 돈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 정책 자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의 정책을 시행해 가지고 그게 잘못됐다고 해 가지고 또 다른 정책으로 계속 뻘뻘하는 지금 그런 식이에요. 아니, 왜 멸절된 원자력발전소 세워놓고 급전지시하면서 돈으로 다 매우시는지 나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지금 원자력발전소 가동률이 56%더라고요, 1월 달에. 1월 24일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해서 지난 여름에 두 번, 올 겨울에 열 번, 열두 번의 급전지시가 일어났습니다. 1년도 아직 안 됐습니다, 정권 출범한 지가.

아까 전에 장관님이 급전지시에 따르는 의사결정을 전적으로 민간이 결정하신다고 했는데 정부에서 지시가 내려가는데 민간에서 100%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 보상금에 대한 문제가 지금은 조용하겠지만 나중에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이 보상금이 지불되고 예산이 나갔다면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지요.

자, 그다음에 홍종학 장관님께 제가 한 가지만……

최저임금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두더지잡기 아시지요, 게임? 앞에 두더지 잡으니까 뒤에서 나오고 옆에 잡으니까 여기서 나오고 이것도 그거예요. 마찬가지로입니다. 급격하게 최저임금 올려놓고 문제가 생기니까 세금으로 중소기업에 월급을 보전해 주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보전해 주려고 했는데 기업이 신청을 안 하니까 중소기업 직원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신청하라고 홍보하신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몇 프로 신청하셨다고 했지요? 아까 전에

답변하실 때 보니까 15%라고 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며칠 전 자료가 15%가 넘는 걸로……

○**윤한홍 위원** 15%까지 올라갔습니까? 그러니까 돈 억지로 가져가라고 지금 홍보하러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하겠다?

오늘 아침에 산업부장관님께서는 어디 특강 가서서 시기 조절을 건의하겠다고 하신 발언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저희들이 1년 동안 한번 시행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윤한홍 위원** 그러면 우리 홍 장관님도 동의하십니까? 어차피 저는 이게 중소기업에서 더 주관 부서 아닌가 싶은데, 최저임금 문제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윤한홍 위원** 동의하시나요, 시기 조절 논의한다는 것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그러니까 경제상황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다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한홍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걸 또 장관님께서는 현대차그룹하고 업무협약 체결했다고 홍보하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제가 업무협약 체결했습니다.

○**윤한홍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1분만 더 주세요.

자, 이제 정부에서 세금으로 메워 주다가 안 되니까 대기업에다가 압력을 넣는 거예요. 대기업 보고 하청업체, 협력업체에다가 최저임금 올라서 잘못된 부분 중소기업 어려워하니까 보태 줘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위원님, 압력을 가한 적은 없습니다.

○**윤한홍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보면 장관님 말씀이 ‘대기업에 최저임금 인상 고통분담 계속 요구할 것’ 이렇게 발언하셨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윤한홍 위원** 그런데 고통이라는 건 무슨 고통이지요? 누가 고통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그러니까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지금 대기업이 나선 것은 저는 평

장히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보고요.

○**윤한홍 위원** 아니, 제가 언론보도를 보니까 대기업에 요구를 하신 건데 이것 최순실, 박근혜하고 똑같은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아닙니다.

○**윤한홍 위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기업에 압력 넣어 가지고 지금 최저임금정책 잘못 돼서 발생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에 돈 지원해 줘라,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잘못된 정책이 계속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작용을 가져오는 겁니다. 한 번의 거짓말이 계속된 거짓말을 가져오듯이 이게 그런 겁니다. 두더지잡기 게임으로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하나 때리면 옆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저는 장관님들께서 현장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는데 근로시간 단축 문제도 현장과 여기 계신 이야기는 다릅니다. 그것도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라고 조금 더 현장에 접근하는 정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완** 윤한홍 위원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위원장님, DR에 관한 것은 제가 답변을 조금……

○**위원장 장병완** 어떤 거요? DR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수요 감축……

○**위원장 장병완** 간단하게 하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DR은 지금……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수요 과소예측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과거 7차 전력수급계획하고 같은 모델을 사용해서 수요를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기상예측 시나리오에 의해서 전문가들이 예측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상한과였습니다. 81년 이후로 저희들이 -13℃ 미만이 5일이나 됐습니다. 그리고……

○**윤한홍 위원** 장관님, 이상한과에다가 핑계를 대시면 안 됩니다. 그것까지도 예상하셔야 되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그리고 두 번째, 원전 가동에 대한 문제는 전체 10기 중에서 3기는 예방정비입니다. 7기 같은 경우에는 첩판 녹

습 현상 때문에 안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점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최고 중요한 게 DR에 대한 경제성입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4.3GW의 DR 자원 유지비용을 동일 용량의 발전기로 한다고 그러면 3450억 정도 돈이 들어가고 그리고 DR을 이용하면 1860억 정도 돈이 들어갑니다. 경제적으로도 이번에 저희들이 DR을 10회 실시했는데 5억 정도 오히려 절감의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을 보더라도 DR은 저희들이 계속 가야 되는 방향이고.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고 지난 정부 2014년도에도 DR 제도를 시작했었습니다.

○**윤한홍 위원** 장관님, 저한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다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논쟁을 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멀쩡한 원자력발전소 세워 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안 맞습니다. 원자력발전소, 앞의 정부에서는 그렇게 고장 난 것을 돌렸다는 말씀밖에 안 됩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녹습 현상을 발견한 것은 작년도였습니다. 그랬었기 때문에…… 녹슬었는데 어떻게 계속 운영을 하겠습니까?

○**윤한홍 위원** 그것은 명분이고요 실질적으로는 맞지 않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녹슨 것을 저희들이 보수를 해서 다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윤한홍 위원** 현장의 이야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저도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완** 예.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대기업을 하도급 업체를 지원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품질이 좋아지면 대기업을 경쟁력을 높이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작용이 있고요 또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촉진을 해서 부작용을 완화하고 또 상쇄해 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한홍 위원** 그것도 답변은 되겠습니까마는……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완** 윤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 진짜 마지막 질의입니다.

조배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오랜만입니다. 새해 들어서 첫 상임위원 것 같습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새 최저임금 문제 때문에 산업계가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최저임금 문제, 근로시간 단축 문제,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반복하지는 않겠고.

단, 산자부장관님이나 중기벤처부장관님이 국무회의에서 목소리를 좀 크게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상적으로 최저임금 인상하면 좋지요. 그렇지만 시장이 감당할 수 없는 정책은 부작용이 큼니다. 그러니까 두 분께서 국무회의에서 그런 목소리를 강하게 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산자부장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한미 FTA 재개정 협상을 요구를 했고 이어서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결정했습니다. 지금 우리 산업의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산업부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의문인데요.

지금 산업부는 미국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서 WTO 제소 절차에 나설 예정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그럴 것으로……

○**조배숙 위원** 지난 10년간 미국과 진행된 WTO 제소 절차들 소요 기간 파악하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얼마 정도 걸립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지금 대체적으로 2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난번 유정용 장관 제품 관련 제소의 경우에 양자협의 요청부터 패널 보고서 채택까지 3년 이상 걸렸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세탁기 분쟁의 경우에 역시 양자협의 요청부터 패널 보고서 채택까지 또 3년 이상 걸렸거든요. 무역구제 조치를 한 분기만 적용받아도 기업 피해는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몇 년간 적용을 받는다면 우리 산업이 입을 피해는 굉장히 막대하지요.

그런데 산업부의 업무보고 자료 또 제가 요구한 산업 피해 대책 답변 자료 보면 산업부는 그냥 '피해 최소화 대책도 마련하겠다. 수출 다변화하겠다' 이런 원론적인 대답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은 수십 년간 나온 얘기거든요. 여태까지 변화가 없어요. 구체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왜 수출 다변화하겠다 했는데 여태까지 수출 다변화가 그렇게 잘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21일 날 또 전체회의가 예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때까지 구체적인 세이프가드 관련 산업 피해 지원대책을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저희들이 전체적인 피해액은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민감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밝힐 수가 없는데 의원님실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21일까지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 지금 미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가 무역전쟁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조배숙 위원 그래서 자국 산업들을 보호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외국기업에 의한 덤핑이나 불공정무역에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중소기업이 너무 리스크가 크다 그리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반덤핑 조치 등 무역구제 과정에서 소요되는 평균 대리인 선임비용이 약 2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은, 우선 무역 관련 규정이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하고, 여기에 대한 전문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어떤 대리인을 선임해야 될지 굉장히 막막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를 당해도 구제 조치를 하고 싶어도 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절박한 업계의 의견이 제출돼 있습니다. 이런 사정 알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알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현재 중기중앙회에서 대리인 선임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홍보도 부족하고 비용도…… 그리고 실적도 한자릿수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중

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구제 국선대리인 제도를 신설해서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조배숙 위원 그다음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깐 또 한 가지만……

이것은 산자부장관님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 양쪽이 생각을 하셔야 될 문제인데요. 지금 법률상 가맹사업 진흥업무의 주무 부처는 산업부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런데 프랜차이즈 육성 진흥사업은 현재 어디서 수행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저는 그 파악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작 주무 부처는 법률상 산업부인데 실제로 별도로 편성된 예산은 아주 전무하고요. 그래서 가맹사업 진흥 예산 자체가 2016년도부터는 중소기업청으로 돼 갖고 그 이전에는 있었던데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흥 업무를 전혀 못하고 있어요. 사실 이 업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는 게 어떤가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산업자원부에서 여기 관련된 직원은 딱 1명이에요. 1명이고 예산도 없어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실제로 이것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사실상 하고 있고 또 절실하게, 프랜차이즈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저희들은 이게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고 소위에서 곧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업종 규모별 종합적인 관점에서 저희들 가맹사업에 대한 정책 수립이라든지 그리고 외국에 진출하는 것이라든지 그리고 중견기업으로서의 성장 촉진 지원을 위한 산업부의 역할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저희들이 부처 간 긴밀하게 협의해서 동일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배숙 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한 게 없잖아요.

어쨌든 지금 법안을 제출했으니까…… 저희가 볼 때는 직원도 없고 예산도 없고 그러면 이것은 사실상 방기한 건데 이해관계가 있고 절실한 중소기업인 그쪽으로 해서 주무 부처를 이전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부처 간 협의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전체는 산업부가 하는 것이고 개별 중소기업은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라서 산업부와 좀 더 긴밀하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런데 프랜차이즈 사업 절대다수가 중소기업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맞습니다.

○**조배숙 위원** 이것 중견기업으로 큰 데가 별로 없어요. 없고, 절대다수는 저쪽이니까……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완** 조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의를 모두 마쳤는데요.

보충질의의를 하실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의의는 3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중기부장관님, 지금 정부가 신북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 잘 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박정 위원** 그래서 중기부 차원에서 준비 중인가요?

있으신 것은 좀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요.

중국 정부도 지금 동북3성에 대한 개발 의지가 엄청 강합니다. 그동안 발전됐던 곳이 낙후됨에 따라서 그것을 발전시킬 전략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중국 내 이미 성공한 해안지대에 대한 경험을 동북3성에다가 지도하기 위한 매칭을 시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정책적 지원으로 인프라하고 경제 제반 상황을 개선 중에 있습니다.

ppt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것처럼 80년대에는 주장삼각주를 개발했고요, 90년대는 장강삼각주를 개발했고, 그다음에 2000년대에는 북경·천진·발해만에서 정진지를 개발했습니다. 2010년부터 2025년까지가 동북3성에 대한 본격적인 개발을 하는 시기이거든요. 우리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또 일대일로에 대한 하나의, 물류부터 시작해서 축을 이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략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로는 동시에 일대일로를 서부내륙 쪽으로 해서 중서부 지역이 고속 발전할 것 같은데요.

(장병완 위원장, 이채익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 ppt요.

그래서 중국이 너무 다양한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진출에 대한 세부적인 지역의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화남부터 시작해서 개발을 했지요, 광둥 쪽에. 그래서 고급소비재 시장 진출 및 동남아시아 시장에 대한 방어라고 썼지만 사실 방어보다는 여기를 전략기지로 삼아서 아세안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구요.

또 화동 지역,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 곳들은 역시 소득 수준이 높기 때문에 고급소비재 시장을 확보하고, 일본이 이쪽에 많이 진출돼 있습니다. 일본에 대한 방어 전략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화북 북경은 중국 본부 및 전체적인 컨트롤타워에 대한 또 수도적 개념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동북3성의 개발 기회는 역시 러시아라든지 몽골이라든지 북한에 대한 극동 쪽의 시장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맞춰서 전략을 짜 주시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 중소기업부가 해외에 진출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다소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쪽 분야에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방도 그렇고 남방도 그렇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정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 위원** 김현중 본부장님, 덴마크에 갔을 때 요청 사항이 좀 있었는데요. 페로 제도 잘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중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정 위원 여기는 자치령이기 때문에 한·EU FTA에 대한 것은 예외로 돼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중 예.

○박정 위원 여기서 라스무센 총리가 강력하게 우리에게 요청이자 도와 달라고 한 이유는 거기에 수산물이 많이 나오는데 그 수산물에 대한 것들이 우리나라에 좀 들어왔으면 좋겠지만 어종이 겹치지 않는다, 주로 연어 종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연어는 다른 데서도 많이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을 열어 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거기에는 되레 필요한 부분들이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자동차라든지 전자제품 같은 게 충분히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고려를 해 주시고요.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제가 주질의 했을 때 북극항로 개발로 야말 LNG라든지 기단 LNG를 개발했을 때 하절기에는 북극항로로 들어오지만 동절기에는 역시 수에즈 운하 쪽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북극항로를 이용할 때 거점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부르게 처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FTA에 대한 것들을 요청을 받으셨나요, 덴마크에서?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중 아니요. 페로섬이 인구 4만 8000명이고 거기는 주로 어업이 핵심산업인데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특히 북극항로를 개발했을 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채익 박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읍 위원 통상교섭본부장님, 우리가 WTO 제소를 하더라도 조배숙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적어도 한 3년 정도 기간이 소요가 되고 그때는 이미 경제에 입히는 타격에 대해서는 실기한 상태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현실적으로 WTO 판정에 대해서 강제할 방법이 없다. 미국에 대해서 보복관세를 부과한다 한들 그게 조치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사

전적으로 대응을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모델케이스가 일본과 미국 간의 경제회담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루빨리 우리 정부도 그러한 핫라인을 만들어서 잘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본부장님 조금 전에 어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데 일자리 대통령이라고 주창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부 구성원이라면 정말 하서는 안 될 이야기를 하셨다. 그나마 삼성이 사우스캐롤라이나에 또 LG가 테네시주에 현지 공장을 설립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다행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요.

모든 국민들은 지금 다 깨어 있습니다. 왜 유턴을 못 시키느냐, 국민들조차도 그런 걱정을 하시는데 본부장님께서 그나마 미국 내 시장점유율이 유지될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 말씀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조금 이따가 말미에 취소하시는 게 맞다 싶습니다.

중기부장관님, 1월 소비자물가 얼마나 올랐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도읍 위원 1% 올랐거든요. 아파트 관리비가 5.3% 인상되고 외식·숙박 물가상승률도 2.8%인데요.

이것은 발표된 통계로 이렇지만 제가 며칠 전에 깜짝 놀란 게 우리 국회 의원회관 1층에 가면 아침에 라면 파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얼마 전까지 3300원 했는데 며칠 전에 가니까 3600원을 해요. 9% 올랐어요. 그래서 국회의원회관 식당을 다 알아보니까 6600원짜리는 600원을 올려서 7200원을 받고, 공히 9%를 다 올렸어요. 이게 현상입니다. 심각합니다. 여기 통계는 소비자물가 1% 상승 이래 났는데요 지금 국민들 아우성입니다. 이게 원인이 뭐냐 하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문제예요.

장관님, 요 최근에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거나 직접 독대를 하시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없습니다.

○김도읍 위원 아니,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이채익 간사, 장병완 위원장과 사회교대)

작년 12월 대비 1월 달에 일자리가 13만 3000개 줄었어요. 취업을 상징하는 고용보험 가입자

가 작년 12월 대비 1월 달에 3만 3000명이 줄었어요. 일자리가 이렇게 줄고 있는데 진짜 항간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쇼통’만 합니까? 상황판 만들어 놓고 주무 장관한테 일자리 줄어든 데 대해 질책 한 번 없고 독대 한 번 없고 뭐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독대는 아니지만 계속……

○김도읍 위원 전화받은 적도 없다면서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국무회의석상에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국무회의석상에서 그 많은 국무위원들하고…… 집중적으로 일자리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중소기업부,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일자리가 13만 개가 줄었는데 대통령께서 주무 장관한테 전화 한 통 안 하고, 상황판 뭐 하러 만들어 놔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지금 범 부처에서 일자리 종합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병완** 아무래도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고용지표는 굉장히 악화될 것이 뻔합니다, 저희들이 재계나 사람들 접촉을 해 보면, 그래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완** 다음은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올해 업무보고를 언제 하셨지요, 중기부장관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1월 18일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대통령님께 하셨나요, 아니면 총리께 하셨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총리께 드렸습니다.

○김경수 위원 올해 2월 달부터 동계올림픽도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각 부처의 일상적인 업무 진행은 총리가 총괄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총리께 업무보고를 하고,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일자리 문제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대통령께서 동계올림픽을 중심으로 하는 외교 현안에 집중을 하고 그 시기 동안에 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이 책임지고 추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한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그런데 대통령님께서 지금 일자리와 혁신 성장에 관해서는 계속적으로 챙기고 계시고요 계속 장관 워크숍이라든지 그다음에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 와중에도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범부처 간의 필요한 사업들은 대통령께서 직접 챙기시면서 해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산자부장관님, 오전에 제가 시간이 짧아서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노사정 간의 사회적 타협이 조선산업에만 필요한 게 아니고 지금 보면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도…… 이것은 중기부장관님께도 함께 해당이 되는데,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대기업의 동참 문제라든지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휴일 중복할인 문제도 있고. 노사 간에 입장이 갈리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규제혁신과 관련해서도 관련 법안들을 가지고 당·정·청 협의들을 진행하면서 대기업과 기업에서 요구하는 신산업 혁신 성장과 관련된 규제들을 어떻게 풀어 줄 건지를 정부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이런 사안들을, 예를 들어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정부가 개별적으로 풀려고 하면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노사 간에 확연하게 대립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규제혁신 등등 이런 사안들을 묶어서 노사정 간에 복원된 대화 채널에서 긴급하게 협의를 하고 그 속에서 합의 가능한 타협안들을 만들어 내는, 그러니까 장기적인 노사정 대타협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당장 현안이 되고 있는 현안들을 묶어서 일종의 소타협 형태로 타협안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산자부와 중기부장관님께서…… 산자부장관님은 이 부분은 대기업들도 동참해야만 가능한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대기업들을 접촉하고 그리고 실제 대기업들을 만나 보면 얼마든지 동참하겠다는 의사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이끌어 내느냐의 문제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타협을 만들어 가면서 상호 양보하에 문제들을 풀어 나가는 것을 시급하게 노사정위원회와

도 함께 협의해서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마찬가지로 조선산업의 경우에도 보면 성동조선도 그렇고 STX도 그렇고 채권단과 노사 간의 입장이 너무 다릅니다. 올해 수주 전망만 하더라도 수출입은행에서는 성동조선에 대해서 6척이라고 하는데 노사, 회사 측에서는 노조까지 포함해서 18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경쟁력과 관련한 여러 가지 지표들과 관련해서도 상호간의 입장 차이가 너무 확연합니다. 그리고 수주와 관련해서는 LOI라고 지금 의향서가 들어와 있는 게 12건이 있는데 수출입은행에서는 그것이 수주로 연결되는 확률이 지난 3년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4%밖에 안 된다 하는데 회사 측에 확인을 해 보면 70%가 넘는다는 거예요, 지난 5년 동안에. 이런 입장 차이가 확연히 너무 벌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 나가면서 상호간의 입장이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하고, 어떤 부분이 맞는지 또는 아니면 조정 가능한지 그런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노사와 그다음에 채권단이 함께 합의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컨설팅 결과를 만들어 내야, 저는 이 노사정 간에 협의해 나가면서 결과를 만들어 내고 그에 따른 구조조정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장관님께서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위원님 말씀에 많은 부분 공감하고 노사정위원회를 저희들이 이쪽 조선산업의 구조조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논의가 되어서 사회적으로 합의되는 그런 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완**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채익 **위원** 울산 남구갑 이채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주질의에서 원자력문화재단이 작년 11월 말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으로 사명을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때 장관께서는 ‘이 원자력문화재단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속기록을 보면 작년에 산업통상자원부 이인호 차관께서 본 위원의 질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한 소통기관으로 재편을 검토·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래 했어요.

이게 벌써 정부가 원자력문화재단에 대한 개편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됐고 지금 이것도 보니까 2017년 11월 9일 날 사명변경 이사회가 의결됐고, 2017년 11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승인을 했던 겁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은 분명히 정부의 의지대로 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지금 해야 할 얘기가 많은데, 한수원 이관섭 사장의 사임도 본 위원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의 후속 책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고 원안위원장 임명도 탈원전 하는 사람을 원안위원장으로, 김용환 위원장 후임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을 이제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보고 정말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지, 만약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한다면 훗날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엄격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분명히 제가 경고해 둡니다.

산업부장관께 하나 묻겠습니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하면 신규 원전은 백지화하고 월성 1호기를 2018년도 조기 폐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그렇게 될 때 발생하는 손실비용이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한 1조 원이 됩니다. 그리고 잔존가치가 5000억 이상이 된다고 보는데 이 책임 주체는 분명히 또 한수원이라고 답변할 것으로 저는 압니다.

지금 신고리 5·6호기 3개월 연장에 따른 총비용이 얼마나 되지요? 그때는 1000억, 한수원 이사회에서 했는데 그 이후에는 1400억 하는데 이게 얼마나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지금 그 문제는 계약의 법률적인 관계라든지 사실관계를 저희들이 다 봐야 정확하게 손실액에 대해서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주장하는 변이 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어떤 숫자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 좀 곤란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익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한수원의 자발적인 이사회 의결이라고 하면 서도 거의 정부의 결정에 따라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임 부분은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위원장 장병완** 이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송기현 위원** 중기부장관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송기현 위원** 오늘 제가 신문을 보다가 좀 이상한 것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면요. 오늘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월 고용지표·고용동향을 보고, 신문 기사가 났는데 어떤 신문은 ‘최저임금 인상이 별로 영향이 없다’ 이렇게 한 부분이 있고, 어떤 신문은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영향이 있었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각자 자기 입장에 따라서 수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실업급여 신청자가 지난해 1월에 비해서 3만 7000명이 늘었다, 이것을 가지고 최저임금 인상 효과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한쪽에서 보면 실업급여 신청이 많은 쪽이 부산·경남·울산 이쪽으로 해서 조선업 이쪽이 굉장히 많아서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아니라 그것은 자동차와 조선 산업 불황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이것을 전체적으로 봐서 평가하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게 어떻습니까? 평가해 봤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아직 처음 나왔기 때문에 자세하게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계절적 요인과 말씀하신 대로 일부 산업의 산업별 요인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송기현 위원** 아직까지 1월까지의 최저임금 인상이 실제 고용에 어떤 임팩트를 주거나, 영향을 주거나 그렇지 않은 것으로 고용동향에는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그렇지요? 장기적으로는 또 모르겠지만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송기현 위원** 산업부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송기현 위원** 잔치가 생기면 막 그냥 이놈 저놈 와 가지고 뜯어가는 사람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지요? 요즘 태양광이 좀 그런 것 같아요. 태양광을 확대한다고 그러니까 태양광에 관련된 비리가 아주 여러 개가 많이 생긴 것 얼마 전에도

신문 보도에 났지요.

종류별로 여러 개가 있는데, 한전에 담당하는 사람이 계통 연결이 안 되는 것을 계통 연결을 시켜 주고 어떤 특혜를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태양광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목을 변경해서 땅 걸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태양광 산업을 확대할수록 거기에 따라서 불법으로 거기에 편승해서 부당한 이익을 보려는 사람이 많아지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산업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더 갖고 감독을 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위원님께서 고민하시는 사항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관련 비리 주요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벌 조치하고 신청자 접수 순서도 공개하는 등 제도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태양광이 수익성이 있다라는 게 전반적으로 알려지고 더 많은 태양광들이 어떻게 보면 보급되는 현상, 많이 보급되면 또 전체적인 단가가 하락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규정에 어긋나는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엄벌백계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송기현 위원** 오히려 잔치가 벌어지면 막 이 사람, 저 사람 들어와 가지고 이것 뜯어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니까 당연한 거니까 그런 건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일벌백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완** 송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우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우택 위원** 제가 질의하기 전에 한 2~3분만 의사진행발언 조금만 하겠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장관들께서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는데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5분에 질의와 답변까지 듣는 것, 정말 저는 이게 의원 생활하면서 실속 없는 내용이다, 물론 그렇게 실속 없지는 않습니다. 위원들이 다 준비해 와서 시간을 할애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짧은 시간에 정부의 얘기를 충분히 들을 수도 없고 질문도 충분히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 답변을 하시면서 답변에 급

급한 것이 아니라 위원들 지적에 대해서, 저런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 정책을 펴는 데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가슴에 담은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컨대 여러분은 정책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 정책이 왜 중요하나면 잘못 시행착오적 정책을 하게 되면 우리 사회 전반에 이게 스며들어서 양산이 된 뒤에 고치려고 하면 피해 입은 사람들이 보상을 받는 데 굉장히 어려운, 냉혹한 현실이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 홍 장관 계셔서, 내가 면세점법까지는 얘기를 안 하겠지만 결국 그렇게 해서 2016년에 두 군데 면세점이 문 닫게 되고 2200명이 직장을 잃는 이런 사태도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위원님 그것 아닌데요.

○정우택 위원 하여튼 처음에는 그 당시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하는 것, 또 제가 보면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행안부장관이 길거리에 가서 최저임금 홍보하고 있는 이런 모습 또 장하성 실장도 가서 쇼통인지 이렇게 하는 모습, 정말 저는 코미디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을 맡으신 여러분들이 그런 책임을 갖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합니다.

오늘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 요즘 정책을 보면 체계의 많은 분들, 제가 만난 분들은 ‘국내에서 앞으로 투자와 일자리를 늘릴 이유가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정말 우리 산업부장관은 기업을 대변하는 대변인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장관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정말 기업을 위해서 내가 어려운 것을 해소하고 기업의 대리인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자세로 임하고 계신지, 저는 만약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야 제가 괜히 말씀을 드린 거지만 이왕 어렵게 국회에 나오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아까 홍 장관께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지만 제가 듣기에는 소상공인연합회라든지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지금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홍 장관 말씀을 들어보면 ‘최저임금 잘되고 있다, 이것 이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깐 보는 관점의 차이가 너무 괴리가 크다, 또 언론이나 지역구 활동하는 위원들이 보나 우리 야당 위원들이 볼 때는 굉장히 이런 갭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꼭……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답변만으로서 다는 아니라고 봅니다.

돌아가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최저임금제에 대해서는 부총리도 걱정이 많아요. 내년 예산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저희도 걱정이 많으니까 이렇게 지적에 대해서 심각하게 정책을 짜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간곡히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잡아먹어서. 제가 좀 질의 간단하게……

.....

○위원장 **장병완** 우리 두 분 장관님들과 기관장들께서도 정우택 위원님의 충언을 염두에, 가슴에 깊이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정우택 위원 감사합니다.

광물자원공사 사장님 나와 계신가요?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 **김영민** 예.

○정우택 위원 작년에 본회의에서 통과가 안 돼서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송기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걸로 아는데 당장 5월 달에 5600억 만기 도래하는 해외 금융부채 상황, 이것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채발행 여력이 2700억밖에 안 된다는데, 디폴트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 대책 하고 계시지요?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 **김영민** 예, 저희들 비상경영계획을 만들어서 그 유동성……

○정우택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하시려는 건 하시지 말고, 제가 또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비상경영계획대로 하시면 디폴트니 이런 것 걱정 없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 **김영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5월 달에 돌아오는 회사채를 차환하기 위해서 그것을 차환하는 데 중점적으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우택 위원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걱정이, 매각하려는 자산의 대부분이 해외자원개발 프로젝트 쪽에 있어서 혹시 급하니까 우량자산을 헐값에 매각하는 방향까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걱정이 돼서 내가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 **김영민** 그런 부분은 정

부와 협의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우택 위원 소위 ‘샤워실의 바보’라는 얘기 들어보셨지요?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 김영민 예.

○정우택 위원 그런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하여튼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백 장관께 여쭙보겠는데 한수원 사장 이것 언론에도 나왔지만 탈원전 인사가 낫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 인사가 낫습니까? 어떤 사람이 더 적임자라고 보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한수원의 인사에 대한 기준은 발전에 대한 전문성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경영에 대한 적합자, 지금 원론적인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고 탈원전자가 온다는 등 그런 내용은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정우택 위원 저는 장관의 소신을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사장 지금 내일 마감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저는 개인적으로 탈원전을 주장하시는 분이 한수원의 사장으로 올 수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우택 위원 탈원전을 찬성하는 사람은 좀 어렵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탈원전을 이야기 하고 원전을 운용하게 된다고 하면 그게 본인의 가치관에서도 많은 충돌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우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질의드린 것은 대통령께서 곧 상반기 중에 중동 방문하셔서 원전 문제 정상회담도 있고 그런데 3월 말에야 사장이 임명이 될 텐데 그 준비가 충분하게 잘 될지 하나 걱정이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우택 위원 또 이게 어떤 인사가 오느냐에 따라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노조 반발의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고 또 원전 위험성을 거론하면서 탈원전을 추구하는 사람이 앉았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거냐 이런 문제도 지금 심각하기 때문에 선정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임면권자님의 생각을 제가 미루어서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지금 대통령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우택 위원 국회에서 이러한 지적이 결정하시는 데…… 잘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완 정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중소기업부장관님께 질의드릴게요.

중소부에서 지난 1월 31일에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 발표하셨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그렇습니다.

○김수민 위원 본 위원도 여기 나와 있는 대책 중에 기존에 벤처 진입이 금지되어 있던 업종을 폐지하고 VC 투자진입 장벽을 낮춘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민간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업에 자율성을 부여하지 않는 부분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한 예로 P2P 대출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P2P 대출이 아주 정확하게는 중기부 소속은 아니지만 벤처와 신산업진흥의 주관 부처인 중기부에서 이미 보도자료를 통해서 핀테크 산업의 한 분야로 규정하고 벤처 캐피탈 투자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장관님께 여쭙보는 겁니다.

1월 28일에 금감원이 P2P 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는데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김수민 위원 몇 개가 있어요.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가 P2P 대출 정보중개업체 한 곳당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원래는 1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가 추가된 게 부동산 PF 및 부동산 담보대출 상품이 한도 상향에서 제외

가 되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해외 어느 국가도 사실 우리나라처럼 총액 한도, 건별 한도 규제 그리고 상품별 투자 한도를 제한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영국 미국 일본 아무 데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이유를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로는 개인들에게 중금리로 대출해 주는 것이 P2P 대출의 목적인데 부동산 담보는 업의 목적과 맞지 않다고 대답을 해 왔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전반적으로 저희 금융과 관련된 것에서 부동산업은 약간 예외적으로 지금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

○김수민 위원 제가 여쭙본 질문은 P2P 대출업의 목적이 개인들에게 중금리로 대출해 주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장관님의 의견을 여쭙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중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P2P 대출 플랫폼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은행이 신용할당으로 인수하지 않는 차입자의 신용위험을 투자를 원하는 플랫폼 이용자에게 중개를 하고 또 대출시장에서 은행과 경쟁관계를 형성해서 은행이 수행하는 금융중개 역할을 보완하고 일부 대체해 나가는 데 그 의미가 있고, 특히 해외에서는 P2P 대출 플랫폼을 지금 우리나라처럼 간접금융이 아니고 직접금융 방식으로 해서 은행보다 더 효율적으로 자금 유통 거래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단순하게 개인에게 중금리 대출을 해 주는 것 그거 하나만이 P2P 대출의 목적은 아니고 간접에서 직접으로 넘어가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금융위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해명을 한 것이 최근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강화했는데 방금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P2P 시장으로 지금 자본이 몰릴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규제를 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장병완** 1분 더 드릴게요. 마무리하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요 부동산 대출 규제와 관련되어서는 지금 금

융위에서 전반적으로 그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수민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후에 대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소관이 아니어서 대답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접적인 소관이 아니더라도 벤처와 신산업에 관해서 지금 주 부처의 장관으로 계시고 부동산 규제에 관해서 신산업이 규제를 받아야 된다는 부분에는 과열된 사회현상과 투기를 막고자 하는 정부의 움직임 때문에 향후에 크게 발전 가능성이 있는 우리 신산업이 지금 성장이 바로 막혔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지금 장관님께서 계속 벤처업계하고 간담회 진행하시면서 신산업에 관해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조정하고 계신 것 알고 있는데 지금 핀테크처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산업에 대한 행정규제나 내용과 그 방향이 정부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적용이 되어서 시장에 어떤 오용 사례로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고, 장관님께서서는 지금 혁신대책을 발표하면서 내부에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핀테크라든가 아니면 국토부의 세어카 같은 것들에서 이런 신산업에 대한 불명확한 규제들과 옹지 못한 산업에 대한 방향성과 정책에 대한 것이 이미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주관 부처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율해 가고 계신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질문의 취지를 제가 잘 알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창업기업이라든가 새로운 혁신기업에 대해서 그 기업의 입장을 다른 부서에다가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것이 저희의 일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단 우리 벤처 인프라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특히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금융위가 관리하고 있는 분야, 지금 얘기하는 핀테크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기업들이나 아니면 핀테크의 창업기업들이 저희한테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금융위한테 제

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김수민 위원** 적극적으로 제의를 하겠다는 것은 사후에 활동을 하시겠다는 것인데 제가 보는 것만 해도 지금 정부의 실행안이 앞으로 P2P 시장에 어떠한 애프터 이펙트(after effect)를 가지고 올지는 예상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그런데 기업에서 요청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먼저 나서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러면 기업에서, 민간에서 문제가 터져야만 지금 부서에서 움직인다는 말씀이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아니요, 터지는 게 아니라 기업에서 애로사항을 저희한테 얘기하면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금융위와 저희가 사전에 그런 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을 해 주시니까 제가 다시 한번 보기는 하겠습니다. 우선순위가 아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것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지금 기업에서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는 부서에서 권한이 없으니까 움직이지 않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그야말로 행정 편의주의적인 말씀이시고, 제가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충분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존재하고 또 그 부분에 관한 주관 부처인 중벤처에서는 거기에 관해서 조율할 만한 충분한 권한과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창업기업들과 아주 긴밀한 협의를 하셔서 지금 시행령이 나오기 전에 그 감도를 좀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P2P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동산 담보 대출이 얼마나 비중이 있는지를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김수민 위원** 80%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완** 정리해 주십시오.

오죽했으면 우리 금융산업 경쟁력이 아프리카보다 못하다고 그러겠습니까. 사실 우리 금융은행 손봐야 할 데가 많은데 특히 벤처 진흥을 책임지고 있는 홍 장관께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

야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완** 다음은 광대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광대훈 위원** 장관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보면 지금 현재 30년까지 92조 투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공공부문 51조. 그 51조라는 게 어떻게 나왔어요? 에너지 공기업으로부터 신·재생에너지 투자계획을 다 받아서 이렇게 51조가 나온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광대훈 위원** 장관님, 그렇지 않은데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저희들이 전체적인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의향조사서……

○**광대훈 위원** 아니, 투자계획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공공부문에 51조를 투자하겠다고 그랬는데 에너지 공기업으로부터 2030년까지 투자계획을 받아서 했느냐?

받아서 하지 않고 그냥 주먹구구로 대충 한 겁니다. 확인해 보시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수요의향조사서를 확인하고 정부예산 같은 경우에는……

○**광대훈 위원** 그러면 그것을 전부 다 자료를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광대훈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장관님, 분명히 주셔야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광대훈 위원** 그리고 한수원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발전부사장검발전본부장 전휘수** 발전부사장입니다.

○**광대훈 위원** 발전부사장이 이 내용을 아십니까? 지금 현재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에 따라가지고 지난해 10월 26일 이사회에 보고할 때 보상협의를 17년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보고했어요. 완료됐습니까?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발전부사장검발전본부장 전휘수** 제가 직접 관장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광대훈 위원** 제가 왜 그러는가 하면 아까 장관님 말씀이 안 된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것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발전부사장겸발전본부장 전취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대훈 위원 확인해 보시고.

언론에 보도되기는 그 당시에 1000억이 아니고 1300억 정도 보상 요구가 있었다 나왔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청구금액 그 관련 기업들과 협의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언제 했는지, 지금 현재 보상이 어느 정도까지 되었는지 그것도 같이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발전부사장겸발전본부장 전취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대훈 위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 지금 최저임금은 벌써 인상이 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고 대통령께서 공약을 하시고 신년사에서 얘기하셨는데 근로시간 단축이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곽대훈 위원 그래서 제가 이와 관련해서 중기부에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물어보니까 이렇게 보냈어요. 국회에 논의 중이고 동 방안이 확정되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조사하고 의견 수렴하여 지원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냈어요. 이렇게 보내도 되겠습니까?

지금 기업들이 최저임금뿐만 아니고 근로시간 단축이 지금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대통령이 공약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되었을 때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또 단축에 따라서 인력이 얼마나 더 필요한 것인지 이런 문제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기업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적극적으로 의견 듣고 지금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곽대훈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보냈어요, 지금 전혀 하지 않는 것처럼?

지금 현재는 뭘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아마 질문의 취지를 잘못 해석한 것 같습니다.

○곽대훈 위원 그러면 장관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관련 업계나 또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계획들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중소기업중앙회하고 간담회를 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건의사항들이 많이 나왔고요 저희는 그것을 관계부처에 타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곽대훈 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 중소벤처기업부의 입장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완 곽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유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동수 위원 중소벤처부장관님께 여쭙보겠습니다.

UL인증이라고 혹시 아세요? UL인증이라고, 미국에 수출하려면 전기제품이나 전자제품의 안전성에 대해서 민간 경우 같으면 굉장히 강제돼 있거든요. UL인증을 받지 않으면 미국에 수출이 안 됩니다. 중소기업들이 UL인증을 받는 곳이 유엘코리아도 있고 미국 UL 본사도 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기 드라이기를 하나 수출하려고 하면 UL인증을, 콘센트부터 전기선까지 또 안에 있는 열선까지 전체적으로 하면 한 5개 정도 된대요. 하나하나 받는 데 1000만 원, 2000만 원 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1억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UL인증만 받는 데, 수출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 차원에서 UL인증 받는 그런 정보를 공유해 가지고 중소기업들이 조립할 때, 갖다 쓸 때 ‘이것 UL인증 받은 거다’ 그러면 그것 갖다가 쓰면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게 부처를 신설하든지, 이것 굉장히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요.

올해 ‘2018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해 가지고 한 437페이지짜리 책자로 해서 중소기업들에게 나눠준 게 있습니까? 있습니까, 차관님?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예.

○유동수 위원 거기 89페이지를 보면 ‘융자제한기업’이라 그래 가지고 ‘여섯 번째, 우량기업’ 해 가지고 신용평가 BB 등급 이상은 융자제한기업

으로 명시되어 있대요. 그러면 BB 이상인 중소기업들은 지금 기존에 받던 운전·시설 자금이나 금융자금 이거 다 상환하라는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아니요, 신규 지원하는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유동수 위원 그러면 만기가 되면 상환해야 될 것 아닙니까. BB 등급 이상이 그렇게 우량한 것 아니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민간의 대출받는 시장을 보완하는 역할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민간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먼저 대출을……

○유동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강제되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유동수 위원 이게 지금 현장에서는 강제되니까, 당장 제가 아는 기업도 3억 5000 상환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소기업 우대한다고 중소기업부가 만들어졌는데 실상은 이게 옥죄는 거라는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그러면 지금 등급이 좋아진 것 같은데요?

○유동수 위원 그렇지요. 등급이 좋아졌다고 바로 자르는 게 아니라 이것도 연차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프트랜딩 할 수 있게 지원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상식적인 것 같습니다.

○유동수 위원 89페이지 확인해 보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저희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을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등급이 좋아져서, 신용이 좋아져서 올라가는 경우에 경과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지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유동수 위원 UL인증 꼭 좀 챙겨 주십시오. 경제가 어렵다면서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그것은 현재 해외 인증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안 알려져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해도 이 부분이 우리 수출을 늘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현

재 정책을 이런 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유동수 위원 중소기업이 전자제품 수출을 못 한대요 미국 쪽에 북미 쪽에, 이 제도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완** 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관 및 기관장들께서는 오늘 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소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를 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에 대해 장관 및 각 기관장들께서는 상세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산회)

○출석 위원(27인)

곽대훈	권철승	김경수	김규환
김기선	김도읍	김수민	김정훈
김종훈	박재호	박정	백재현
송기현	어기구	우원식	유동수
윤한홍	이찬열	이채익	이훈
장병완	정우택	정운천	정유섭
조배숙	홍의락	홍익표	

○청가 위원(2인)

손금주 최연혜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전문위원	이용준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관	백운규		
차관	관	이인호		
통상교섭본부장		김현중		
통상차관보		강성천		
기획조정실장		박진규		
산업기반실장		문승욱		

산업정책실장	박 건 수
에너지자원실장	박 원 주
무역투자실장	김 영 삼
자유무역협정정책관	김 정 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허 남 용
무역위원회상임위원	김 창 규
중소벤처기업부	
장 관	홍 중 학
차 관	최 수 규
기획조정실장	정 윤 모
중소기업정책실장	조 봉 환
창업벤처혁신실장	석 종 훈
소상공인정책실장	김 병 근
특허청	
청 장	성 윤 모
기획조정관	강 경 호
특허심판원장	고 준 호
한국전력공사	김 시 호
국내부사장	정 승 일
한국가스공사사장	전 휘 수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발전부장겸발전본부장	김 영 민
한국광물자원공사	문 재 도
한국무역보험공사	이 한 철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이사장겸기획본부장	김 규 옥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이 태 식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황 규 연
한국산업단지공단	김 흥 빈
이사장	문 태 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주)강원랜드대표이사	

【보고사항】

○의원 당적 변경

의원명	선거구	변경 전	변경 후	연월일
장병완	광주 동구남구갑	국민의당	민주평화당	2018. 2.7.
조배숙	전북 익산시을	국민의당	민주평화당	
손금주	전남 나주시화순군	국민의당	무소속	

○위원 개선

소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법률안	김병관	백재현	더불어 민주당	2018. 1.3.
산업·무역				

○의안 회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맹우 의원 대표발의)

(2017. 12. 22. 박맹우·조경태·김승희·박찬우·윤영석·김성찬·이채익·박완수·성일중·김한표 의원 발의)

12월 27일 회부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2017. 12. 27. 어기구·송옥주·문희상·송기현·권철승·이훈·변재일·오영훈·안민석·윤관석·유동수·박재호·조승래·박영선·박완주·김병욱·안호영·김철민·박정·원혜영·강창일·노응래·송영길 의원 발의)

12월 28일 회부됨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

(2017. 12. 28. 김병관·권철승·이원욱·송기현·박재호·박정·김병욱·홍의락·김영진·황희 의원 발의)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

(2017. 12. 28. 김병관·권철승·이원욱·송기현·박재호·박정·김병욱·홍의락·김영진·황희 의원 발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8. 12. 28. 정부 제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7. 12. 28. 황주홍·위성곤·이찬열·김관영·김수민·김경진·박지원·이동섭·정동영·유성엽 의원 발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7. 12. 28. 황주홍·위성곤·이찬열·김관영·김수민·김경진·박지원·이동섭·정동영·유성엽 의원 발의)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7. 12. 28. 황주홍·위성곤·이찬열·김관영·김수민·김경진·박지원·이동섭·정동영·유성엽 의원 발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7. 12. 28. 황주홍·위성곤·이찬열·김관영·김수민·김경진·박지원·이동섭·정동영·유성엽 의원 발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7. 12. 28. 황주홍·위성곤·이찬열·김관영·김수민·김경진·박지원·이동섭·정동영·유성엽 의원 발의)

이상 8건 12월 29일 회부됨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2017. 12. 29. 이만희·김상훈·김성원·김정재·민경욱·백승주·윤상현·윤영석·이양수·임이자 의원 발의)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2017. 12. 29. 이만희·김상훈·김성원·김정재·민경욱·백승주·윤상현·윤영석·이양수·임이자·정양석 의원 발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2017. 12. 29. 정부 제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2017. 12. 29. 이만희·장석춘·김성원·엄용수·박맹우·박대출·안상수·권석창·이종명·김태흠·이양수 의원 발의)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2017. 12. 29. 이만희·장석춘·김성원·엄용수·박맹우·박대출·안상수·권석창·이종명·이양수 의원 발의)

이상 5건 2018년 1월 2일 회부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2018. 1. 2. 이찬열·김경진·김해영·박광온·이동섭·김종희·황주홍·주승용·전혜숙·위성곤 의원 발의)

1월 3일 회부됨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 2018. 1. 3. 정부 제출)

이상 5건 1월 4일 회부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2018. 1. 5. 어기구·김한정·김경수·위성곤·신창현·김철민·김현권·권철승·박정·송옥주·문희상·박영선·백재현·이훈·권미혁·조승래·노웅래·기동민·안민석·서영교·이용득·송기현·박광온·원혜영 의원 발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2018. 1. 5. 변재일·김병욱·안규백·전혜숙·이학영·윤호중·김영호·이훈·김경협·박영선·김민기·유은혜 의원 발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2018. 1. 5. 변재일·김병욱·안규백·안호영·전혜숙·이학영·윤호중·김영호·이훈·김경협·유은혜·홍익표·박영선 의원 발의)

이상 3건 1월 8일 회부됨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2018. 1. 9. 김관영·이종걸·주승용·황주홍·박주현·최도자·박주선·이동섭·민병두·박준영 의원 발의)

1월 10일 회부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2018. 1. 10. 김철민·이개호·윤영일·정인화·이찬열·위성곤·신창현·황희·김현권·안호영 의원 발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2018. 1. 10. 김철민·이개호·윤영일·정인화·이찬열·위성곤·신창현·황희·김현권·안호영 의원 발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

(2018. 1. 10. 송기현·심기준·박정·김민기·권철승·박주민·전재수·박재호·김정우·임종성·신창현 의원 발의)

이상 3건 1월 11일 회부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

(2018. 1. 12. 김현권·유은혜·김영호·박남춘·최인호·정춘숙·정동영·위성곤·안호영·윤관식·신창현 의원 발의)

1월 15일 회부됨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 15. 윤한홍·김승희·이명수·강석진·윤영일·김종석·문진국·함진규·홍철호·김규환 의원 발의)

1월 16일 회부됨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

(2018. 1. 17. 조배숙·권은희·김광수·김종희·박준영·신용현·오세정·유성엽·이찬열·장정숙·천정배·최경환(국)·황주홍 의원 발의)

1월 18일 회부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

(2018. 1. 19. 이채익·박맹우·최연혜·윤영석·여상규·정갑윤·김한표·강길부·주호영·신보라 의원 발의)

1월 22일 회부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2018. 1. 22. 김영진·전혜숙·백혜련·김영호·윤관석·조정식·김민기·소병훈·김정우·인재근·이인영·한정애 의원 발의)

1월 23일 회부됨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2018. 1. 23. 채이배·박주현·이동섭·신용현·김종희·이용주·윤영일·오세정·김삼화·박선숙·최운열·박찬대·이학영·김성원 의원 발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2018. 1. 23. 홍익표·박재호·유동수·홍의락·이재정·어기구·이학영·박정·송기현·최인호·박홍근·김경수 의원 발의)

이상 2건 1월 24일 회부됨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2018. 1. 24. 위성곤·신창현·이찬열·윤영일·황주홍·홍문표·김현권·어기구·황영철·김철민 의원 발의)

1월 25일 회부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

(2018. 1. 25. 김정훈·윤한홍·이현승·박맹우·

박완수·유재중·김상훈·김규환·신상진·박명재 의원 발의)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

(2018. 1. 25. 박찬우·박덕흠·이명수·박명재·김태흠·송석준·이은권·정태욱·정용기·원유철 의원 발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

(2018. 1. 25. 권은희·최도자·장정숙·김동철·정동영·오세정·김삼화·김수민·이찬열·채이배 의원 발의)

이상 3건 1월 26일 회부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

(2018. 1. 26. 홍의락·유은혜·윤호중·김현권·박정·신창현·남인순·조배숙·정성호·손혜원·조정식 의원 발의)

1월 29일 회부됨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

(2018. 1. 29. 손금주·박주선·이용호·신용현·채이배·김삼화·장병완·이채익·이찬열·정운천 의원 발의)

1월 30일 회부됨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유통관리에 관한 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2018. 1. 31. 이찬열·민병두·황주홍·최도자·이동섭·강병원·홍의락·정동영·박정·백재현 의원 발의)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

(2018. 1. 31. 최연혜·곽대훈·이채익·염동열·김정재·정운천·유의동·김규환·김도읍·이진복·박명재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1일 회부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

(2018. 2. 1. 김기선·김상훈·함진규·원유철·경대수·김규환·김무성·염동열·윤상현·김도읍 의원 발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

(2018. 2. 1. 홍의락·오영훈·김성수·심기준·정성호·손혜원·조정식·김민기·신창현·윤관석·김정우 의원 발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

(2018. 2. 1. 김규환 · 김정훈 · 윤한홍 · 최연혜 ·
김순례 · 이종명 · 송석준 · 김도읍 · 김성원 ·
김기선 · 정우택 · 김종석 · 이채익 의원 발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

(2018. 2. 1. 김규환 · 광상도 · 윤한홍 · 최연혜 ·
조훈현 · 이종명 · 송석준 · 김도읍 · 김성원 ·
김기선 · 정우택 · 김종석 · 이채익 의원 발의)

이상 4건 2월 2일 회부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

(2018. 2. 2. 김기선 · 함진규 · 김규환 · 김무성 ·
염동열 · 윤상현 · 김도읍 · 이채익 · 이양수 ·
김성찬 의원 발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

(2018. 2. 2. 윤상직 · 김종석 · 이진복 · 이균현 ·
권석창 · 정진석 · 엄용수 · 전희경 · 백승주 ·
정용기 의원 발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

(2018. 2. 2. 윤한홍 · 박성중 · 김규환 · 김석기 ·
김재경 · 문진국 · 권석창 · 정갑윤 · 최연혜 ·
이명수 · 광대훈 의원 발의)

이상 3건 2월 5일 회부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18. 2. 5. 송옥주 · 황주홍 · 이철희 · 박찬대 ·
이인영 · 이용득 · 박정 · 한정애 · 서형수 ·
신창현 · 심재권 의원 발의)

2월 6일 회부됨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운
의원 대표발의)

(2018. 2. 6. 박광운 · 김혜영 · 권철승 · 최인호 ·
윤호중 · 정재호 · 전현희 · 김두관 · 김영진 ·
백혜련 · 변재일 · 신창현 의원 발의)

2월 7일 회부됨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
발의)

(2018. 2. 8. 어기구 · 김한정 · 박정 · 송옥주 ·
문희상 · 위성곤 · 이개호 · 신창현 · 김경협 ·
김철민 · 홍영표 · 강훈식 · 권미혁 · 소병훈 ·
전재수 · 박재호 · 노웅래 · 기동민 · 김상희 ·

이수혁 · 임종성 · 전현희 의원 발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

(2018. 2. 8. 최연혜 · 이채익 · 염동열 · 김정재 ·
정운천 · 유의동 · 김규환 · 이진복 · 윤한홍 ·
정갑윤 의원 발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

(2018. 2. 8. 최연혜 · 이채익 · 염동열 · 김정재 ·
정운천 · 김규환 · 이진복 · 윤한홍 · 조훈현 ·
정갑윤 의원 발의)

이상 3건 2월 9일 회부됨